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91-01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Safety Report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Safety Report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발 간 사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나타난다는 1:29:300의 하인리히 법칙. 이 법칙은 1931년 미국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산업재해 데이터를 분석하여 찾아낸 통계적 결과로, 대형사고는 예고된 재앙이며 무심코 지나친 무사안일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일상에서의 개인사고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적 위기에도 널리 인용되고 있어, 통계 데이터의 가치가 잘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사회 유지와 직결되는 영역으로, 우리나라 각 정부부처와 관련기관에서는 다양한 안전정책 수립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통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역별로 안전통계가 산재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안전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통계개발원은 우리나라 안전 현황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국민 안전증진을 위한 유용한 데이터 수요에 부응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안전통계 · 지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은 지난 보고서에 이어 새 안전지표로 구성한 두 번째 보고서입니다. 안전영역을 위해 · 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 등 4대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을 대표하는 지표의 측정 결과와 최근 추세 및 시계열 비교 결과를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지표 이해를 위한 관련 통계와 국제비교 가능한 자료도 함께 수록하여 우리나라 안전 현황을 폭넓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보다 안전한 우리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한층 더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술을 함께한 통계개발원의 민경아 사무관과 조진혜 주무관, 그리고 이 보고서의 근간이 되는 안전통계를 묵묵히 작성해주고 계신 각 기관의 통계담당자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통계개발원장 직무대리 박 상 영

Contents

PART 1 개요

1. 작성배경 및 목적 · · · · · 10
2. 안전 프레임워크 및 안전지표 · · · · · 12

PART 2 안전영역별 현황

1. 위해 · 환경요인

범죄발생률 · · · · · 17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 · · · · 18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 · · · · · 19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 · · · · 20
화재건수 · · · · · 21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 · · · · 22
온실가스 배출량 · · · · · 23
위험기상일수 · · · · · 24
미세먼지(PM2.5) 농도 · · · · · 25
대기 중 오존 오염도 · · · · · 26
1인당 일평균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 · · · 27
체내 환경유해물질(중금속) 노출 수준 · · · · 28
야간보행 안전도 · · · · · 29
사회안전 인식도 · · · · · 30

2. 취약요인

등록장애인 수 · · · · · 32
노령화지수 · · · · · 33
독거노인 비율 · · · · · 34
국내 체류 외국인 수 · · · · · 35
지니계수 · · · · · 36
실업률 · · · · · 37
범죄피해율 · · · · · 38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 · · · · · 39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 · · · 40
우울감 경험률 · · · · · 41
사회적 고립도 · · · · · 4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 · · · 43
음주운전 경험률 · · · · · 44
월간 음주율 · · · · · 45
자해 및 자살 시도 건수 · · · · · 46

3. 대응역량

경찰 1인당 주민 수 · · · · · 48
소방관 1인당 주민 수 · · · · · 49
구조 및 구급대원 1인당 주민 수 · · · · · 50
총 병원 병상 수 · · · · · 51
안전띠 착용률 · · · · · 52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 · · · · 53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 · · · · 54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 · · · · 55
아동 안전교육 경험률 · · · · · 56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 · · · · 57

4. 피해(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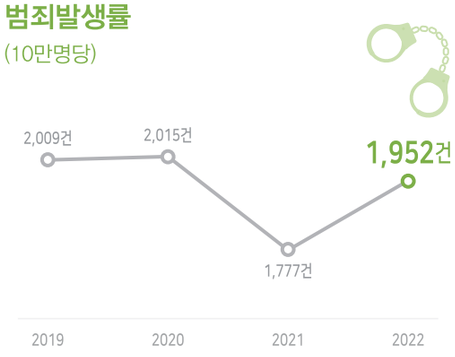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손상 사망률) · · · 59
운수사고 사망률 · · · · · 60
낙상(추락) 사망률 · · · · · 61
익수사고 사망률 · · · · · 62
가해에 의한 사망률 · · · · · 63
중독 사망률 · · · · · 64
화재 사망률 · · · · · 65
자살률 · · · · · 66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손상 입원율) · · · 67
낙상 입원율 · · · · · 68
운수사고 입원율 · · · · · 69
자연재난 인명피해 · · · · · 70
자연재난 피해액 · · · · · 71
사회재난 인명피해 · · · · · 72
사회재난 피해액 · · · · · 73
산업재해 사망률 · · · · · 74
산업재해율 · · · · · 75
보이스피싱 피해액 · · · · · 76
법정감염병 발생건수 · · · · · 77
식중독 발생건수 · · · · · 78
온열질환자 수 · · · · · 79

PART 3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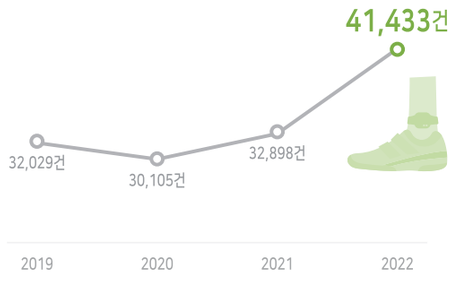
1. OECD 국제비교 · · · · · 82
2. 안전지표 자료출처 · · · · · 89
3. 참고문헌 · · · · · 99

한눈에 보는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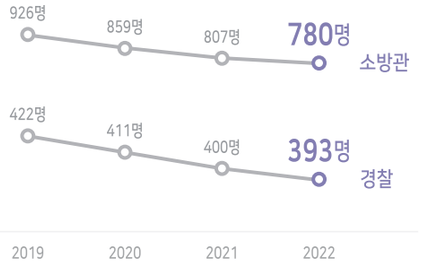
범죄발생률
(10만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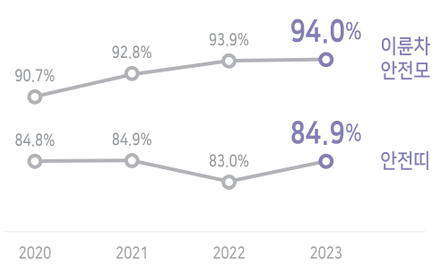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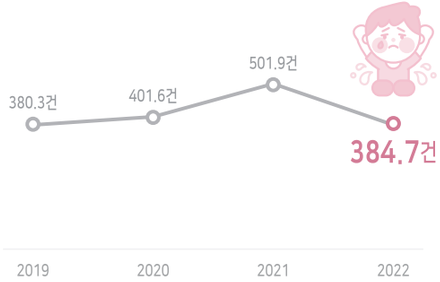
경찰 및 소방관 1인당 주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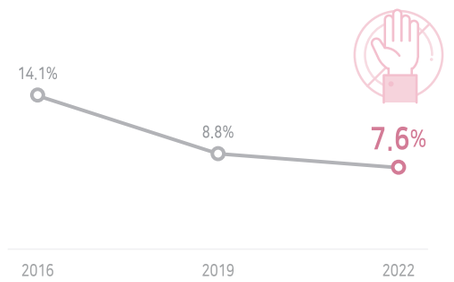
안전띠 ·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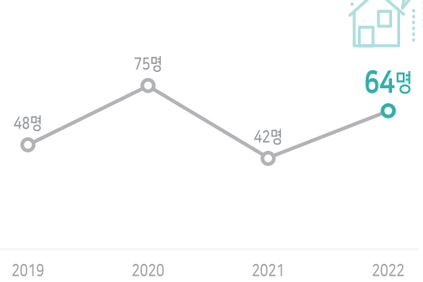
아동학대피해 경험률
(10만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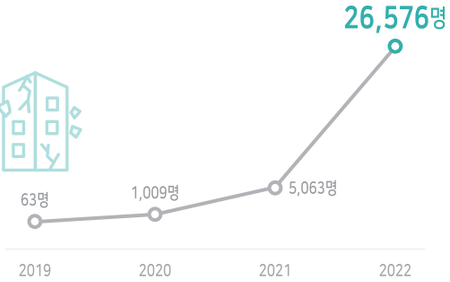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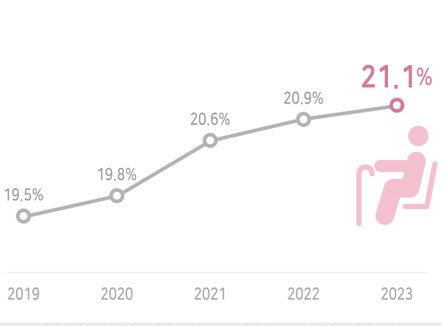
자연재난 사망(실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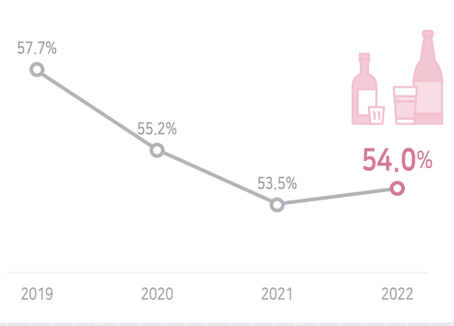
사회재난 사망(실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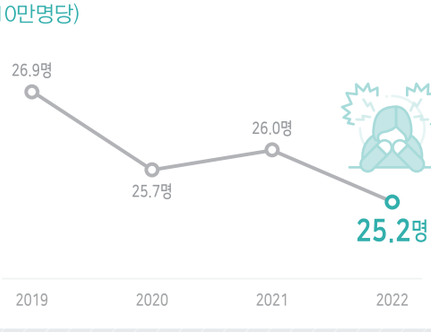
독거노인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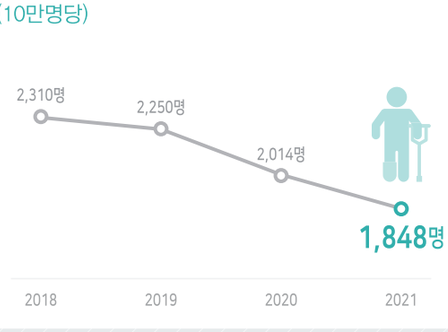
월간 음주율



자살률
(10만명당)



사고에 의한 병원 입원율
(10만명당)



PART 1
개 요

1. 작성배경 및 목적 10
2. 안전 프레임워크 및 안전지표 12

작성배경 및 목적

안전(Safety)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권을 토대로 1989년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WHO 선언[1]이 있었다. 이후 안전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보존하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과 상태가 통제되는 상태이며 또한, 개인과 지역사회가 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자원(WHO, 1998)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2015년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DR)의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SFDDR)[2]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파리기후협약과 함께 재난취약성을 저감하고 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해 개발-환경-재난관리의 통합적 접근의 국제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안전(Safety) 사고(Accident)는 손상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손상은 생물학적 혹은 물리적 손상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심리적 혹은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까지를 포함한다[3]. 2022년 질병이외의 원인, 즉 사고사 등의 손상사망자는 총 26,68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손상은 전 연령층에서 주요 조기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가능인구와 노동력 손실 등의 미래 가치적 측면에서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후변화 등의 빠른 변화 속에서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도 변화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도 커지고 있다.

1) 안전에 관련된 첫 국제회의로, 안전공동체 선언(MENIFESTO FOR SAFE COMMUNITIES)를 채택하였다. 안전증진과 안전도시 개념은 이 선언에 기초로 함
2) 2011년 발생한 일본 대지진의 주요 피해지역인 센다이시에서 2015년 열린 제3차 유엔세계재해위험경감회의에서 채택된 재난위험경감전략으로 7개 목표와 38개 지표 제시
3)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학술대회(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의 사고와 손상에 대한 용어 정리함

우리나라는 1,300종이 넘는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해 내고 있으나, 현재 안전관련 통계 및 지표가 각 분야별로 산재되어 존재하며, 각 지표의 포괄범위 또한 다양하여 안전 관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초자료 및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하게 안전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문제인식 및 위험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안전 영역의 전반을 포괄하는 안전 프레임워크 및 안전지표 개발 연구를 추진하여 『한국인의 안전보고서 2017』과 『한국인의 안전보고서 2021』을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지고 있는 재해재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보건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발효로 강화된 산업안전, 다양한 유형과 진화된 수법으로 보고되고 있는 사이버범죄 등 이전의 안전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요인과 이슈에 대응하기에는 안전지표 체계의 노후화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정책 시의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2022년에 지금의 안전지표로 개편하였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안전지표를 기반으로 국가단위의 분석보고서로 재구성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국인의 안전보고서 2023』은 새 안전지표로 구성한 두 번째 보고서이다.

한 국 의 안 전 보 고 서 2 0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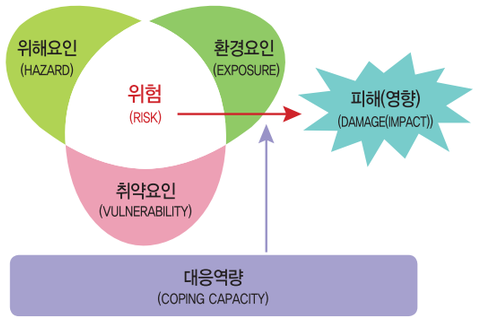
안전 프레임워크 및 안전지표

안전 개념

본 보고서에서 '안전'은 '개인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이 관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2022년 안전지표 체계 개편 연구를 통해 기존의 UN[4]과 WHO[5]에서 정의한 안전 개념을 바탕으로 하되 전통적 안전 개념에서 보다 확장하여 재정립하였다. 전통적 안전개념이라 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단순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삶의 보호'까지로 안전 포괄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써, 기후변화, 사이버안전 등 새로운 안전이슈에 대응되는 신규지표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안전지표 프레임워크

안전지표 프레임워크는 위해 · 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의 4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해요인(Hazard)은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 현상 또는 인간 활동을 의미하며, 환경요인(Exposure)[6]은 위험한 장소나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사람이나 시설의 현황을 의미한다. 위해요인과 환경요인의 일부 지표가 지표의 조작적 개념과 범위에 따라 해석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지표관리를 위해 두 요인을 '위해 · 환경요인'으로 병합하였다. 취약요인(Vulnerability)은 동일한 위해요인과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는 성질을 의미한다. 취약요인은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요인은 공간 또는 환경적인 측면을 다룬다. 대응역량(Coping capacity)은 안전한 상태를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한 사전 · 사후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난위험을 관리하거나 감소시키고 재난 발생 이후 신속한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모든 능력, 속성 및 자원의 조합을 말한다. 피해(영향)(Damage(Impact))은 위험의 부정적인 결과와 그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난사고 발생단계에서의 직 · 간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후의 중 · 장기적 영향까지 포괄할 수 있는 '영향' 개념을 도입하였다.

안전지표 체계

안전지표는 4개 영역의 60개 지표로 구성된다. 영역별로는 위해 · 환경요인 14개 지표, 취약요인 15개 지표, 대응역량 10개 지표, 피해(영향) 2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영역	세부 안전지표(60개)	
위해 · 환경요인 (14개)	1.1 범죄발생률	1.8 위험기상일수
	1.2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1.9 미세먼지(PM 2.5) 농도
	1.3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	1.10 대기 중 오존 오염도
	1.4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1.11 1인당 일평균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1.5 화재건수	1.12 체내 환경유해물질(중금속) 노출 수준
	1.6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1.13 야간보행 안전도
	1.7 온실가스 배출량	1.14 사회안전 인식도
취약요인 (15개)	2.1 등록장애인 수	2.9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2.2 노령화지수	2.10 우울감 경험률
	2.3 독거노인 비율	2.11 사회적 고립도
	2.4 국내 체류 외국인 수	2.1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5 지니계수	2.13 음주운전 경험률
	2.6 실업률	2.14 월간 음주율
	2.7 범죄피해율	2.15 자해 및 자살 시도 건수
	2.8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	

4) 안전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 권리이며, 필수조건(UN, 1994)
5)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과 웰빙(well-being)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과 상황들이 관리되는 상태(WHO, 1998)
6) 학술적으로는 '노출도(Exposure)'로 사용하지만,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의견수렴을 거쳐 환경요인으로 명명

안전영역	세부 안전지표(60개)	
대응역량 (10개)	3.1 경찰 1인당 주민 수	3.6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3.2 소방관 1인당 주민 수	3.7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3.3 구조 및 구급대원 1인당 주민 수	3.8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3.4 총 병원 병상 수	3.9 아동 안전교육 경험률
	3.5 안전띠 착용률	3.10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피해(영향) (21개)	4.1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	4.12 자연재난 인명피해
	4.2 운수사고 사망률	4.13 자연재난 피해액
	4.3 낙상(추락) 사망률	4.14 사회재난 인명피해
	4.4 익수사고 사망률	4.15 사회재난 피해액
	4.5 가해에 의한 사망률	4.16 산업재해 사망률
	4.6 중독 사망률	4.17 산업재해율
	4.7 화재 사망률	4.18 보이스피싱 피해액
	4.8 자살률	4.19 법정감염병 발생건수
	4.9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	4.20 식중독 발생건수
	4.10 낙상 입원율	4.21 온열질환자 수
	4.11 운수사고 입원율	

안전지표는 다양한 출처에서 생산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지표별로 작성주기와 공표시점, 업데이트 시기가 서로 상이하다. 안전지표별 공표주기는 1년 주기가 52개, 2년 주기가 5개, 3년이상 주기가 3개로, 전체 지표 중 매년 갱신되는 지표가 약 87%를 차지한다. 2023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였으나, 지표 시의성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이후 공표된 자료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안전지표별 작성년도는 2022년이 43개로 가장 많으며, 2023년 9개, 2021년 6개, 2020년과 2018년이 각 1개이다. 공표주기, 공표시점 등의 사유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10개의 지표는 전년도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안전지표의 구성은 전년도 보고서에 수록된 지표 구성과 동일하나,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지표의 경우 다른 지표와의 비교 편의를 위하여 기존 경찰청범죄통계(경찰청)에서 범죄분석통계(검찰청)로 자료 출처를 변경하였다.

PART 2
안전영역별 현황

제1장 위해 · 환경요인 16
제2장 취약요인 31
제3장 대응역량 47
제4장 피해(영향) 58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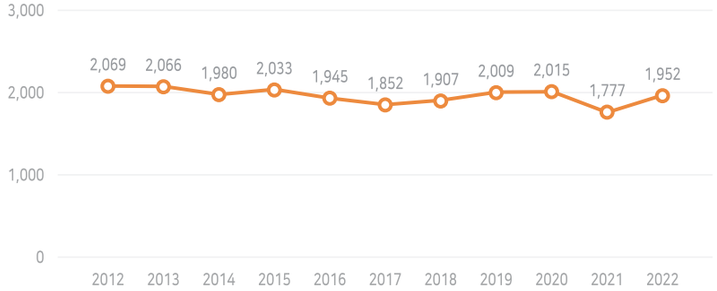
위해·환경요인

범죄발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
측정방법 (형법범죄 발생건수 ÷ 총인구) × 100,000

- 범죄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를 의미하며, 사회의 안전수준과 치안상태를 나타낸다. 2022년 우리나라 형법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1,952건으로 전년(1,777건)에 비해 175건(9.8%) 증가하였으나, 10년 전(2012년 2,069건)과 비교하면 117건(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큰 변동없이 증감을 반복하다 2022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 형법범죄의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산범죄가 인구 10만명당 1,234건으로 전년(1,114건)대비 120건(10.8%) 증가하였고, 강력범죄(흉악)가 85건으로 전년(68건)대비 17건(25.0%) 증가하였다. 또한 강력범죄(폭력)가 371건으로 전년(350건)대비 21건(6.0%) 증가하였다.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류와 관련, 2022년 마약류사범은 18,395명으로 2018년(12,613명) 대비 4년 만에 45.8% 증가하였으며, 30대이하가 전체의 59.7%를 차지하여 마약류사범의 저연령화 경향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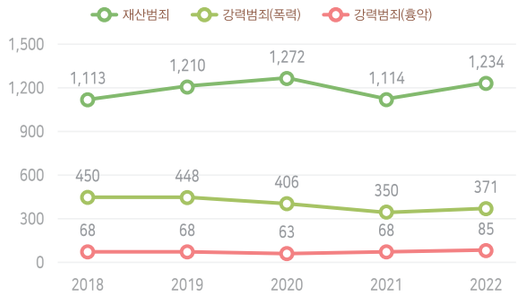
형법 범죄발생률(2012~2022)
(단위: 건/10만명)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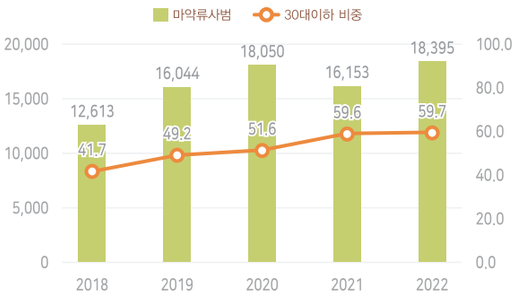
전체 범죄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모두 포함하나, 범죄발생률은 교통범죄 등이 포함된 특별법범죄는 제외하고 형법범죄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형법범죄에는 형법 각 장의 범죄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과 같은 일부 특별법이 포함된다.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률(2018~2022)
(단위: 건/10만명)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마약류사범 단속건수(2018~2022)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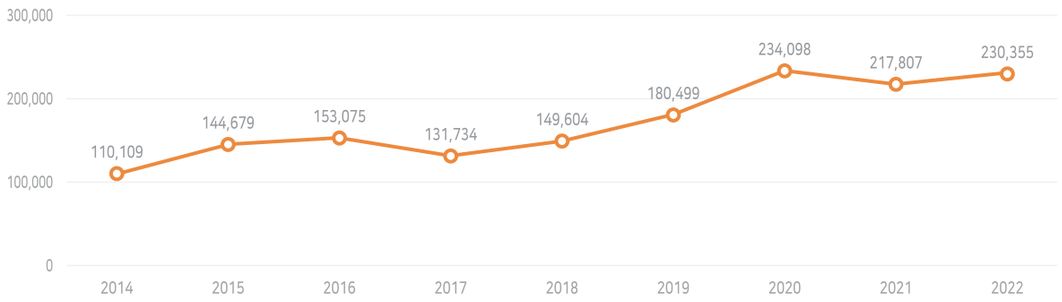
출처: 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22」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지표정의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불법콘텐츠범죄로 구분됨
측정방법 경찰청에서 집계한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및 불법콘텐츠범죄 발생건수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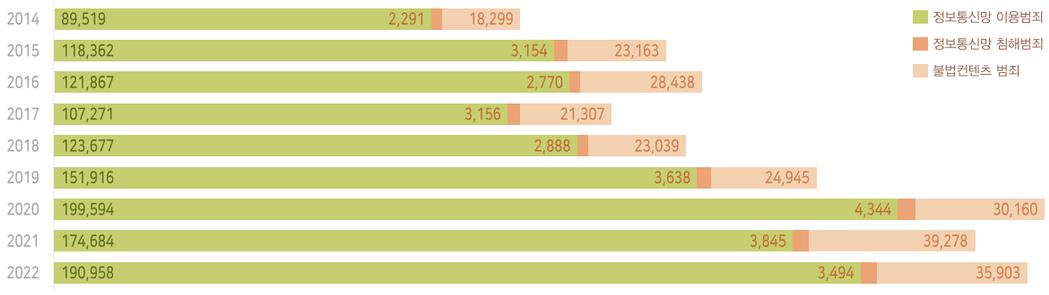
- 사이버범죄란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뜻하며, 크게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및 불법콘텐츠 범죄 등 3개 분야로 구분된다. 그중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비중이 가장 크며, 주요 유형으로는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 개인위치정보침해, 사이버저작권침해 등이 있다.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로는 해킹, DDos, 악성프로그램 등이 해당되며, 불법콘텐츠범죄로는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도박, 사이버명예훼손 · 모욕 등이 해당된다.
- 2022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30,355건으로 전년(217,807건)대비 12,548건(5.8%) 증가하였다. 불법컨텐츠 범죄는 35,903건으로 전년(39,278건)대비 3,375건(8.6%) 감소하였고,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는 3,494건으로 전년(3,845건)대비 351건(9.1%) 감소하였으나, 가장 비중이 큰 정보통신망 이용범죄(190,958건)가 전년(174,684건)대비 16,274건(9.3%) 증가함에 따라 전체 발생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하게 되었다.

사이버범죄 발생건수(2014~2022)
(단위: 건)



출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통계」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건수(2014~2022)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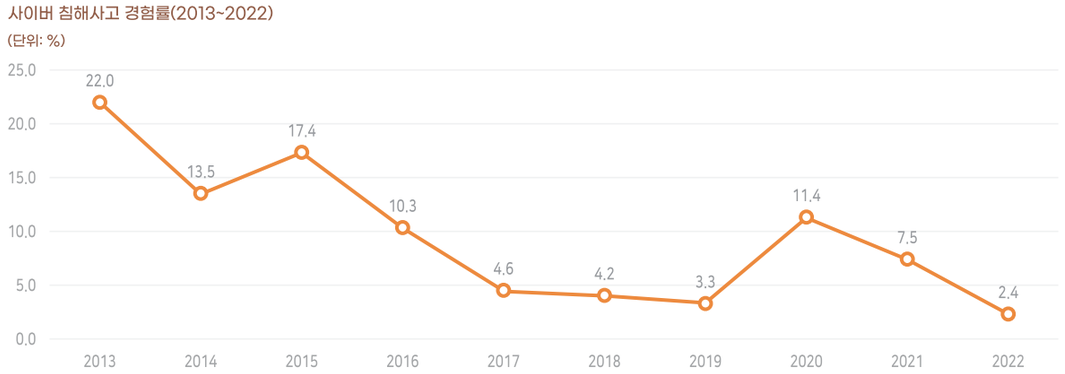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통계」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

지표정의 인터넷 이용자 중 사이버 침해사고를 경험한 비율
측정방법 인터넷 이용자(만12~69세) 중 해킹, 악성코드 감염, 피싱,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를 경험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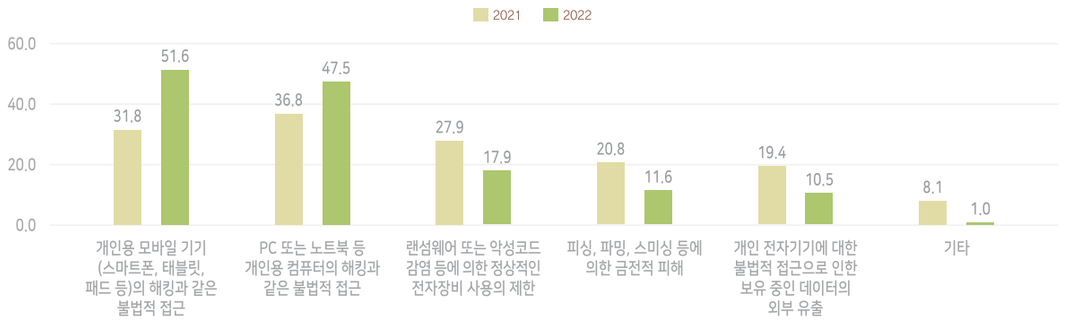
- 2022년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은 2.4%로, 전년(7.5%)대비 5.1%p 감소하였다. 침해사고 유형별(복수응답)로는 경험자 절반가량이 '개인용 모바일 기기의 해킹과 같은 불법적 접근'(51.6%)과 'PC 또는 노트북 등 개인용 컴퓨터의 해킹과 같은 불법적 접근'(47.5%)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은 모바일보다 컴퓨터 침해 경험률이 높았으나, 2022년 모바일 침해 경험률이 개인용 컴퓨터 침해 경험률을 앞질렀다.
- 정보보호와 침해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은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 11.4%로 정점을 보인 이후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2013~2022)
(단위: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실태조사」
주: 각년도 기간(1.1~12.31) 중 사이버 침해사고를 경험한 비율

침해사고 경험 유형(2021·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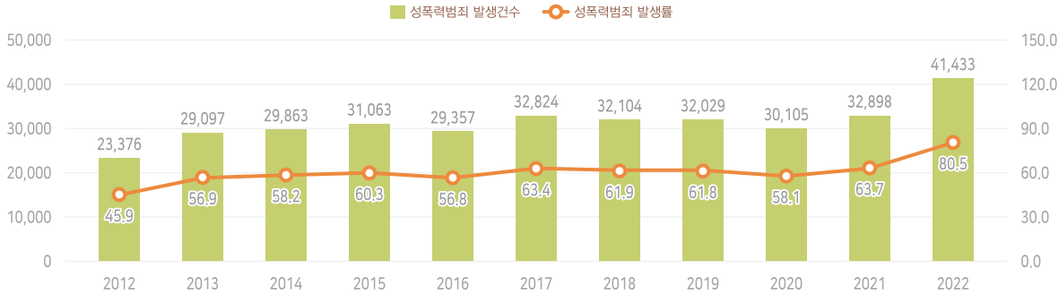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실태조사」
주: 침해사고 경험 유형 복수 응답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지표정의 연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측정방법 각년도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형사입건한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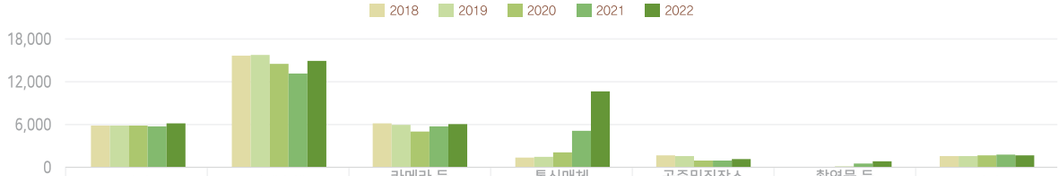
- 2022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41,433건으로, 전년(32,898건) 대비 8,535건(25.9%)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80.5건 발생하여 전년(63.7건)대비 16.8건(26.4%) 증가하였다. 성폭력 발생건수는 2016년을 제외하고는 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2018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22년에는 증가폭을 더욱 키워 4만건을 넘어섰다.
-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제추행 14,908건(36.0%), 통신매체 이용음란 10,605건(25.6%), 강간 6,177건(14.9%)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최근 성폭력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통신매체 이용음란, 촬영 또는 촬영물이용 협박 등 디지털 범죄의 증가에 기인하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피해신고의 증가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성폭력범죄 발생건수(2012~2022)
(단위: 건, 건/10만명)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주: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건수를 의미

성폭력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건수(2018~2022)
(단위: 건)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 추행	촬영물 등 이용협박·강요	기타
2018	5,826	15,672	6,085	1,378	1,609	-	1,534
2019	5,845	15,766	5,893	1,454	1,532	-	1,539
2020	5,825	14,486	5,005	2,070	906	125	1,688
2021	5,737	13,156	5,686	5,079	923	558	1,759
2022	6,177	14,908	6,082	10,605	1,150	844	1,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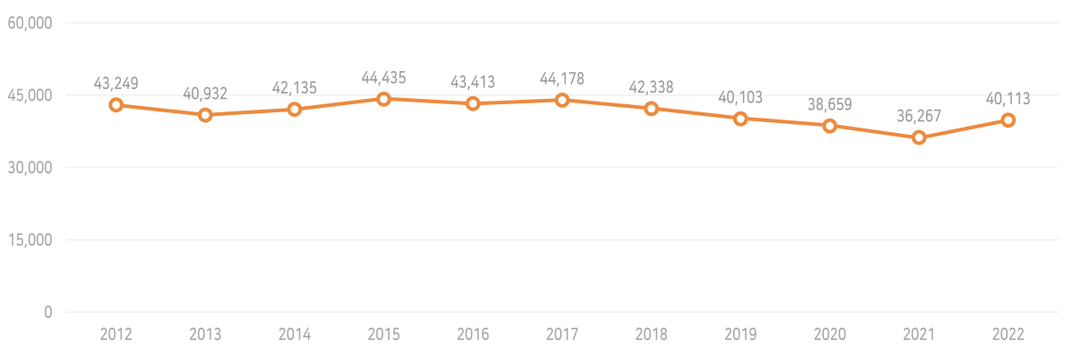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주: 기타는 '강간 등',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강도강간 등',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허위영상물 편집 · 반포 등'이 해당됨

화재건수

지표정의 연간 전국 화재사고 발생건수
측정방법 연간(1.1~12.31.) 전국 소방서 관할에서 발생하는 건축물화재, 차량, 선박, 항공기화재, 옥외화재 등 모든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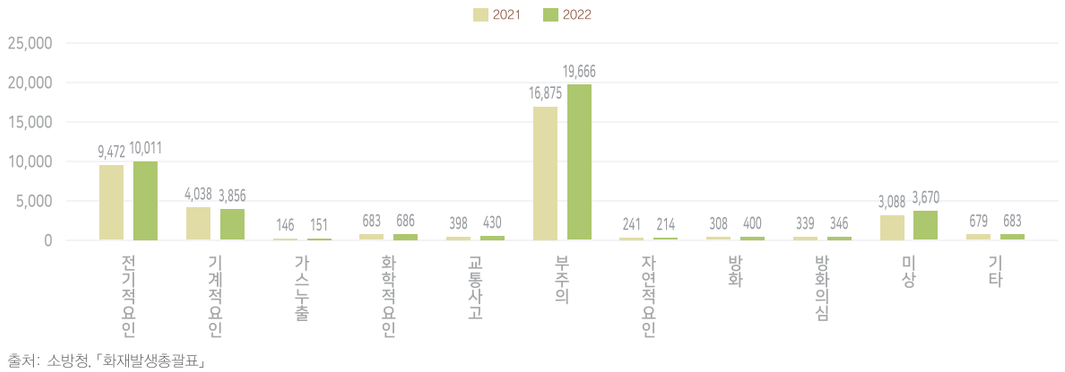
- 2022년 발생한 화재건수는 40,113건으로 전년(36,267건) 대비 3,846건(10.6%) 증가하였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연간 40~44천건의 화재가 매년 등락을 반복하며 발생하였으나, 2017년 44,178건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21년 36천건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2022년에는 전년보다 10% 이상 크게 증가하면서 다시 4만건을 넘어서게 되었다.
- 발화요인별로 살펴보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19,666건)가 전체 화재의 4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전기적요인(10,011건, 25.0%)과 기계적요인(3,856건, 9.6%)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전년(16,875건)보다 2,791건(16.5%) 증가하여 전체 화재건수 증가를 견인하였다.

화재건수(2012~2022)
(단위: 건)



출처: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발화요인별 화재건수(2021·2022)
(단위: 건)



출처: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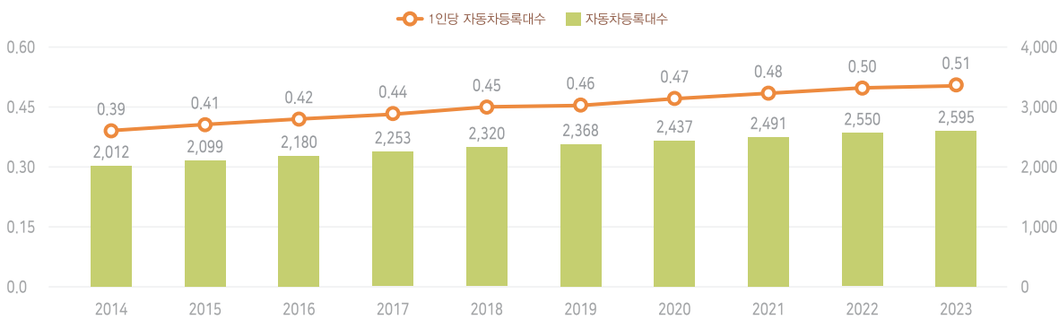
지표정의 인구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누적 자동차 등록대수 ÷ 총인구(주민등록인구)

-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3년 2,595만대로 전년(2,550만대)대비 1.8%(45만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0.51대로 전년(0.50대)대비 0.01대(2.0%) 증가하였다.
- 그간 경제성장에 힘입어 1985년 100만대를 돌파한 자동차 등록대수는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뿐만 아니라 배출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운행제한 등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친환경자동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친환경(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12만대로 전년(159만대)대비 53만대(33.3%) 증가하였고, 전체 등록자동차 중 8.2%를 차지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201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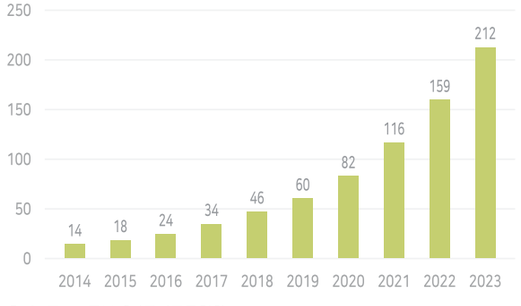
(단위: 대/인, 만대)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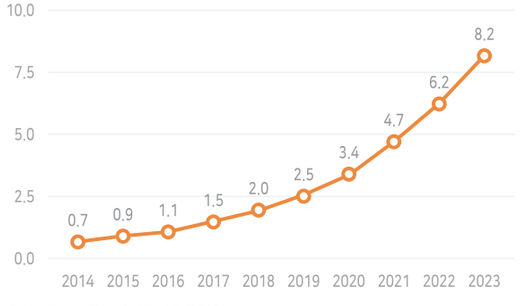
친환경 자동차 등록현황(2014~2023)

(단위: 만대)



친환경 자동차 점유율(2014~2023)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주: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합계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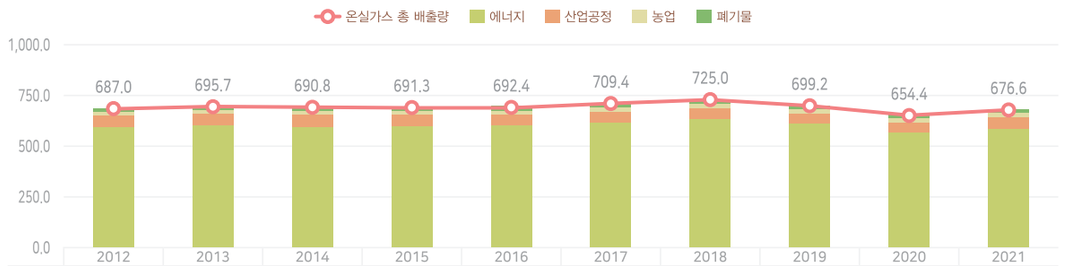
지표정의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한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 총량

측정방법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계

- 2021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76.6백만톤으로 전년(654.4백만톤)보다 22.2톤(3.4%)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춤했던 이동 수요와 산업활동의 회복으로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3.1톤으로 전년(12.6톤)대비 0.5톤(4.0%) 증가하였다. 국내총생산액(GDP)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10억원당 352.7톤으로 전년(355.8톤)대비 3.1톤(0.9%)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1년 국내총생산(실질성장률)이 전년대비 4.3%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량(2012~2021)

(단위: 백만톤 CO2 e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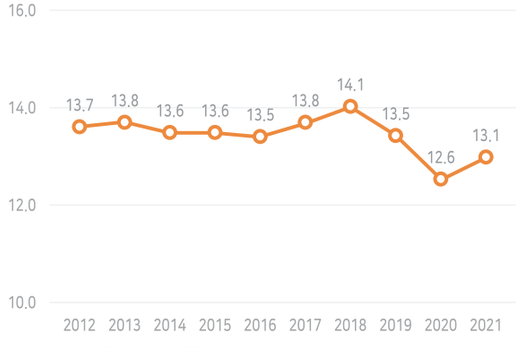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에 너 지	595.0	602.9	595.6	599.0	601.0	614.4	630.7	609.6	568.1	587.7
산업공정	54.4	55.1	57.9	54.5	53.5	56.5	55.8	52.2	48.5	51.4
농 업	21.5	21.3	21.4	21.0	20.8	21.0	21.1	21.0	21.2	21.4
폐 기 물	16.1	16.4	15.8	16.9	17.2	17.6	17.4	16.5	16.7	16.1

출처: 환경부, 「국가온실가스통계」
주: 톤 CO2 eq.: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가스 등의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배출량 단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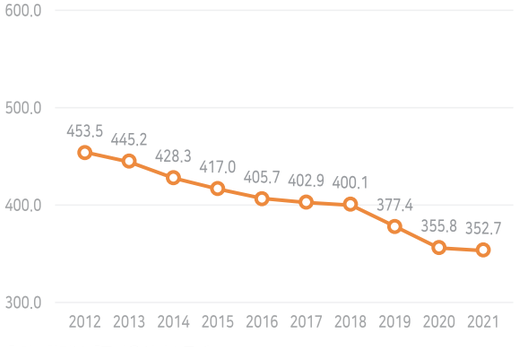
(단위: 톤 CO_2 eq./인)



출처: 환경부, 「국가온실가스통계」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2012~2021)

(단위: 톤 CO_2 eq./십억원)



출처: 환경부, 「국가온실가스통계」

위험기상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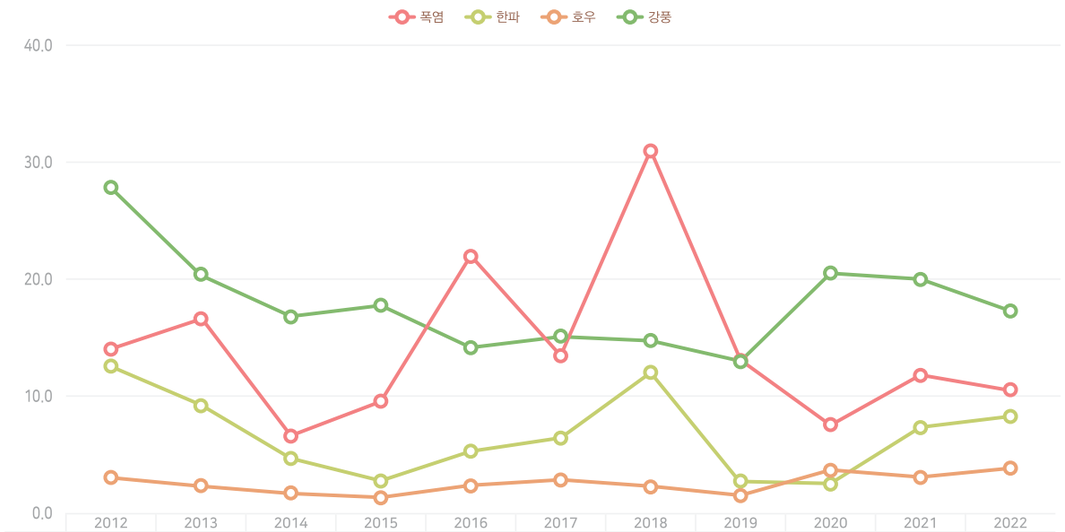
지표정의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가 평년값대비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이상기후를 보인 강풍, 폭염, 한파, 호우 일수

측정방법 폭염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일수, 한파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일수, 호우는 시간당 강우량이 30mm 이상인 일수, 강풍은 최대풍속이 14m/s 이상인 일수

- 지구온난화로 기온, 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년값대비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 2022년 폭염일수는 10.6일로 전년(11.8일)대비 1.2일(10.2%) 감소하였다. 폭염일수의 감소로 2022년 폭염 사망자(34명) 역시 전년(39명)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8년(31.0일)으로 폭염에 의한 사망자가 48명 발생한 바 있다.
- 강풍일수는 17.3일로 전년(19.9일)대비 2.6일(13.1%) 감소하였다. 반면, 한파일수는 8.3일로 전년(7.2일)대비 1.1일(15.3%) 증가하였고, 호우일수는 3.8일로 전년(3.0일)대비 0.8일(26.7%) 증가하였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호우일수가 3일 미만이었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으로 3일 이상의 호우일수를 기록하였다.

위험기상일수(2012~2022)

(단위: 일)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폭염	14.0	16.6	6.6	9.6	22.0	13.5	31.0	13.1	7.7	11.8	10.6
한파	12.5	9.2	4.6	2.7	5.2	6.3	12.0	2.7	2.5	7.2	8.3
호우	3.0	2.4	1.7	1.3	2.3	2.8	2.2	1.5	3.6	3.0	3.8
강풍	27.8	20.5	16.8	17.8	14.1	15.2	14.8	13.0	20.6	19.9	17.3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종합기후변화감시정보」
주: 폭염은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인 일수, 한파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의 일수, 호우는 시간당 강우량이 30mm이상인 일수, 강풍은 최대풍속이 14m/s 이상인 일수

미세먼지(PM2.5) 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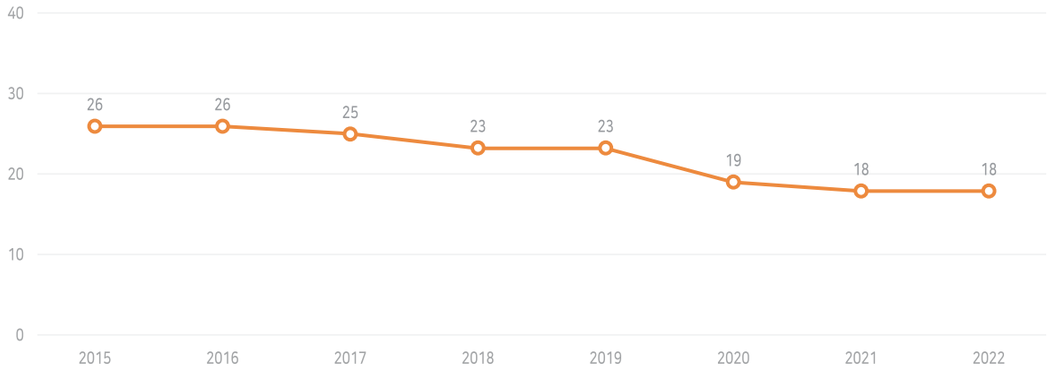
지표정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지름 2.5㎛ 이하의 먼지)의 농도로 측정

측정방법 17개 시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인구 가중한 평균값

- 미세먼지는 숨 쉴 때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인체 내부까지 침투하여 단시간 흡입으로는 신체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나, 장기적 · 지속적 노출시 각종 질병이 유발될 수 있어 대기오염에 의한 대표적인 환경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폐포까지 침투할 만큼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PM2.5)는 아동, 노약자, 기저질환자 등의 취약계층 보건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2020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에 의거하여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 2022년 미세먼지 농도는 18㎍/㎥로 전년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2015~2019년 사이 23~26㎍/㎥ 내외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왔으나, 2020년부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차량 이용의 감소와 사업장 가동률이 낮아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미세먼지(PM2.5) 농도(2015~2022)

(단위: ㎍/㎥)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주: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17개 시도의 미세먼지(PM2.5) 농도를 인구 가중평균하여 합산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발령 기준(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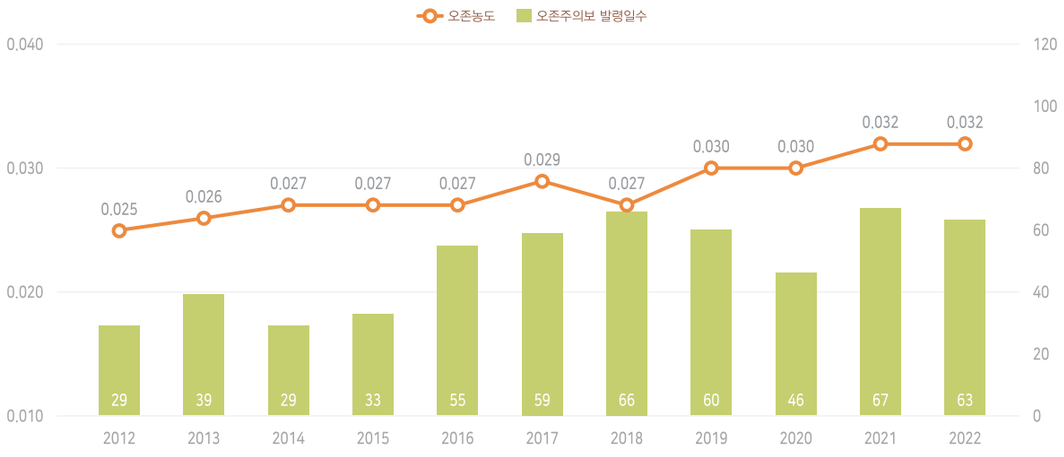
단 계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 심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 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주 의	150㎍/㎥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 계	200㎍/㎥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 각	400㎍/㎥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대기 중 오존 오염도

지표정의 연간 대기 중 평균 오존(O_3) 농도
측정방법 자외선광도법(U.V Photometric Method)으로 측정된 연간 평균 오존(O_3) 농도

- 대기 중 오존(ozon, O3)은 적당량이 존재할 경우 강력한 산화력으로 살균, 탈취작용을 한다. 그러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폐기능 저하를 유발하거나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는 유독물질이 된다.
- 2022년 대기 중 오존 오염도는 0.032ppm으로 전년(0.032ppm) 수준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2년 0.025ppm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는 0.030ppm을 넘어섰으며, 최근까지도 0.030ppm 이상을 상회하여 완만한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오존 오염도가 일정기준을 상회할 경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간당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이면 오존주의보, 0.3ppm이상은 경보, 0.5ppm 이상은 중대경보에 해당된다. 1995년 7월 서울지역에서 오존경보제를 시범 실시 이후 17개 시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경보나 중대경보는 한번의 발령도 없었다. 2022년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63일로 전년(67일)대비 4일(6.0%) 감소하였다.
- 오존은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태양광선과 반응하면서 생성되므로, 햇빛이 강한 여름철 오후에 특히 많이 발생한다. 최근 5년(2018년~2022년) 중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의 장마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존주의보가 60일이상 발령되어 오존에 의한 대기오염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기 중 오존농도와 오존주의보 발령일수(2012~2022)
(단위: ppm,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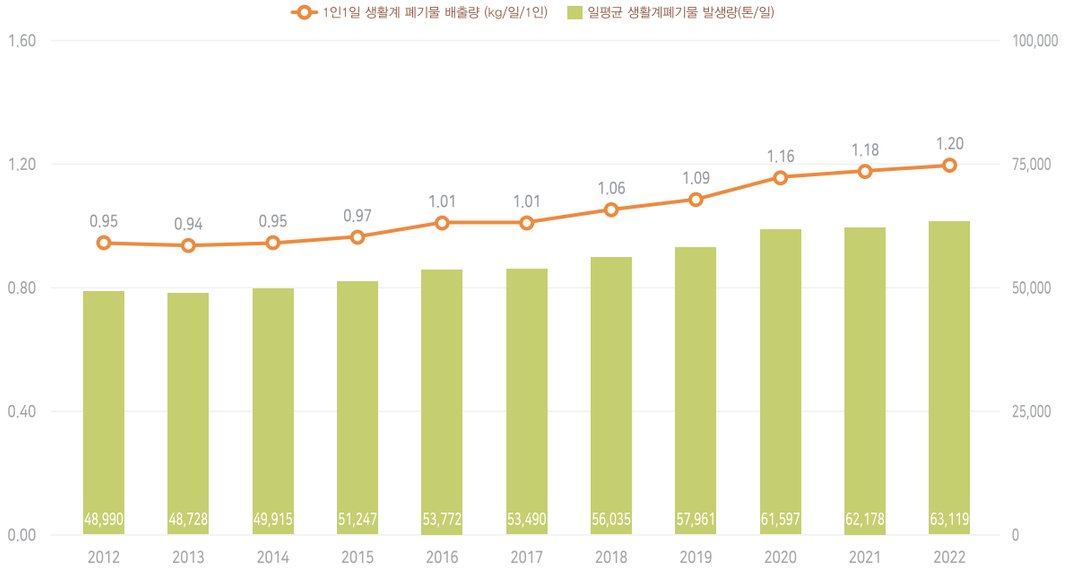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주: 오존경보제 시행 이후 오존경보 발령 사례는 없으며, 주의보 발령만 시행됨

1인당 일평균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지표정의 1인당 하루평균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
측정방법 연간 생활계 폐기물(생활폐기물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량 ÷ 총인구(장래추계인구) ÷ 365

- 생활계 폐기물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작업, 공사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의미한다.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는 별도의 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 즉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 해당된다. 폐기물의 증가는 매립 · 소각 · 해양투기 등 처리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와도 연계되므로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 2022년 우리나라 1인당 일평균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1.20㎏으로 전년(1.18㎏)대비 0.02㎏(1.7%) 증가하였다. 일평균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63,119톤으로 전년(62,178톤)대비 941톤(1.5%) 증가하였는데, 2020년 6만톤을 넘어선 이후 매년 1천톤 내외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등이 시행되면서 택배 및 배달서비스 이용이 폭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포장재 관련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2012~2022)
(단위: ㎏/일/1인, 톤/일)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생활계 폐기물= 생활 폐기물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체내 환경유해물질(중금속) 노출 수준

지표정의 우리나라 국민의 체내 환경오염물질(납, 수은, 카드뮴) 노출 수준
측정방법 성인 기준 혈액 및 소변 검사에 의한 납, 수은, 카드뮴 농도의 평균

- 정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3년 단위로 국민을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환경유해물질 농도 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거쳐 환경유해물질의 노출수준, 원인, 경로의 현황 파악 등을 분석한다.
- 환경유해물질 중에서도 특히,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나 중금속 화합물에 노출되어 체내에 축적되어 나타나는 중금속 중독의 경우 직·산업적 또는 지역적 중독사고 발생에 의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납은 뼈에 침착되는 만성 중독을, 수은은 중추신경장애인 미나마타병을, 카드뮴은 신경장애인 이타이이타이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 제4기(2018~2020년)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에서 성인의 혈액 중 납 농도는 1.51㎍/dL로 이전 조사(제1기~제3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혈액 중 수은의 농도는 2.96㎍/L으로 제3기(2.75㎍/L)보다 0.21㎍/L 증가하였다. 성인의 소변 중 카드뮴 농도는 0.35㎍/L로 제3기(0.36㎍/L)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체내 환경유해물질(중금속) 농도
(단위: ㎍/dL,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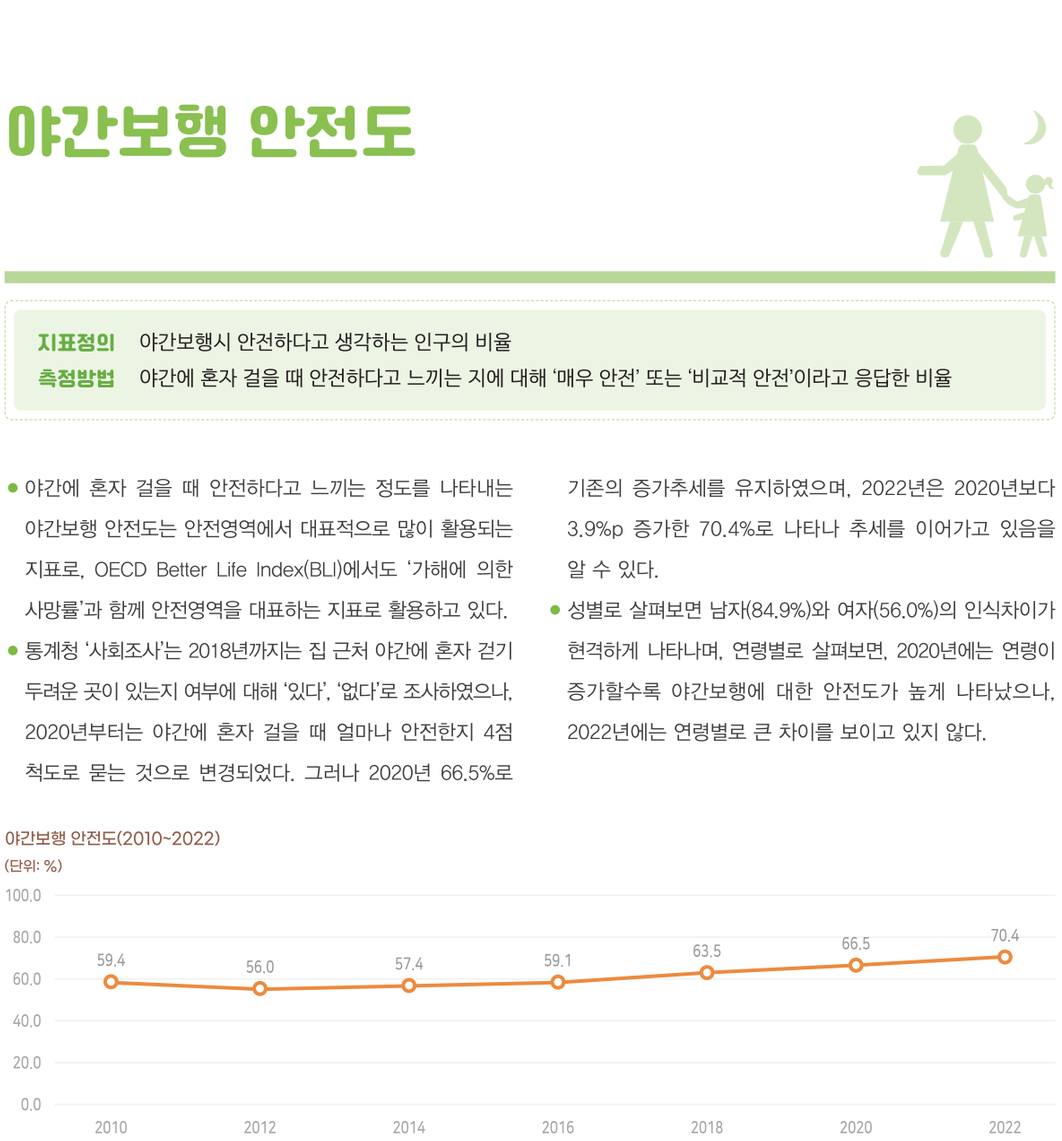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주: 성인 기준 수치로, 납과 수은은 혈액 중 농도이며 카드뮴은 소변 중 농도임
생체시료자료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skewed) 분포를 하고 있으므로 로그변환을 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 그 값을 자연로그의 지수로 하는 기하평균을 대표값으로 제시함

야간보행 안전도

지표정의 야간보행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방법 야간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에 대해 '매우 안전' 또는 '비교적 안전'이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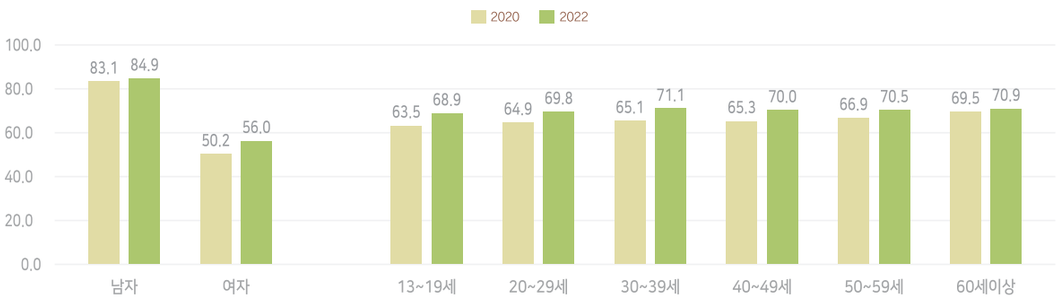
- 야간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야간보행 안전도는 안전영역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지표로, OECD Better Life Index(BLI)에서도 '가해에 의한 사망률'과 함께 안전영역을 대표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 통계청 '사회조사'는 2018년까지는 집 근처 야간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있다', '없다'로 조사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야간에 혼자 걸을 때 얼마나 안전한지 4점 척도로 묻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2020년 66.5%로 기존의 증가추세를 유지하였으며, 2022년은 2020년보다 3.9%p 증가한 70.4%로 나타나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84.9%)와 여자(56.0%)의 인식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2022년에는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야간보행 안전도(2010~2022)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18년까지는 집 근처에 밤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있는지에 대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됨
2010년까지는 15세이상, 2012년부터는 13세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성별·연령별 야간보행 안전도(2020·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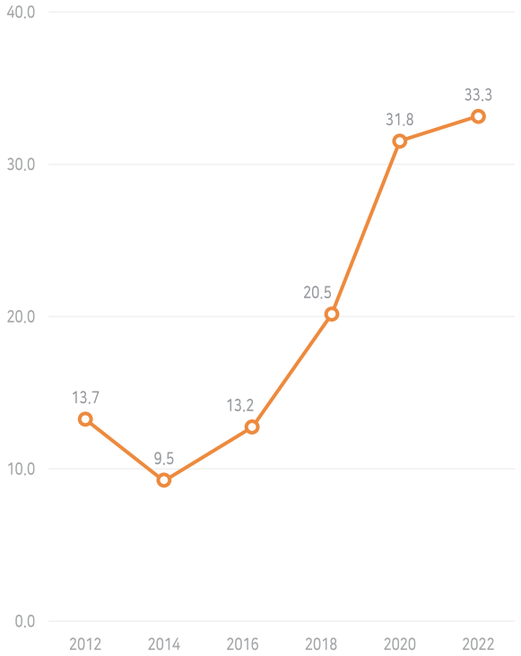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사회안전 인식도

지표정의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
측정방법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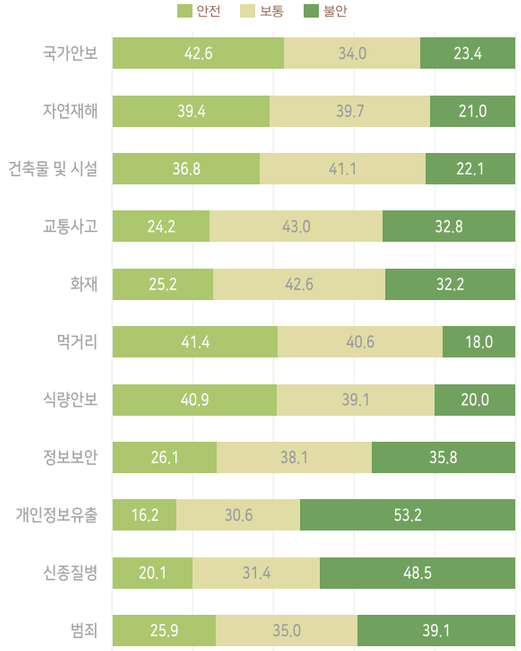
- 사회안전 인식도는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하여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안전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2022년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33.3%로, 2020년 31.8%보다 1.5%p 증가하였다.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2012년 13.7%에서 2014년 9.5%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2020년(31.8%) 급격하게 다시 증가하였다. 2014년은 '세월호 사고'(2014년 4월)에 의한 영향이,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감염병 방역체계를 유지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국가안보(42.6%), 먹거리(41.4%), 식량안보(40.9%) 순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으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항목은 개인정보유출(53.2%), 신종질병(48.5%), 범죄(39.1%) 순으로 나타났다. 신종질병의 경우 2020년(52.9%)보다는 감소하였지만, 다른 항목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사회안전 인식도(2012~2022)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10년까지는 15세이상, 2012년부터는 13세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세부항목별 안전과 불안에 대한 인식(2022)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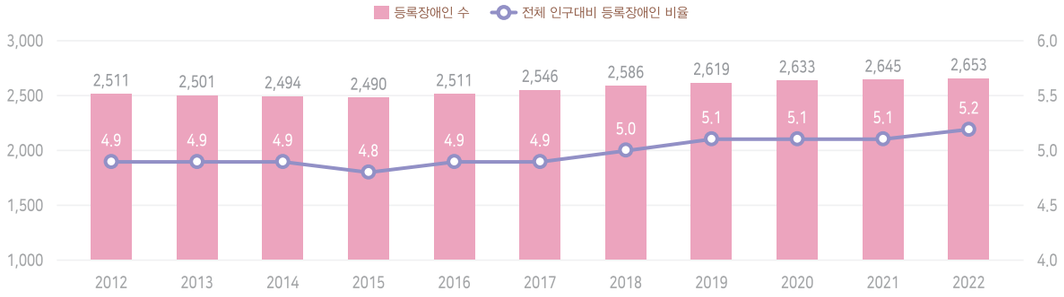
취약요인

등록장애인 수

지표정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 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장애인 등록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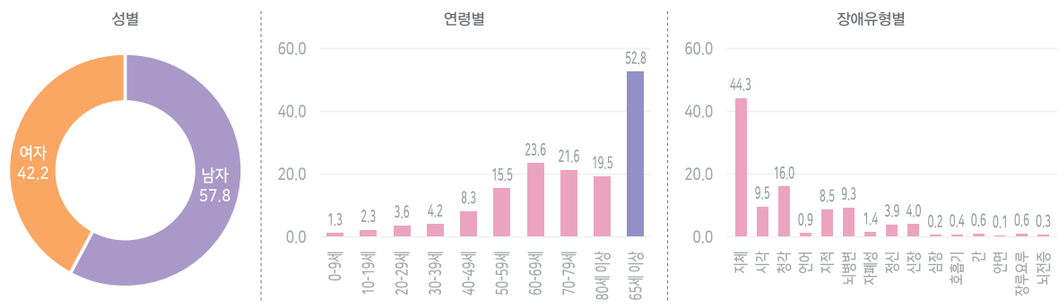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 · 심리 · 사회적 취약 정도가 높아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이동제약, 정보접근성 한계,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에 따라 안전사고 취약성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
- 2022년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65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해당하며, 전년(2,645천명)대비 8천명(0.3%) 증가하였다.
- 성별로 보면 남자가 57.8%로 여자(42.2%)보다 많으며, 연령별로는 60~69세(23.6%), 70~79세(21.6%), 80세이상(19.5%), 50~59세(15.5%) 순으로 많으며, 전체 장애인의 52.8%가 65세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44.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청각장애(16.0%), 시각장애(9.5%), 뇌병변장애(9.3%), 지적장애(8.5%)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수(2012~2022)
(단위: 천명, %)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성별·연령별·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구성비(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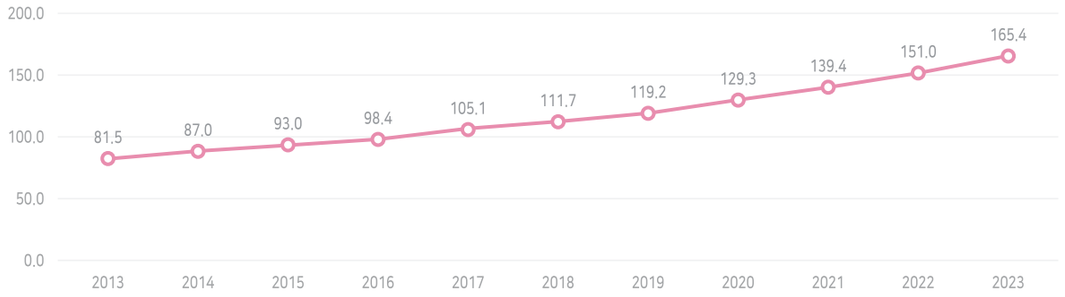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노령화지수

지표정의 유소년(0~14세) 인구 100명당 노인(65세이상) 인구
측정방법 (노인(65세이상) 인구 ÷ 유소년(0~14세) 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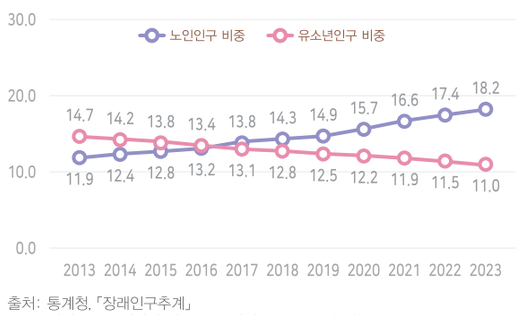
- 노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장애인, 어린이, 저소득층 등과 함께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되어, 안전정책 서비스의 우선지원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노령화지수는 유소년(0~14세)인구 100명당 노인(65세이상) 인구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령화지수가 높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담과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 2023년 유소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는 165.4명으로 전년 (151.0명)보다 14.4명 증가하였다. 2013년 81.5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2배가 넘는 수치이다. 2016년까지는 노인인구보다 유소년인구 비중이 더 컸다. 그러나, 2017년부터 노인인구 비중이 유소년인구 비중보다 높아지면서 노령화지수가 100을 넘어서게 되었고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생산연령(15세~64세)인구 100명당 노인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저출생 ·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령화지수(2013~2023)
(단위: 명/유소년인구 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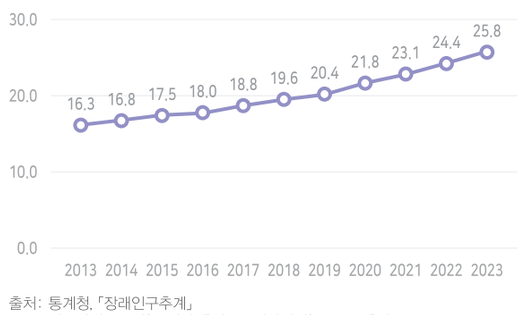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노인인구와 유소년인구 비중(2013~2023)
(단위: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노인인구= 65세이상 인구, 유소년인구= 0~14세 인구

노년부양비(2013~2023)
(단위: 명/생산연령인구 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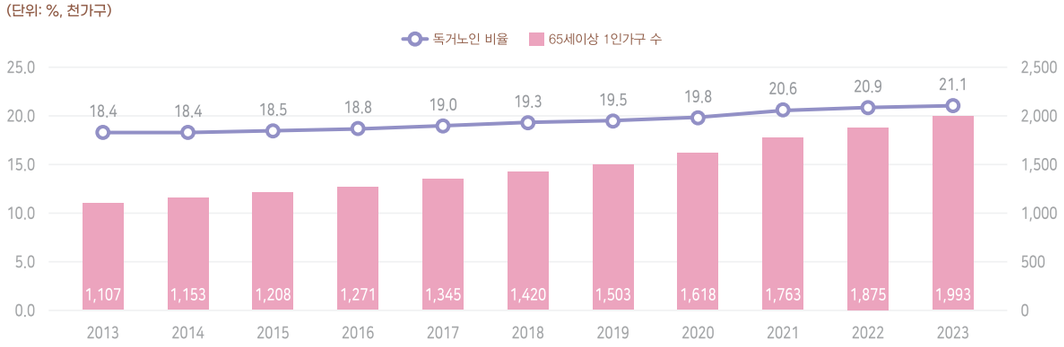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노년부양비= 노인(65세이상)인구÷생산연령(15~64세)인구 ×100

독거노인 비율

지표정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혼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방법 (65세 이상 1인가구 수 ÷ 65세 이상 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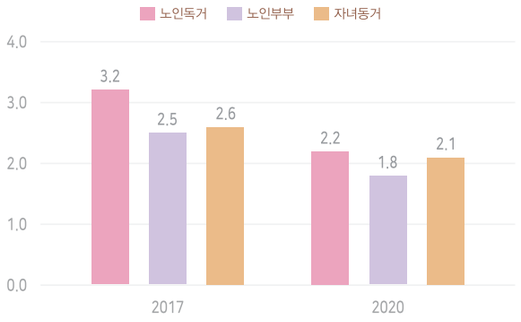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생 ·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노인정책에 대한 많은 변화 요구와 함께 각종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 2023년 65세이상 인구 중 독거노인 비율은 21.1%로 노인인구 5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으며, 그 비율도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 가구수는 1,993천 가구로 10년 전인 2013년(1,107천 가구)대비 80.0% 증가한 수준이다. 독거노인은 노인부부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보다 더 많은 만성적인 질환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은 신체건강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립감과 외로움에서 오는 정신건강도 매우 취약하므로 사회안전망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

독거노인 비율(2013~2023)
(단위: %, 천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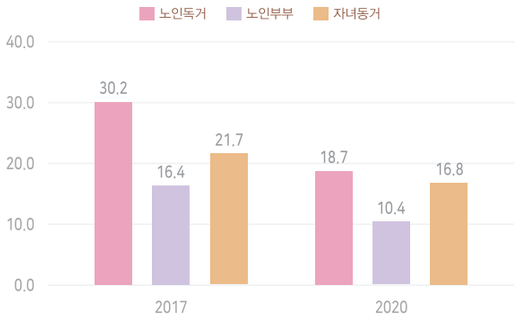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년 기준)」, 「장래가구추계(2020년 기준)」
주: 독거노인 비율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

노인가구 형태별 만성질병 개수(2017·2020)
(단위: 개)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주: 만성질병 개수는 의사 진단을 받은 질병 기준

노인가구 형태별 우울증상 경험률(2017·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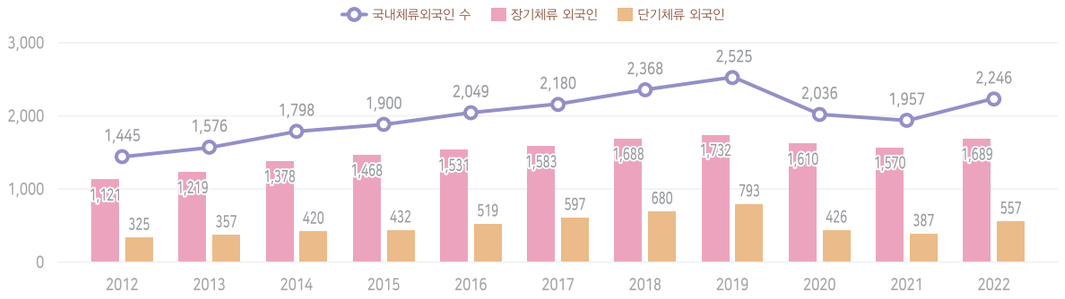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국내 체류 외국인 수

지표정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장기체류 외국인과 단기체류 외국인 수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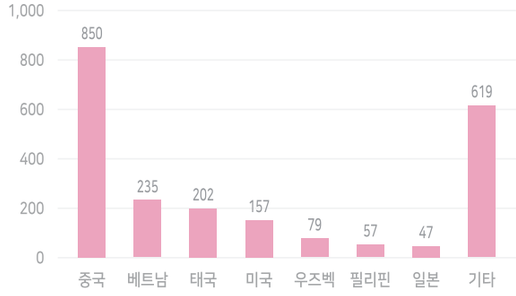
-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매년 말 기준으로 국내 단기(90일 이내) 또는 장기체류(90일 초과) 중인 외국인 수의 합으로, 사회통합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 2022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246천명으로 전년(1,957천명) 대비 14.8% 증가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 등 단기체류 외국인이 전년대비 43.9%의 큰 증가폭을 보였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체류 외국인 수는 2020년 코로나19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2016년 이전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022년 국가간 이동제한이 완화되면서 다시 증가하였다.
- 체류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37.8%(850천명)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 10.5%(235천명), 태국 9.0%(202천명), 미국 7.0%(157천명), 우즈베키스탄 3.5%(79천명), 필리핀 2.5%(57천명), 일본 2.1%(47천명) 순이었다. 불법체류자는 2012년 178천명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 411천명으로 나타나 10년동안 2배이상 증가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2012~2022)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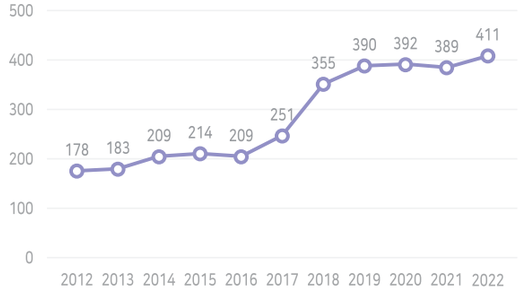
출처: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주요 국적별 체류외국인 수(2022)
(단위: 천명)



출처: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불법체류자 현황(2012~2022)
(단위: 천명)



출처: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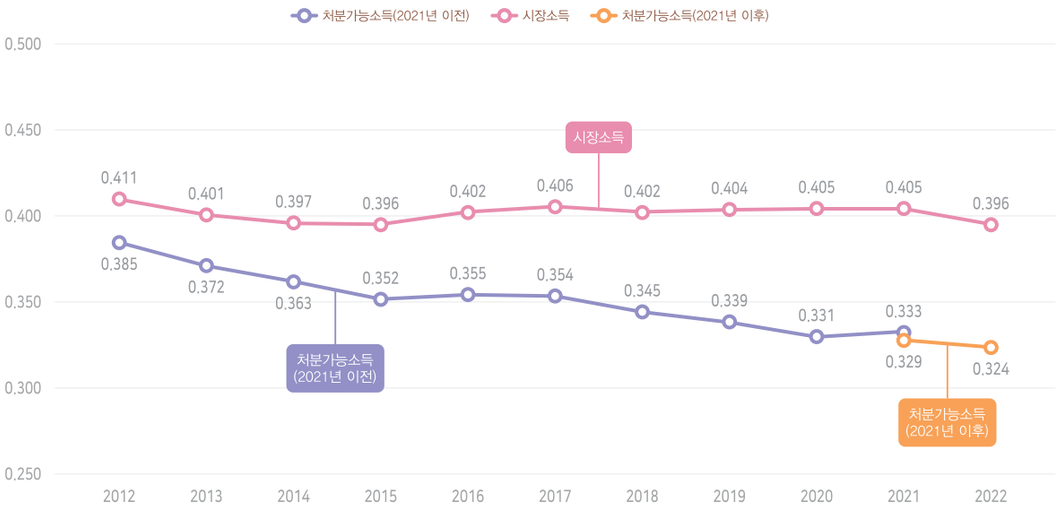
지니계수

지표정의 0~1사이의 값을 가지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

측정방법 X축에 인구를 소득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누적비율로 표시하고 Y축에 이들의 소득누적 점유율을 표시하여 이를 대응시킨 점들의 궤적(로렌츠곡선)과 대각선(완전균등선) 사이의 면적(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삼각형 면적으로 나눔

-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 중 하나로서,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현되며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경기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의 정도와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2022년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96으로 전년(0.405)대비 0.009 감소하였고,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4으로 전년(0.329)에 비해 0.005 감소하였다.
- 세전소득인 시장소득과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의 지니계수를 비교하면 세금을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2011년과 2016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418과 0.402인데, 같은 해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88과 0.355로 낮아진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간의 차이는 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 즉,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지니계수(2012~2022)



출처: 통계청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1: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주2: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주3: 고용 ·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하여 2021년 이후 수치를 재작성함에 따라 이전 자료와 직접 비교시 유의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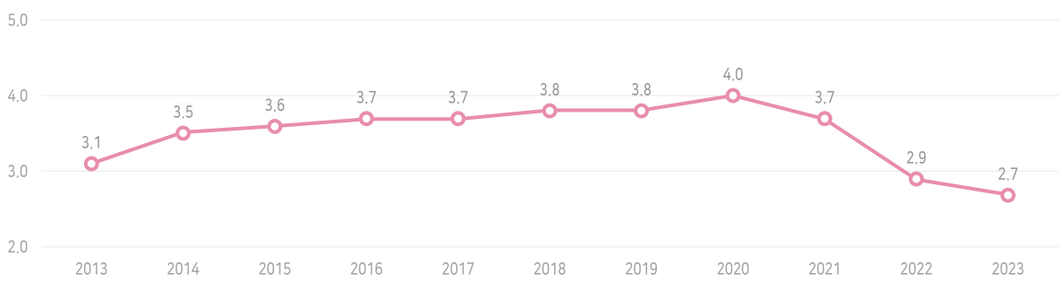
지표정의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

측정방법 (만 15세 이상 실업자 수 ÷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 실업자는 조사대상 기간 중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 2023년 실업률은 2.7%로 전년(2.9%)보다 0.2%p 감소하였다. 2020년 4.0% 이후 지속 감소추세이며, 2년 연속 3% 아래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6%로 전년(2.7%)대비 0.1%p 감소하였고, 여자는 2.8%로 전년(3.1%)대비 0.3%p 감소하였다. 취업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5.9%로 전년(6.4%)대비 0.5%p 감소하였다. 여전히 평균 실업률의 두배이상 높은 수준이나, 전체 실업률 추이와 같이 2020년(9.0%)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실업률은 2013년(3.1%)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다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4.0%)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본격화되자, 아동의 돌봄부재, 서비스업 불황 등 여러 이유로 여자 실업률이 남자보다 높아졌으며 이 같은 현상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실업률(201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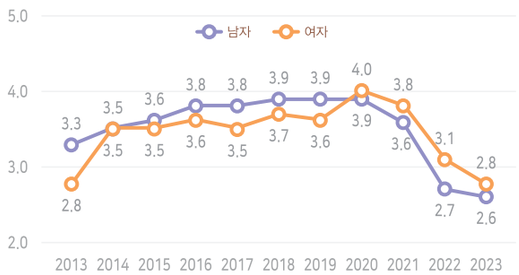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 실업률(201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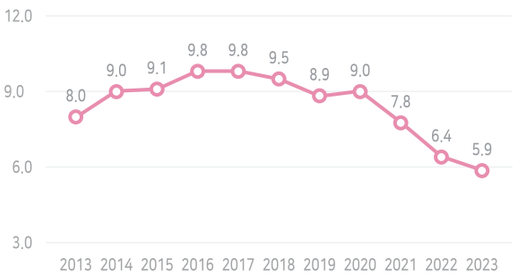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실업률(2013~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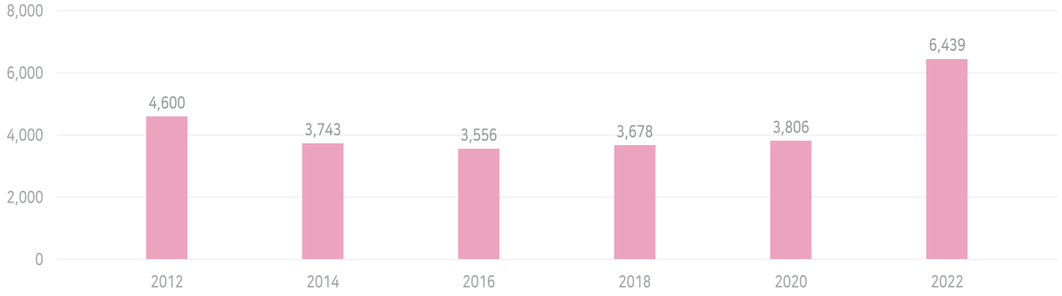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범죄피해율

지표정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집계된 인구 10만명당 범죄피해 발생건수
측정방법 (범죄피해건수(추정) ÷ 당해연도 인구총조사 기준 만 14세 이상 인구수)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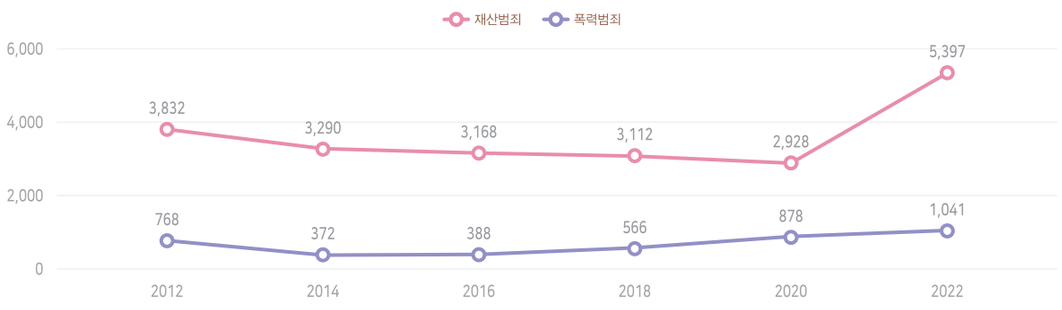
- 범죄피해율은 개인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범죄피해 경험을 응답한 결과로,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어도 사법기관에 신고되지 않거나, 신고되어도 기록으로 남지 않아 공식 범죄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이른바 숨은 범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 범죄피해율은 2012년 인구 10만명당 4,600건에서 2014년 3,743건, 2016년 3,556건으로 낮아졌으나 2018년 3,678건, 2020년 3,806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6,439건으로 2020년 대비 1.7배나 크게 증가하여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 범죄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범죄는 2022년 인구 10만명당 1,041건으로 2020년(878건) 대비 18.6% 증가하였다. 그에 비해, 재산범죄는 2022년 5,397건으로 2020년(2,928건) 대비 84.3% 증가하여 폭력범죄에 비해 증가 폭이 매우 컸다.

범죄피해율(2012~2022)
(단위: 건/10만명)



출처: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주: 범죄피해율은 지난 1년 동안 한번이라도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의 비율로 발생건수를 추정한 값임

피해유형별 범죄피해율(2012~2022)
(단위: 건/1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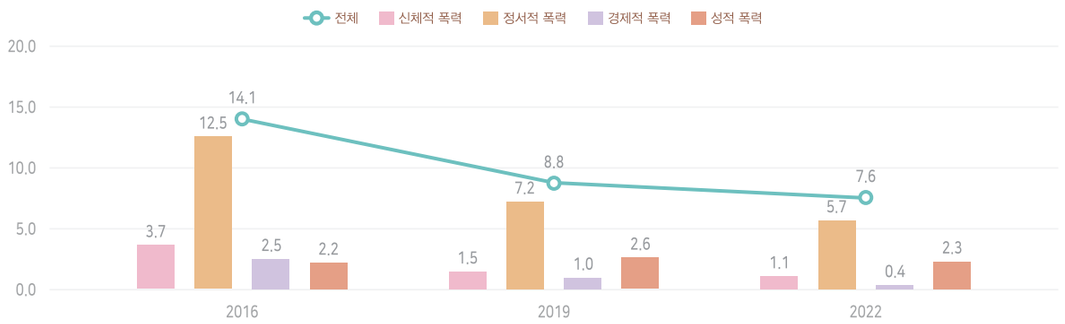
출처: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주: 전체 피해율은 조사대상자수 기준이고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피해율은 응답자수 기준이므로 유형별 피해율의 합이 전체 피해율의 합과 다를 수 있음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

지표정의 만 19세 이상 유배우(사실혼 포함) 응답자의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
측정방법 만 19세 이상 유배우(사실혼 포함) 응답자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하여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중 하나라도 피해를 경험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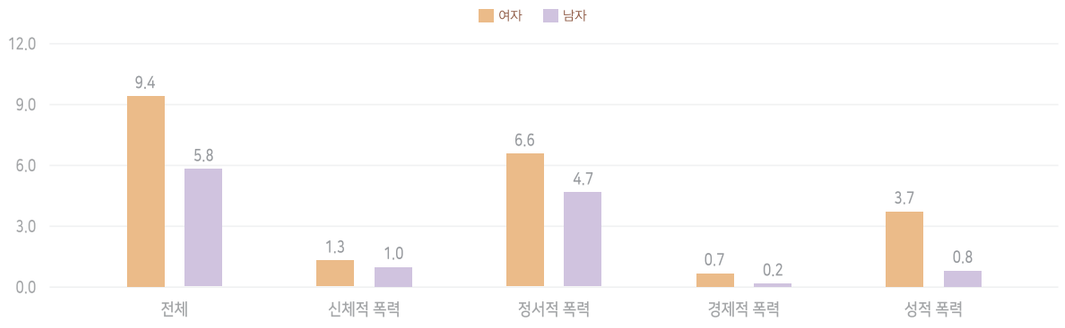
- 2022년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7.6%로 2019년(8.8%) 대비 1.2%p 감소하였다. 2016년(14.1%)에 비해서는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5.7%)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성적 폭력(2.3%), 신체적 폭력(1.1%), 경제적 폭력(0.4%)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 살펴보면, 2022년 여자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9.4%로 남자(5.8%)보다 3.6%p 높게 나타났다. 모든 폭력 유형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경험률이 높지만, 특히 성적 폭력은 남자(0.8%)에 비해 여자(3.7%)가 4.6배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2016~2022)
(단위: %)



출처: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주: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지난 1년간 배우자(사실혼 포함)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을 의미

성별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2022)
(단위: %)



출처: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주: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지난 1년간 배우자(사실혼 포함)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을 의미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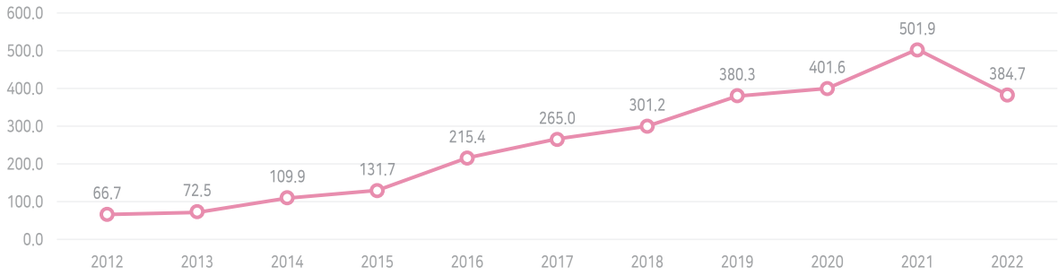
지표정의 해당연령 인구 대비 아동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인구 수

측정방법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 ÷ 18세 미만 추계인구) × 100,000

-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2022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아동 10만명당 384.7건으로 2021년(501.9명) 대비 117.2명(23.4%)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정 내 활동 증가와 중대 아동학대사건(2021년 3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으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로 예외적으로 급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2.7%로 예년과 비슷하게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아동학대 중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16.0%로 전년(14.7%)대비 1.3%p 증가하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 또는 아동학대로 판단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재학대 사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된 결과로 보인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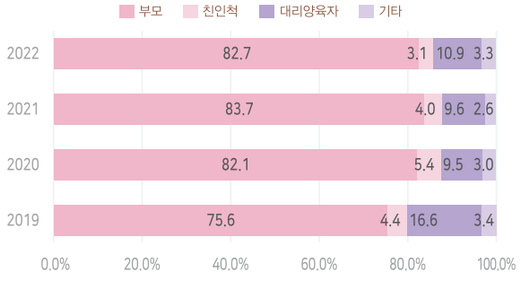
(단위: 건/10만명)



출처: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아동학대 행위자별 구성비(2019~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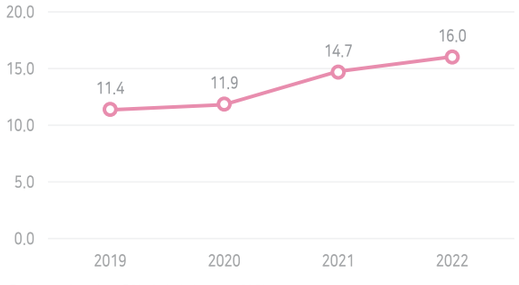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비율(2019~2022)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우울감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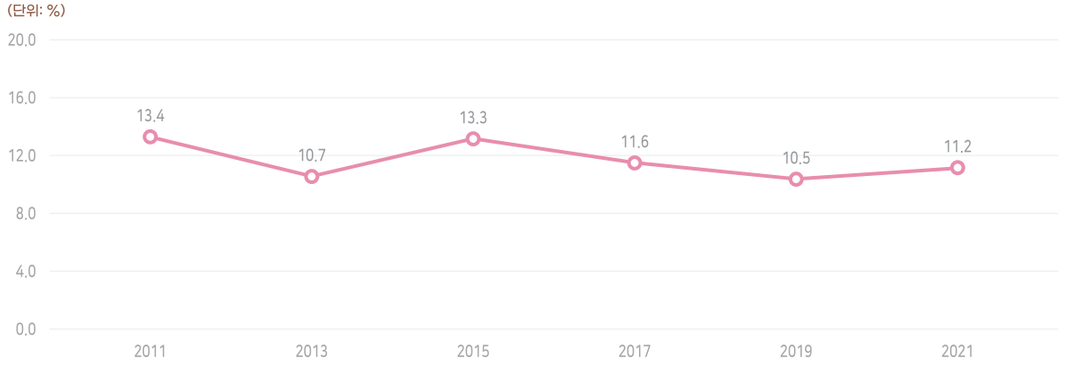
지표정의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

측정방법 19세 이상 응답자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 우울감 경험률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로, 정신적 안전상태를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일상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심각하나 의학적 진단에 의한 질환으로서의 우울증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 2021년 우울감 경험률은 11.2%로 2019년(10.5%) 대비 0.7%p 증가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8.4%)보다 여자(14.0%)의 우울감 경험률이 높으며, 특히 2019년 대비 증가폭도 여자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39세와 70세이상의 우울감 경험률이 다른 연령그룹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며, 특히 30~39세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4%에서 12.8%로 크게 증가하였다.

우울감 경험률(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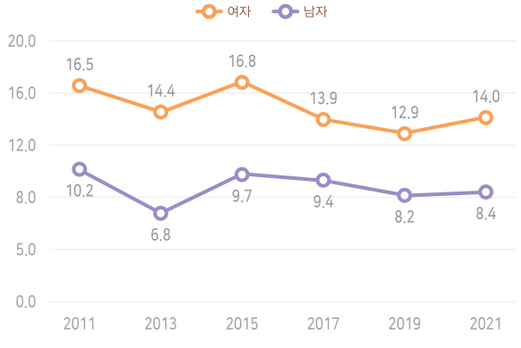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성별 우울감 경험률(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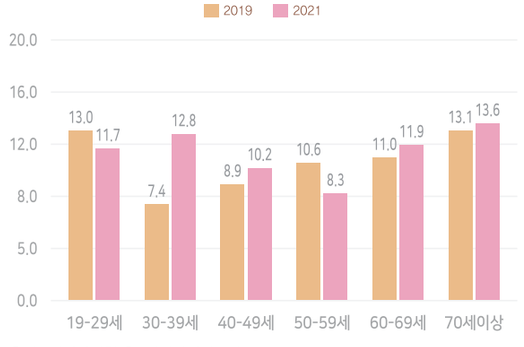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연령별 우울감 경험률(2019·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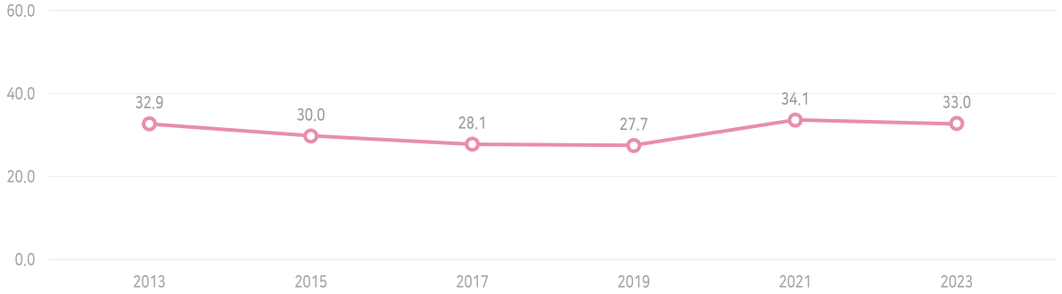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사회적 고립도

지표정의 신체적,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라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둘 중 하나라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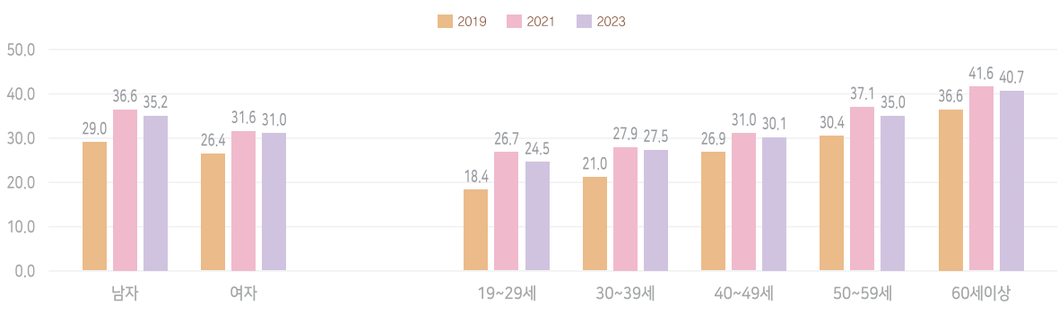
- 사회적 고립도는 위기상황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로, 사회적 유대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 2023년 사회적 고립도는 33.0%로 2021년 34.1%에 비해 1.1%p 감소하였다. 사회적 고립도는 2013년 이후 소폭이나마 감소추세를 보여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축소되고 제한됨에 따라 2021년 34.1%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23년 다시 소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 성별로 보면, 남자의 사회적 고립도가 35.2%로 여자(31.0%)에 비해 4.2%p 높으며, 2021년에 비해 그 격차는 다소 감소하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고립도도 높아진다. 19~29세의 사회적 고립도는 24.5%인 반면, 60세 이상의 사회적 고립도는 40.7%로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도(2013~2023)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주: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성별·연령별 사회적 고립도(2019~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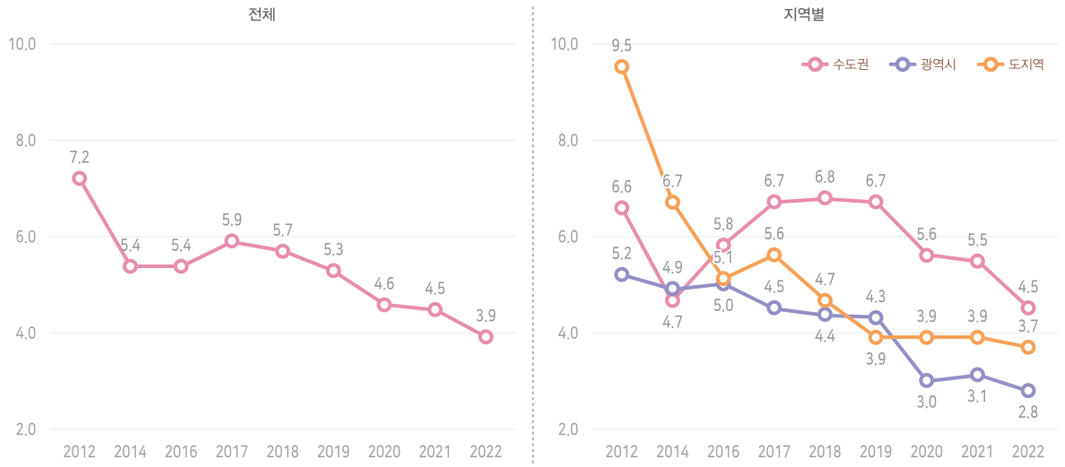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주: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지표정의 총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측정방법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

-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 수별 최소 주거면적, 방의 수, 필수설비, 구조 · 성능 및 환경 등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요건으로, 국민의 주거 안전성과 쾌적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0년 건설교통부 고시(제2000-260)로 마련되었다. 이후 가구원 수별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보다 상향하여 현재의 기준으로 개정 · 공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2011년)되었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자연재해 · 화재 · 범죄 등에 취약하므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취약계층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2022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3.9%로 전년(4.5%) 대비 0.6%p 감소하였다. 2017년(5.9%)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통계작성(2006년) 이후 처음으로 3%대로 진입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4.5%), 도지역(3.7%), 광역시(2.8%) 순으로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년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0%p, 광역시는 0.3%p, 도지역은 0.2%p 각각 감소하여, 수도권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2012~2022)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1: 2017년 이후 매년조사로 변경
주2: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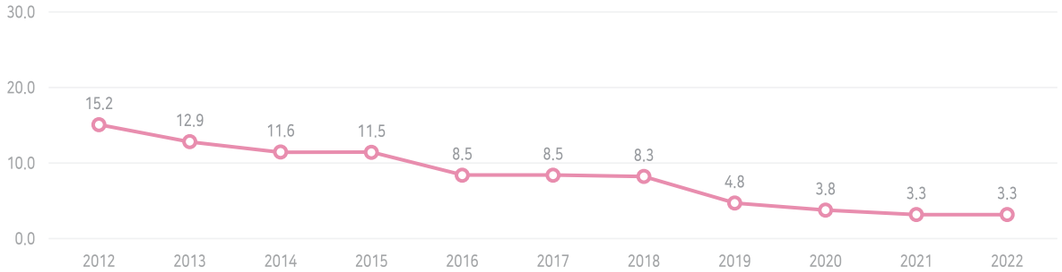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2011)
- **시설기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 **침실 및 면적기준** 1인 가구(방 1개, 14㎡), 2인 가구(방 1개, 26㎡), 3인 가구(방 2개, 36㎡), 4인 가구(방 3개, 43), 5인 가구(방 3개, 46㎡), 6인 가구(방 4개, 55㎡)

음주운전 경험률

지표정의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만 19세 이상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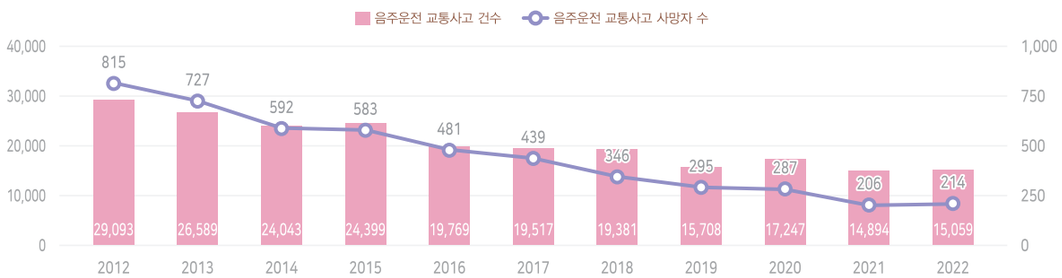
- 음주운전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022년 음주운전 경험률은 전년에 이어 3.3%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일부 기간 정체기도 있으나 꾸준히 감소추세를 이어왔는데, 특히 2016~2018년 8%대의 정체기 이후 2019년 4%대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고, 뒤이어 음주운전 기준 상향과 음주운전자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어 교통문화 개선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20년 이후 더욱 감소하여 음주운전 경험률은 3%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 그러나, 202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5,059건으로 전년(14,894건)대비 165건(1.1%) 증가하였고, 사고 사망자(214명)도 8명(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의를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경험률(2012~2022)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음주운전 교통사고(2012~2022)
(단위: 건, 명)



출처: 경찰청 누리집, 정보공개>공공데이터>경찰통계자료>교통>음주운전교통사고현황

월간 음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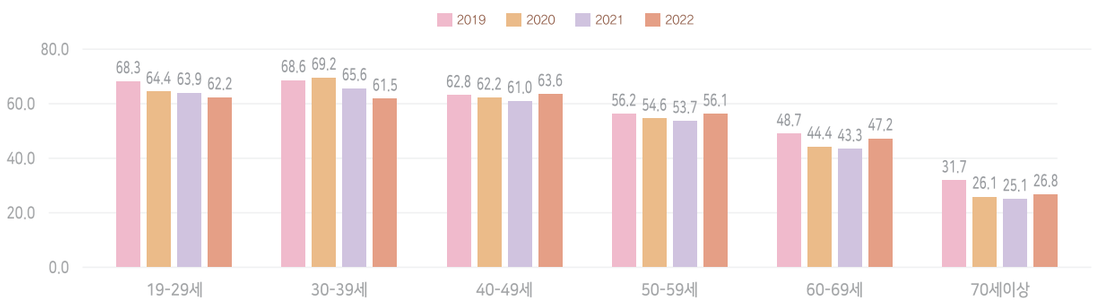
지표정의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
측정방법 만 19세 이상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

- 음주는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고 있지만, 과도할 경우 건강상의 영향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등의 안전사고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주의깊게 관리해야 할 지표이다.
- 최근 1년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 즉 월간음주율은 2022년 54.0%로 전년(53.5%)대비 0.5%p 증가하였다. 남자의 월간음주율은 67.1%에서 66.9%로 0.2%p 감소한 반면, 여자는 39.9%에서 41.2%로 1.3%p 높아짐에 따라 전체 월간음주율도 전년보다 증가하게 되었다.
- 연령별로는 19~29세와 30~39세의 월간음주율은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40대이상 연령구간은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2021년에는 30~39세의 월간음주율이 가장 높고, 19~29세, 40~49세 순으로 높았다. 그에 비해 2022년에는 40~49세의 월간음주율이 63.6%로 가장 높았으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62.8%)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음주율(2012~2022)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연령별 월간음주율(2019~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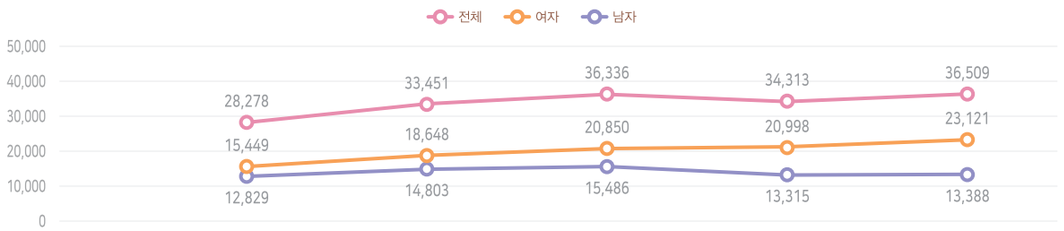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해 및 자살 시도 건수

지표정의 연간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접수한 진료건수
측정방법 지정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취합된 자해 및 자살 시도 환자 진료건수

- 2021년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을 통해 집계된 자해 · 자살 시도 건수는 36,509건으로 전년(34,313건)에 비해 2,196건(6.4%) 증가하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자해 · 자살 시도 건수는 2020년에 전년대비 감소한 후 2021년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388건으로 전년(13,315건)과 비슷한 수준이나, 여자는 23,121건으로 전년(20,998건)보다 2,123건(10.1%) 증가하였다. 남자보다 여자의 자해 · 자살 시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7년 1.20배에서 2021년 1.73배로 매년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
- 연령별로는 20~29세가 31.0%, 19세이하가 14.9%, 30~39세가 14.2% 순으로 그 비중이 컸다. 특히, 19세이하와 20~29세의 비중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2021년에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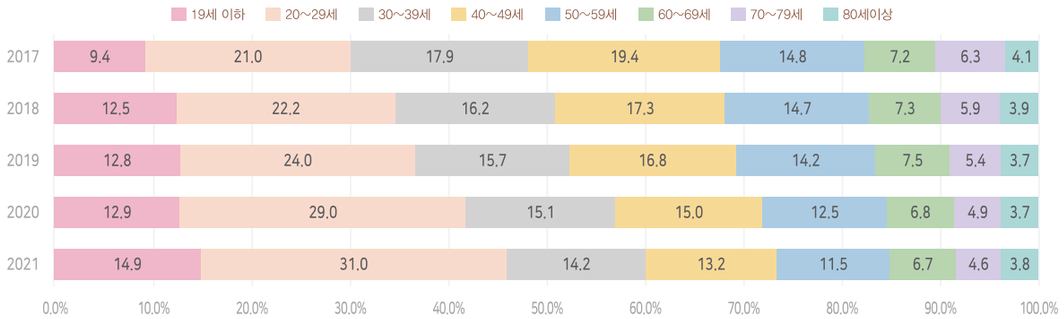
자해·자살 시도 건수(2017~2021)
(단위: 건)



	2017	2018	2019	2020	2021
발생비(여자/남자)	1.2	1.26	1.35	1.58	1.73

출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백서 2023」
주: 발생비= 여자 자해 및 자살 시도건수 ÷ 남자 자해 및 자살 시도건수

연령대별 자해·자살 시도 구성비(2017~2021)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백서 2023」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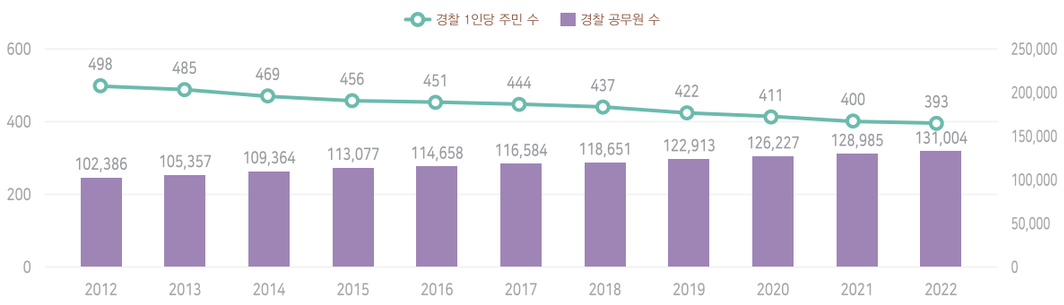
대응역량

경찰 1인당 주민 수

지표정의 경찰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 경찰 공무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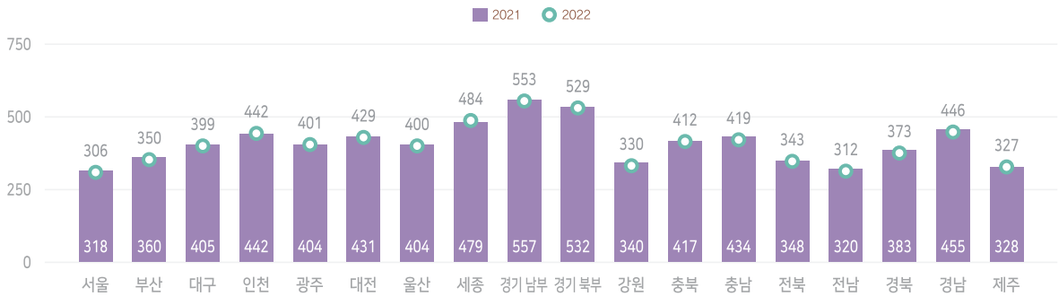
- 경찰은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기본 인력으로 이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치안환경을 평가하는데 중요하다. 경찰 1인당 주민 수가 적을수록 경찰이 치안 유지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경찰인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2022년 경찰인력은 131,004명으로 전년보다 2,019명(1.6%) 증원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393명으로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300명대로 진입하였다. 이는 10년 전 2012년 498명에 비해서는 100명 이상 감소한 수치로서, 이 기간 동안 약 3만명의 경찰인력이 증원되었다.
- 관할 지역별로는 서울(306명), 전남(312명), 제주(327명) 순으로 담당 주민 수가 적으며, 경기남부(553명), 경기북부(529명), 세종(484명) 순으로 담당 주민 수가 많다. 서울(-3.8%), 충남(-3.5%), 강원(-2.9%) 순으로 담당 주민 수가 많이 감소하였고, 세종(1.0%)은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경찰 1인당 주민 수(2012~2022)
(단위: 명)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관할 지역별 경찰 1인당 주민 수(2021·2022)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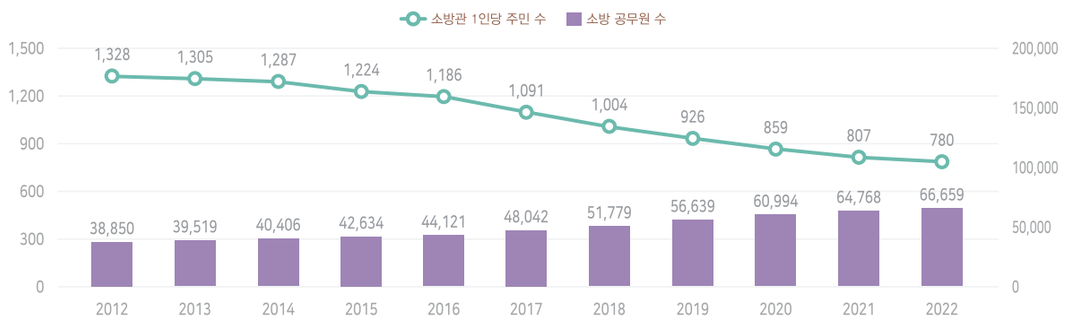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소방관 1인당 주민 수

지표정의 소방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 각년도 말 기준 소방공무원 정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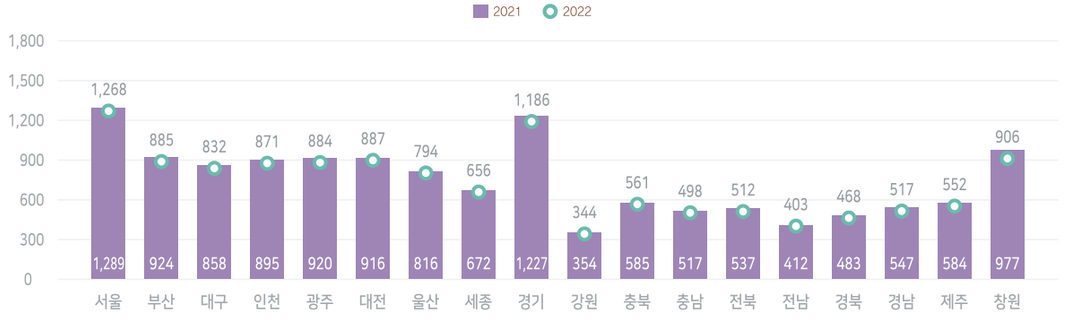
- 각종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과 접점하는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력으로,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적을수록 국민에게 고품질의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소방공무원 수는 2022년 66,659명으로 전년(64,768명)보다 2.9% 증원되었다. 따라서 소방관 1인당 주민 수는 2021년 807명에서 2022년 780명으로 3.3% 낮아져 소방력 확대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지역 대도시 관할 소방관 1인당 주민 수는 도 지역보다 매우 높지만, 관할 지역의 지리적 특징 또는 소방서비스 수요의 특수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원의 경우 1인당 주민수(344명)는 서울(1,268명)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산불재난, 대설피해 등 지역 특성 재난 발생과 이에 따른 원거리 출동 등에 많은 소방력이 요구된다.

소방관 1인당 주민 수(2012~2022)
(단위: 명)



출처: 소방청, 「소방청 통계연보」

관할 시도별 소방관 1인당 주민 수(2021·2022)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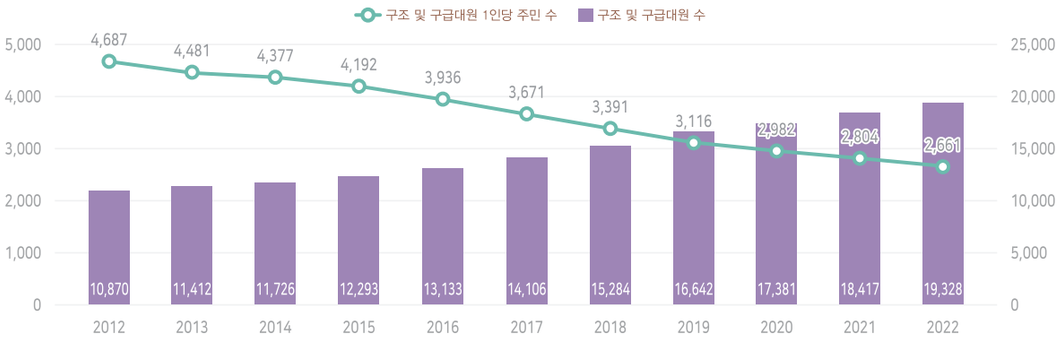
출처: 소방청, 「소방청 통계연보」

구조 및 구급대원 1인당 주민 수

지표정의 119 구조 및 구급대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 119 구조 및 구급대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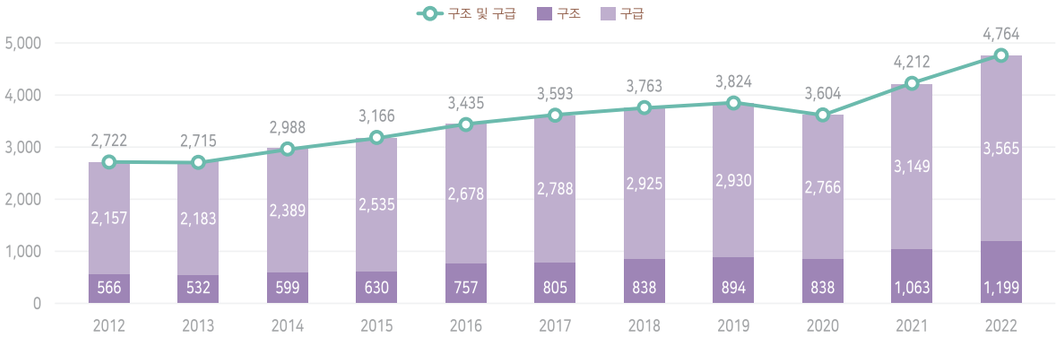
- 2022년 119 구조 및 구급대원 수는 19,328명으로 전년(18,417명)보다 911명(4.9%) 증가하였다. 따라서, 대원 1인당 주민 수는 2021년 2,804명에서 2022년 2,661명으로 143명(5.1%) 감소하여 구조 및 구급 대응력이 전년보다 더욱 개선되었다. 2022년 구조 및 구급 출동건수는 총 4,764천건으로, 전년(4,212천건)보다 13.1% 증가하였다. 구조는 1,199천건, 구급은 3,565천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12.8%, 13.2% 증가하였다.

119 구조 및 구급대원 1인당 주민 수(2012~2022)
(단위: 명)



출처: 소방청, 「소방청 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119 구조 및 구급 출동건수(2012~2022)
(단위: 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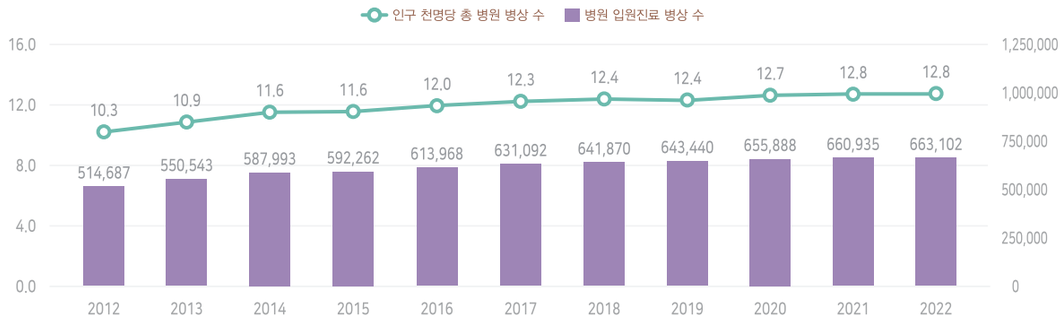
출처: 소방청, 「소방청 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총 병원 병상 수

지표정의 인구 천명당 병원 병상 수
측정방법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 수 ÷ 장래추계인구)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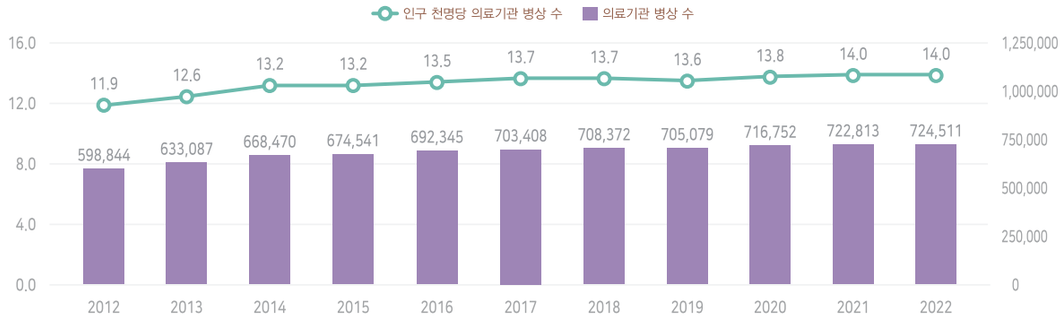
- 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천명당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 수로서,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의 척도로 쓰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시에 많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 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다.
- 우리나라 전체 병원급 입원진료 병상 수는 2022년 663,102개로 전년(660,935개)보다 2,167개(0.3%) 증가하였다. 인구 천명당 총 병원 병상 수는 12.8개로 전년(12.8개) 수준이다. 병원 이외에 의원, 조산원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 병상 수는 2022년 724,511개이며, 인구 천명당 병상 수는 14.0개이다.

총 병원 병상 수(2012~2022)
(단위: 개/천명, 개)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
주: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을 대상으로 함

의료기관 병상 수(2012~2022)
(단위: 개/천명,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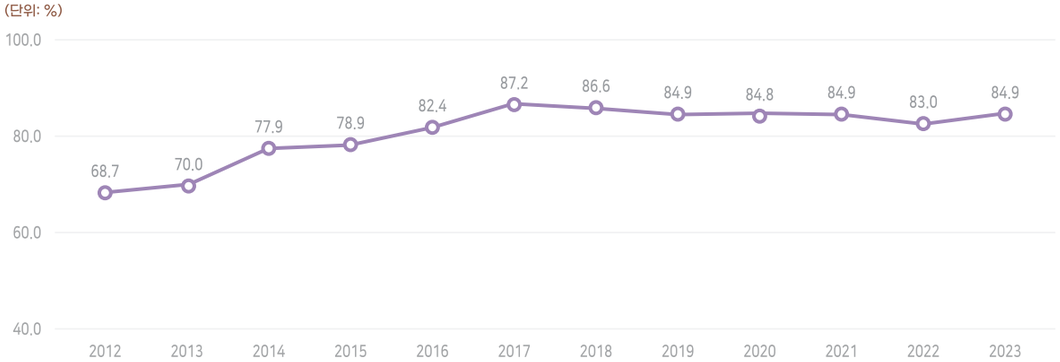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
주: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포함

안전띠 착용률

지표정의 운행 중 차량 내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률
측정방법 교통관측 대상 자동차의 승차자 수 대비 안전벨트 착용 승차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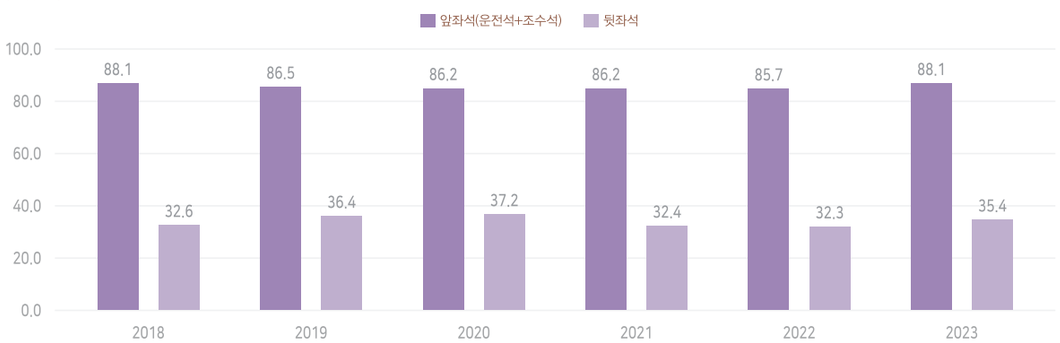
- 자동차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말도 있듯이 안전띠 착용은 자동차 승차자 안전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2023년 안전띠 착용률은 84.9%로 전년(83.0%)대비 1.9%p 상승하였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앞좌석 착용률은 88.1%로 전년(85.7%)대비 2.4%p 상승하였고, 뒷좌석은 35.4%로 전년(32.3%)대비 3.1%p 상승하였다. 2018년 9월 안전띠 착용률 개선을 위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하였으나,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여전히 앞좌석 착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안전띠 착용률(2012~2023)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실태조사」

좌석 위치별 안전띠 착용률(2018~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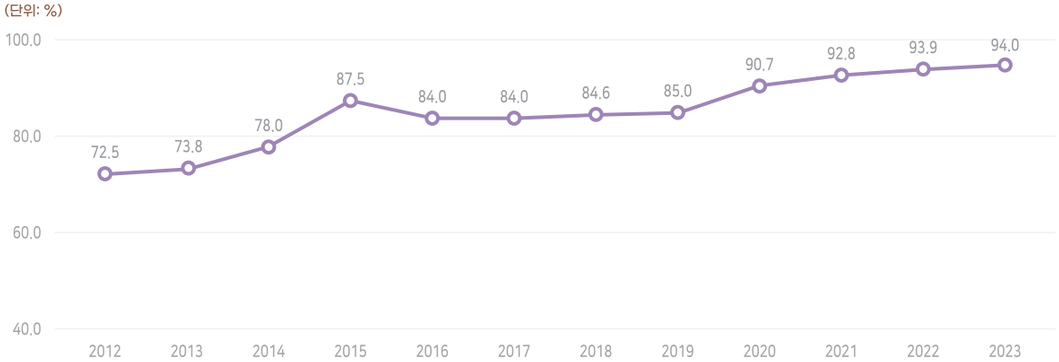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실태조사」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지표정의 이륜차 운전자 및 동승자의 규정된 안전모 착용률
측정방법 교통관측 대상 이륜차의 운전자, 동승자 안전모 착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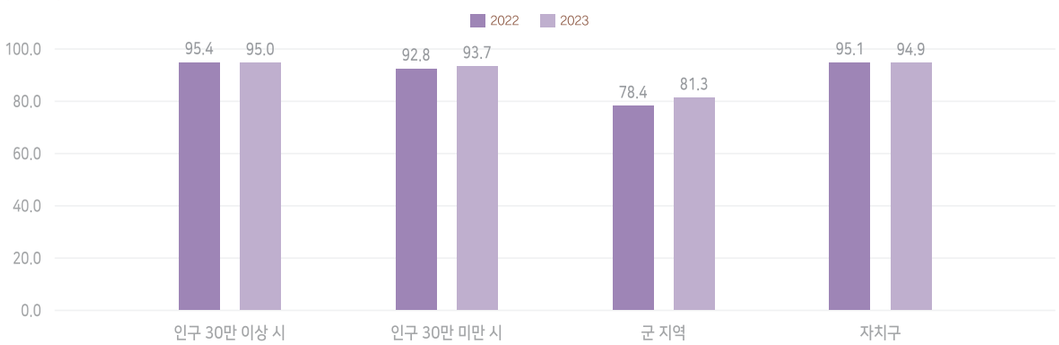
- 2023년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94.0%로 전년(93.9%) 대비 0.1%p 상승하였다. 교통법규 단속 강화로 안전모 착용률은 2020년 90%를 넘어섰으며,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하여 관측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갱신되었다.
- 도시 규모별로 살펴보면, 인구 30만 이상 시의 착용률은 95.0%, 자치구는 94.9%, 인구 30만 미만 시는 93.7%, 군 지역은 81.3%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30만 이상 시와 자치구는 전년대비 0.4%p, 0.2%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95% 내외의 높은 수준의 착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인구 30만 미만 시와 군지역의 착용률은 낮지만, 전년대비 각각 0.9%p, 2.9%p 증가하여 전체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상승을 견인하였다.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2012~2023)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실태조사」

도시 규모별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2022·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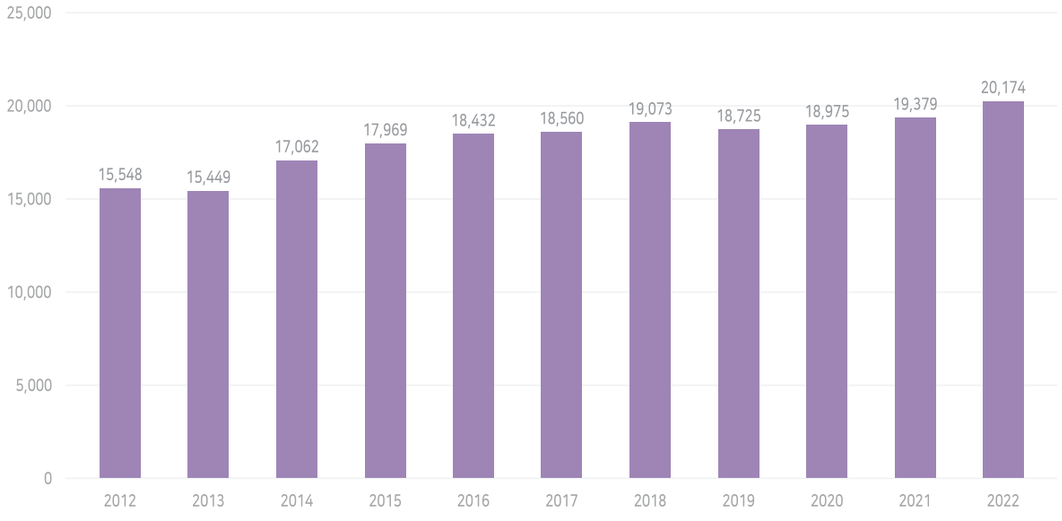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실태조사」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지표정의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근로자 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 수

- 2022년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20,174천명으로 전년(19,379천명) 대비 4.1% 증가하였고, 2013년 15,449천명에 비교하면 30.6% 증가한 규모이다. 이러한 가입자 수 증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노력의 결과로서, 그 중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단계적 확대 적용이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고종사자를 업무상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6개 직종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2021년에는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 · 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산재보험 적용자 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나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2022년 5월에는 특고종사자가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 · 재정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7월 시행이 됨에 따라 향후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2012~2022)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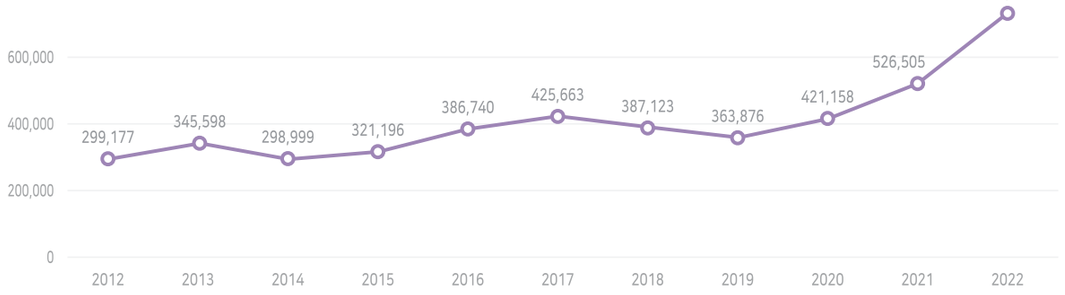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통계」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지표정의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측정방법 각년도 주택, 비닐하우스(온실), 소상공인업장의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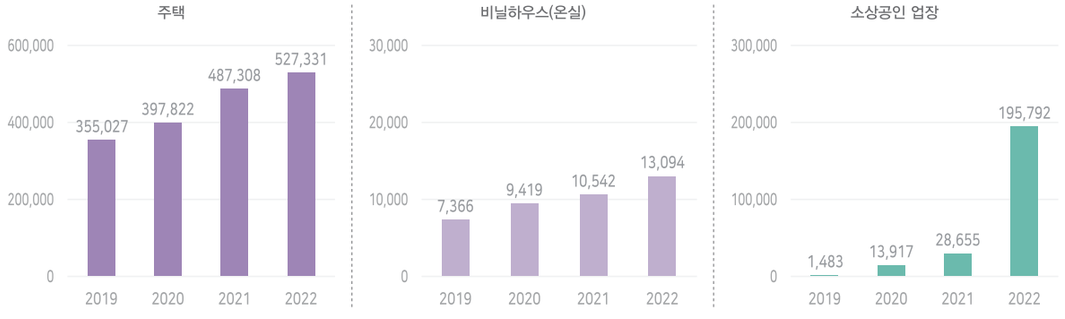
-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 2022년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총 736,217건으로 전년(526,505건) 대비 39.8% 증가하였다. 풍수해보험 가입 건을 장소별로 보면 주택 527,331건(71.6%), 소상공인 업장 195,792건(26.6%), 비닐하우스(온실) 13,094건(1.8%) 순으로 많으며, 전년대비 주택은 8.2%, 비닐하우스(온실)는 24.2%, 소상공인 업장은 583.3% 증가하였다. 소상공인 업장의 보험가입 폭증으로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3년만에 2배로 늘어났다.

풍수해보험 가입건수(2012~2022)
(단위: 건)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

풍수해보험 장소별 가입 현황(2019~2022)
(단위: 건)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

아동 안전교육 경험률

지표정의 최근 1년 동안 안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 비율
측정방법 만9세~17세 아동 중 최근 1년 동안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

- 아동은 안전사고 노출시 그 피해정도가 성인에 비해 더욱 크며 영구장애로 이어질 확률 또한 크다. 아동기는 모든 생활습관의 기초를 완성하는 시기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의 최적기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18년 아동의 안전교육 경험률은 41.6%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안전교육 경험률이 더 낮았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보육 및 교육기관은 수년간 아동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해당통계의 작성주기가 5년이므로 정책효과가 반영된 통계는 다음 연도에 확인 가능하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실시한 학교안전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2022년 각 학교에서는 연간 평균 약 4회의 재난안전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안전교육 및 학생안전의 만족도 역시 지속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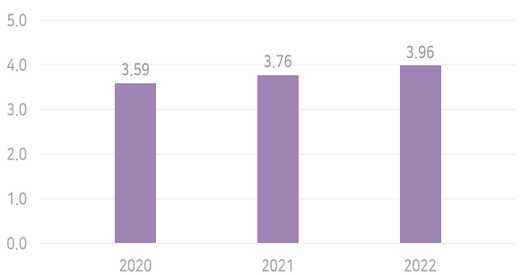
아동 안전교육 경험률(2013·2018)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 연령별 안전교육 경험률(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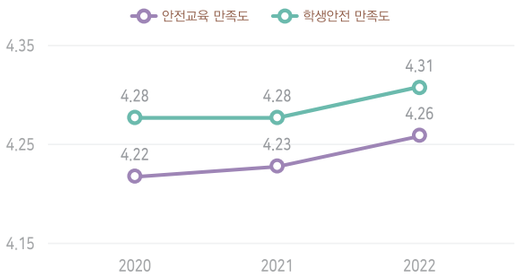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학교 재난대비 훈련실시 횟수(2020~2022)
(단위: 건/년)



출처: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실태조사」

안전교육 및 학생안전 만족도(2020~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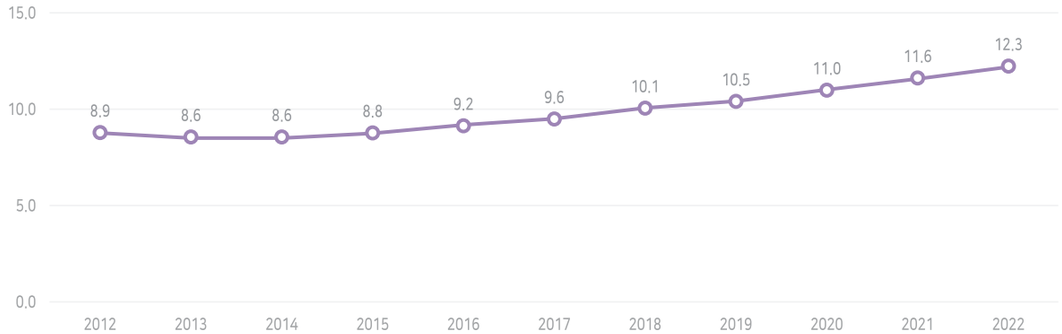
출처: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실태조사」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지표정의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측정방법 도시공원 조성면적(결정면적 - 미집행면적) ÷ 도시지역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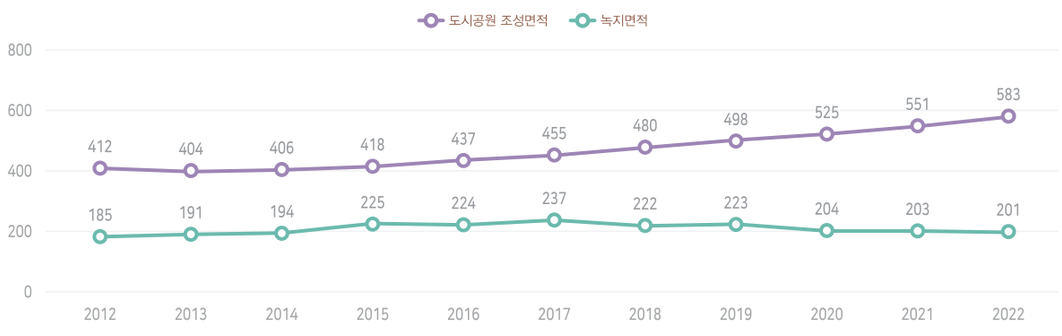
- 도시공원은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공간이며, 녹지는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 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이다. 도시공원과 공공녹지의 조성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재해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2022년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12.3㎡로 2021년 11.6㎡에 비해 0.7㎡ 증가하였다.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2014년 8.6㎡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처음으로 12㎡를 넘어서게 되었다. 반면, 녹지면적은 2017년 237㎢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2년 201㎢로 나타났다.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2012~2022)
(단위: ㎡/인)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도시공원 조성면적과 녹지면적(2012~2022)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주: 조성면적 = 결정면적 – 미집행면적

제4장

피해(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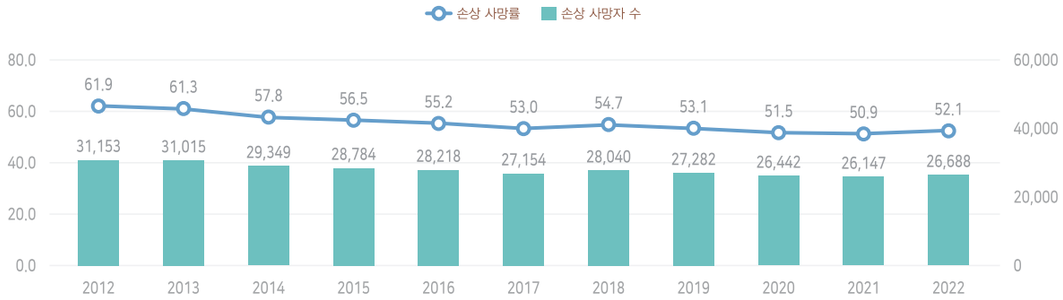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
(손상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질병 이외 사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손상 사망자 수

측정방법 (질병 이외 사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손상 사망자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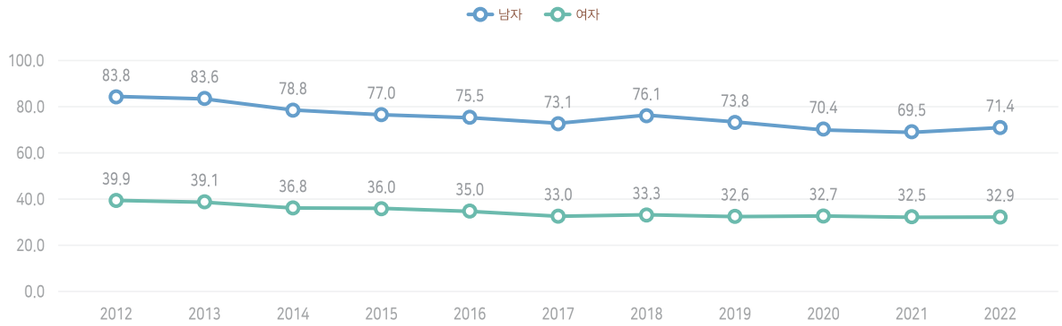
- 2022년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질병 이외의 원인인 경우, 즉, 사고사 등에 의한 손상 사망자 수는 26,688명으로, 2021년(26,147명)보다 2.1% 증가하였다. 이는 2022년 전체 사망자(372,939명)의 7.2%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 8.2%보다 1.0%p 감소하였다.
- 인구 10만명당 손상 사망자 수인 손상 사망률은 2022년 52.1명으로 2021년 50.9명보다 1.2명(2.4%) 증가하였다. 손상 사망률은 2018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2022년 추세가 전환되었다.
- 성별로 보면, 남자 10만명당 손상 사망률은 2022년 71.4명으로 전년(69.5명)보다 1.9명(2.7%) 증가하였고, 여자는 32.9명으로 전년(32.5명)보다 0.4명(1.2%) 증가하였다. 남자의 손상 사망률은 여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사고 사망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고사 등에 의한 손상 사망률과 손상 사망자 수(2012~2022)
(단위: 명/10만명,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성별 손상 사망률(2012~2022)
(단위: 명/1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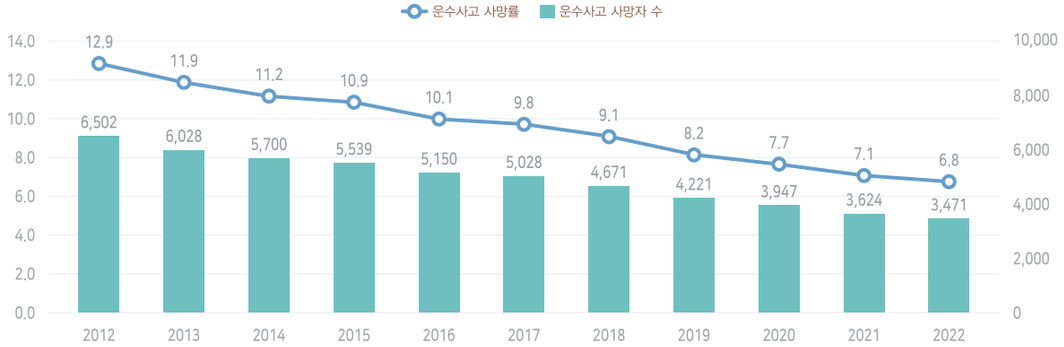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운수사고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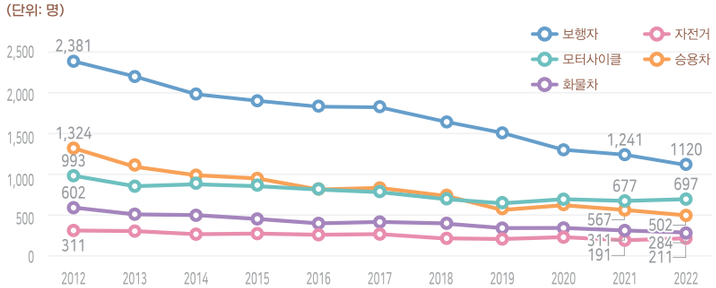
- 2022년 운수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6.8명으로 전년(7.1명)보다 0.3명(4.2%) 감소하였고, 운수사고 사망자 수는 3.471명으로 전년(3,624명)보다 4.2% 감소하였다. 운수사고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하여 10년 전인 2012년(12.9명)과 비교하면 47.3% 감소하여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 운수사고 사망자는 육상사고(3,385명, 97.5%), 수상사고(61명, 1.8%), 항공 및 기타사고(25명, 0.7%) 순으로 대부분 육상에서 발생하였다. 운송수단별로는 보행자(32.3%), 모터사이클(20.1%), 승용차(14.5%), 화물차(8.2%), 자전거(6.1%)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보행자, 승용차, 화물차 탑승 사망자는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모터사이클과 자전거 탑승 사망자는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운수사고 사망률과 사망자 수(2012~2022)
(단위: 명/10만명,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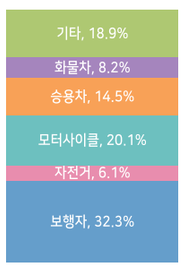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운송수단별 운수사고 사망자(2012~2022)
(단위: 명)



2022년 운수사고 사망자의 운송수단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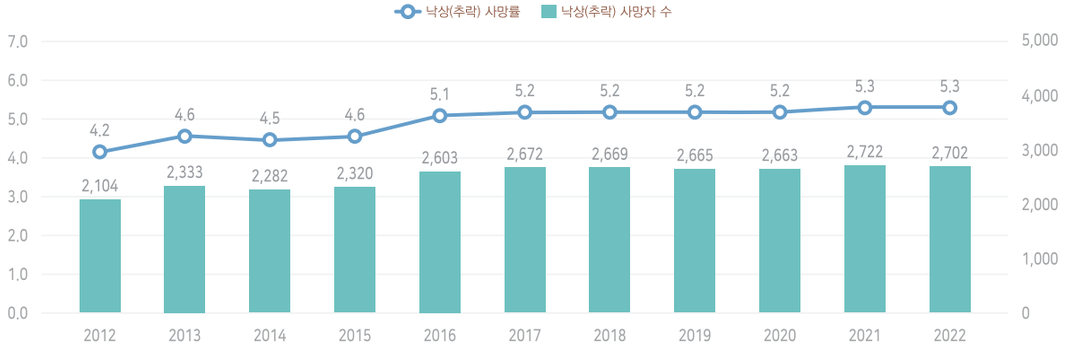
출처: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낙상(추락)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낙상 또는 추락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낙상 또는 추락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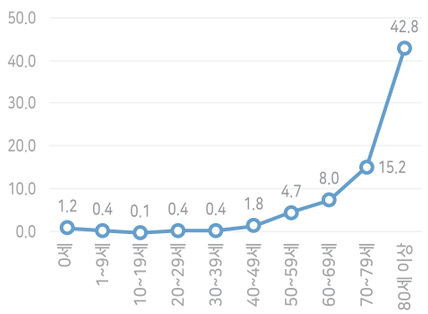
- 2022년 인구 10만명당 낙상(추락)으로 인한 사망률은 5.3명으로 전년(5.3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이하에서는 1.0명 안팎의 사망률을 나타내나 50~59세 4.7명에서 80대이상 42.8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 살펴보면 낙상(추락) 사망자(2,702명) 중 남자는 1,956명(72.4%), 여자는 746명(27.6%)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2.6배 많다. 여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자가 많아지는 반면, 남자는 60~69세(498명), 80세이상(495명), 70~79세(440명), 50~59세(350명)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추락) 사망률과 사망자 수(2012~2022)
(단위: 명/10만명,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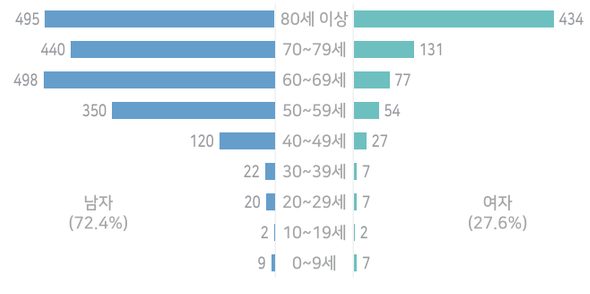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연령별 낙상(추락) 사망률(2022)
(단위: 명/10만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성별 연령별 낙상(추락) 사망자 현황(2022)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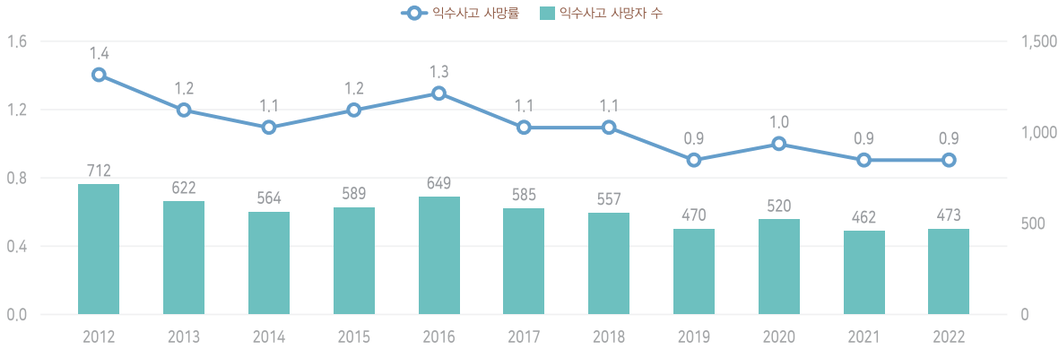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익수사고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익수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익수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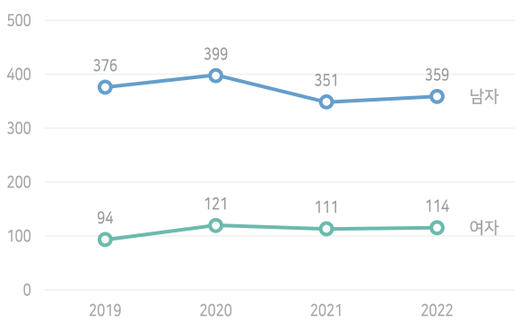
- 인구 10만명당 우발적 익사 및 익수에 의한 사망률은 2022년 0.9명으로 2021년(0.9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익수사고 사망자 수는 473명으로 전년(462명)보다 11명(2.4%) 증가하였다.
- 성별로 살펴보면 2022년 남자는 359명, 여자는 114명이 사망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약 3배 더 많이 사망하였다. 연령별로는 60~69세에서 114명이 사망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70~79세(96명), 80세이상(82명)에서 많이 발생하여 노령인구의 피해가 큼을 알 수 있다.

익수사고 사망률과 익수사고 사망자 수(2012~2022)
(단위: 명/10만명,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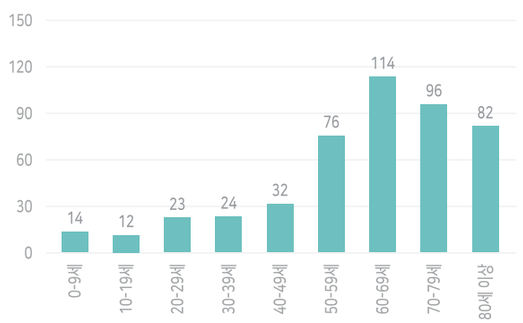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성별 익수사고 사망자 수(2019~2022)
(단위: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연령별 익수사고 사망자 수(2022)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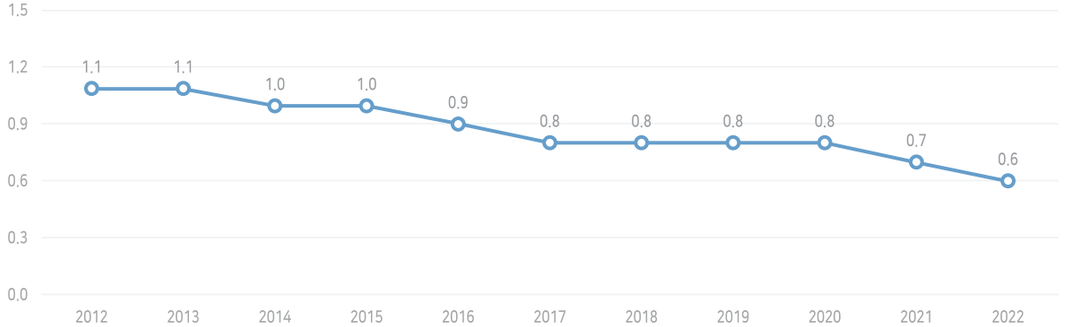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가해에 의한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가해(범죄피해)에 의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가해(범죄피해)에 의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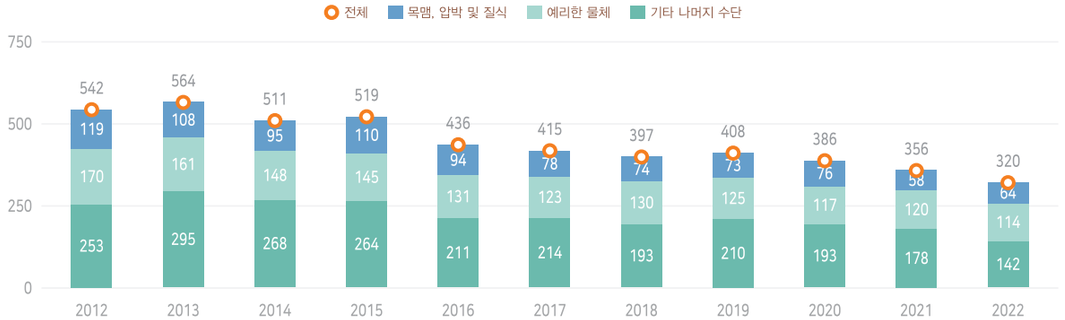
- 2022년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0.6명으로 2021년(0.7명)보다 0.1명 감소하였다. 가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320명으로 전년(356명)대비 10.1% 감소하였으며, 2012년(542명)대비 4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수단별로 살펴보면 목맴, 압박 및 질식 사망자는 2021년 58명에서 2022년 64명으로 6명(10.3%) 증가하였으나, 예리한 물체에 의한 사망자는 120명에서 114명으로 6명(5.0%) 감소하였고, 기타수단에 의한 사망자도 178명에서 142명으로 36명(20.2%) 감소하였다.

가해에 의한 사망률(2012~2022)
(단위: 명/10만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가해 수단별 사망자 수(2012~2022)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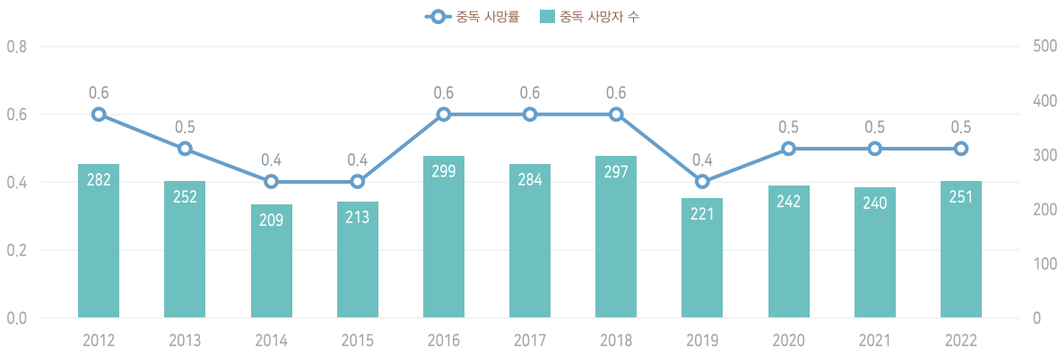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중독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유독성 물질 중독에 의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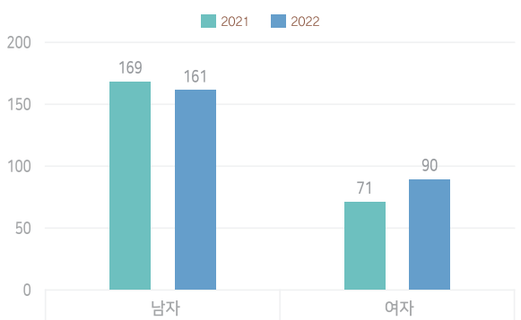
- 2022년 중독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0.5명으로 2020년 이후 0.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중독사망자 수는 251명으로 전년(240명)대비 4.6% 증가하였다.
- 성별로 살펴보면 2022년 남자 중독 사망자 수는 161명으로 전년(169명)대비 8명(4.7%) 감소한 반면, 여자 사망자 수는 90명으로 전년(71명)대비 19명(2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독 원인별로는 화학물 및 독성물질 중독 사망자가 2022년 188명으로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 중독 사망자(63명)보다 약 3배 규모로 더 많이 발생하였다.

중독 사망률과 사망자 수(2012~2022)
(단위: 명/10만명,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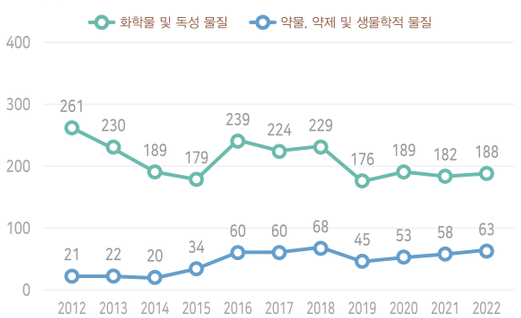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성별 중독 사망자 수(2021·2022)
(단위: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중독 원인별 사망자 수(2012~2022)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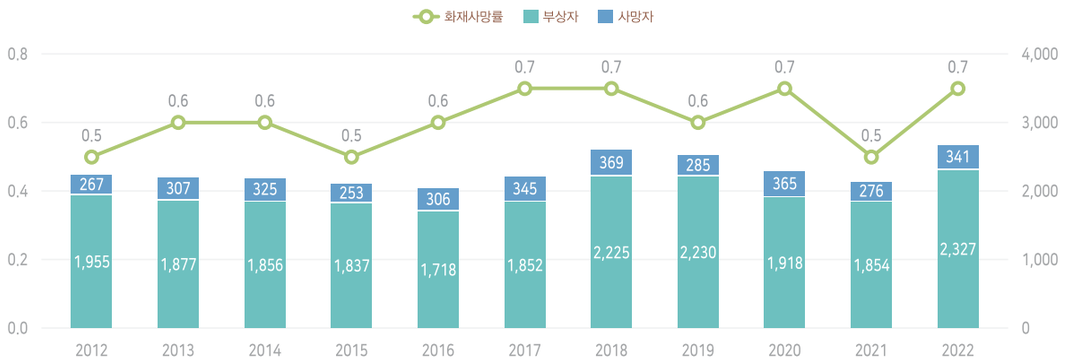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화재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 당 화재에 의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화재 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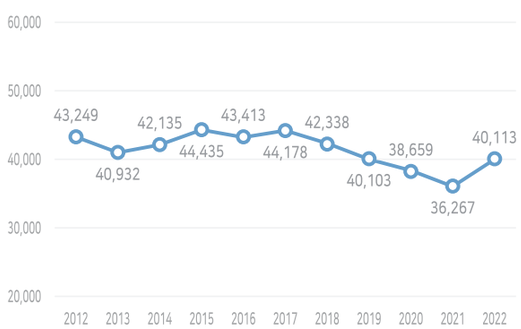
- 2022년 인구 10만명당 화재 사망률은 0.7명으로 전년(0.5명)대비 0.2명 증가하였다. 화재에 의한 사망자 수는 341명으로 전년(276명)대비 23.6% 증가하였고, 부상자 수는 2,327명으로 전년(1,854명)대비 25.5% 증가하였다.
- 화재 발생건수는 2022년 40,113건으로 전년(36,267건)보다 10.6% 증가하였다. 발화요인별로는 전체 화재의 49.0%가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25.0%, 기계적 요인이 9.6%로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화재 10건 중 1건 정도는 발화요인을 알 수 없는 것(미상 9.1%)으로 나타났다.

화재 사망률(2012~2022)
(단위: 명/10만명,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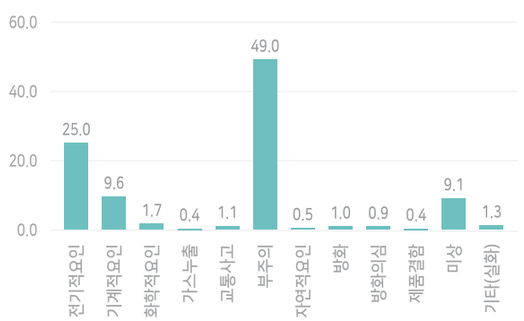
출처: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화재 발생건수(2012~2022)
(단위: 건)



출처: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발화요인별 발생현황(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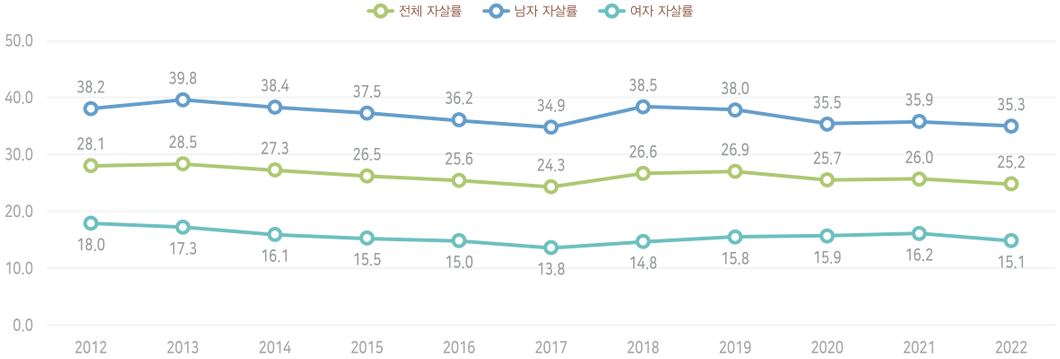
출처: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자살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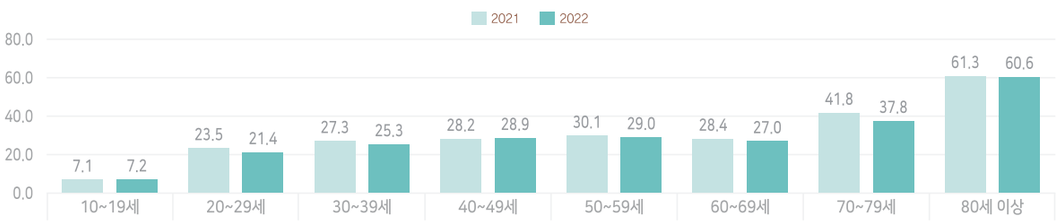
- 인구 10만명당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은 2022년 25.2명으로 전년(26.0명)대비 3.1% 감소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35.3명)가 여자(15.1명)보다 2.3배 높으며, 전년대비 자살률은 남자(–1.7%), 여자(–6.8%) 모두 감소하였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9세와 10~19세의 자살률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그 외 연령구간의 자살률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80세이상 자살률은 60.6명으로 전년(61.3명)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다른 연령구간에 비하여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연령구간별 남녀간 자살률 성비는 10대에 1.1배 수준이나 80세 이상에서는 3.8배로 가장 높다.

자살률(2012~2022)
(단위: 명/10만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연령별 자살률(2021·2022)
(단위: 명/10만명)



자살률 성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2021	1.1	1.4	1.6	2.3	2.7	3.4	3.1	3.7
2022	1.1	1.4	2.0	2.2	2.8	3.1	3.5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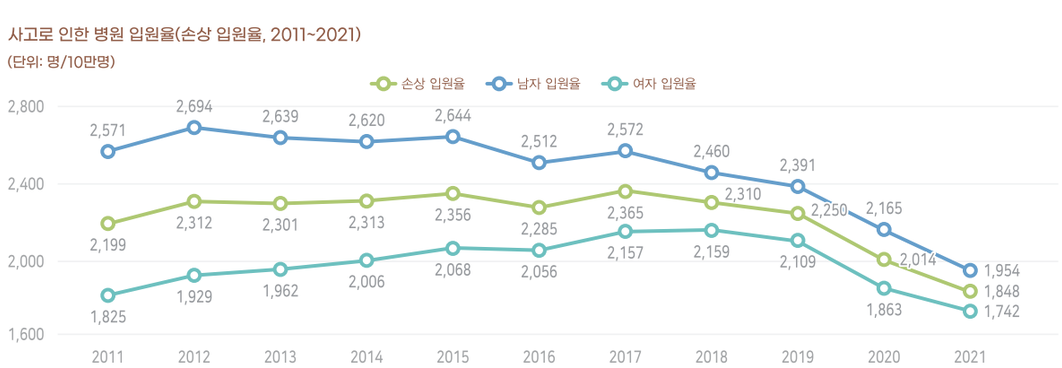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 자살 성비= 남자 자살률 ÷ 여자 자살률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 (손상 입원율)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질병 이외 사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손상 입원 환자 수
측정방법 (질병 이외 사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손상 입원 환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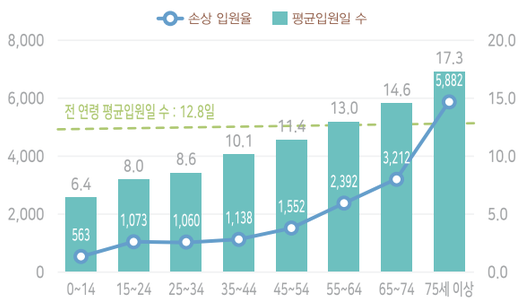
- 2021년 사고로 인한 손상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1,848명으로 전년(2,014명)보다 8.2% 감소하였다. 손상 입원율은 2017년 2,365명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20년 이후 감소폭이 두드러지며 1천명대로 낮아졌다. 성별로 보면, 남자 손상 입원율은 1,954명, 여자 손상 입원율은 1,742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9.7%, 6.5% 감소하였다. 남자 손상 입원율은 여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남녀 손상 입원율 비는 2011년 1.4배에서 2021년 1.1배로 격차가 많이 감소하였다.
- 연령이 높아질수록 손상 입원율도 증가하는데, 75세이상의 손상 입원율은 10만명당 5,882명으로 0~14세(563명)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손상 입원일 수 역시 증가하여, 75세 이상의 손상 입원일 수(17.3일)은 0~14세(6.4일)보다 2.7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손상 입원의 원인으로는 낙상(47.2%), 운수사고(23.3%), 부딪힘(10.9%) 순으로 많았다.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손상 입원율, 2011~2021)
(단위: 명/1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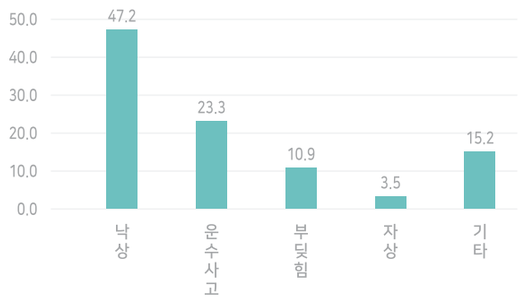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연령별 손상 입원율과 평균 입원일 수(2021)
(단위: 명/10만명, 일)



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손상 입원의 주요 원인(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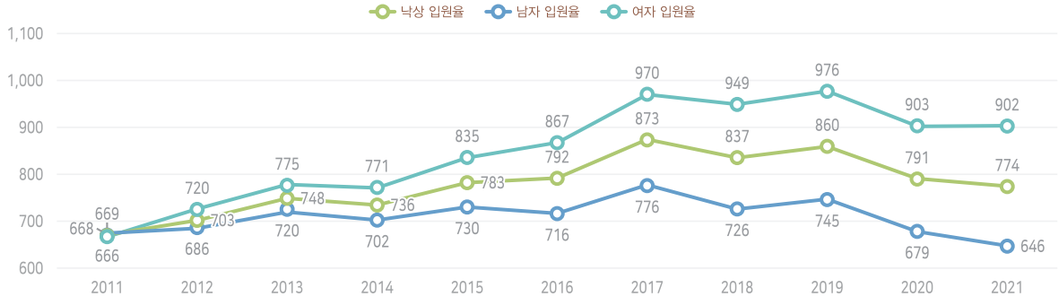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낙상 입원율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추락 및 낙상사고에 의한 손상 입원 환자 수
측정방법 (추락 및 낙상 사고에 의한 손상 입원 환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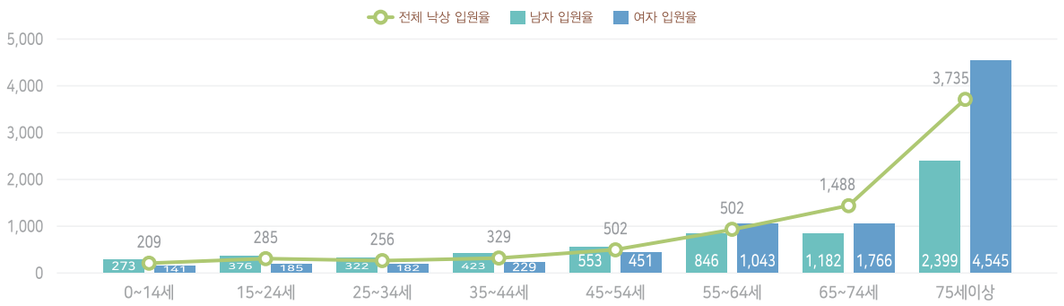
- 2021년 낙상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774명으로 전년(791명)대비 2.1% 감소하였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낙상 입원율은 점차 증가하여 2017년 873명까지 이르렀으나, 2020년부터는 700명대로 낮아지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성별로 살펴보면 2021년 여자 낙상입원율(902명)은 전년(903명)과 비슷한 수준이나, 남자 입원율(646명)은 전년(679명)대비 4.9% 감소하여 전체 낙상 입원율 감소를 견인하였다. 2011년 남녀의 낙상 입원율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격차가 점차 벌어져 2021년 현재 여자 낙상 입원율은 남자보다 1.4배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낙상 입원율도 높아진다. 54세 이하 연령구간에서는 남자 낙상 입원율이 여자보다 높으나, 55세 이상에서는 역전된다. 특히 75세이상 낙상 입원율은 여자(4,545명)가 남자(2,399명)보다 약 1.9배 높다.

낙상 입원율(2011~2021)
(단위: 명/10만명)



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성별 연령별 낙상 입원율(2021)
(단위: 명/1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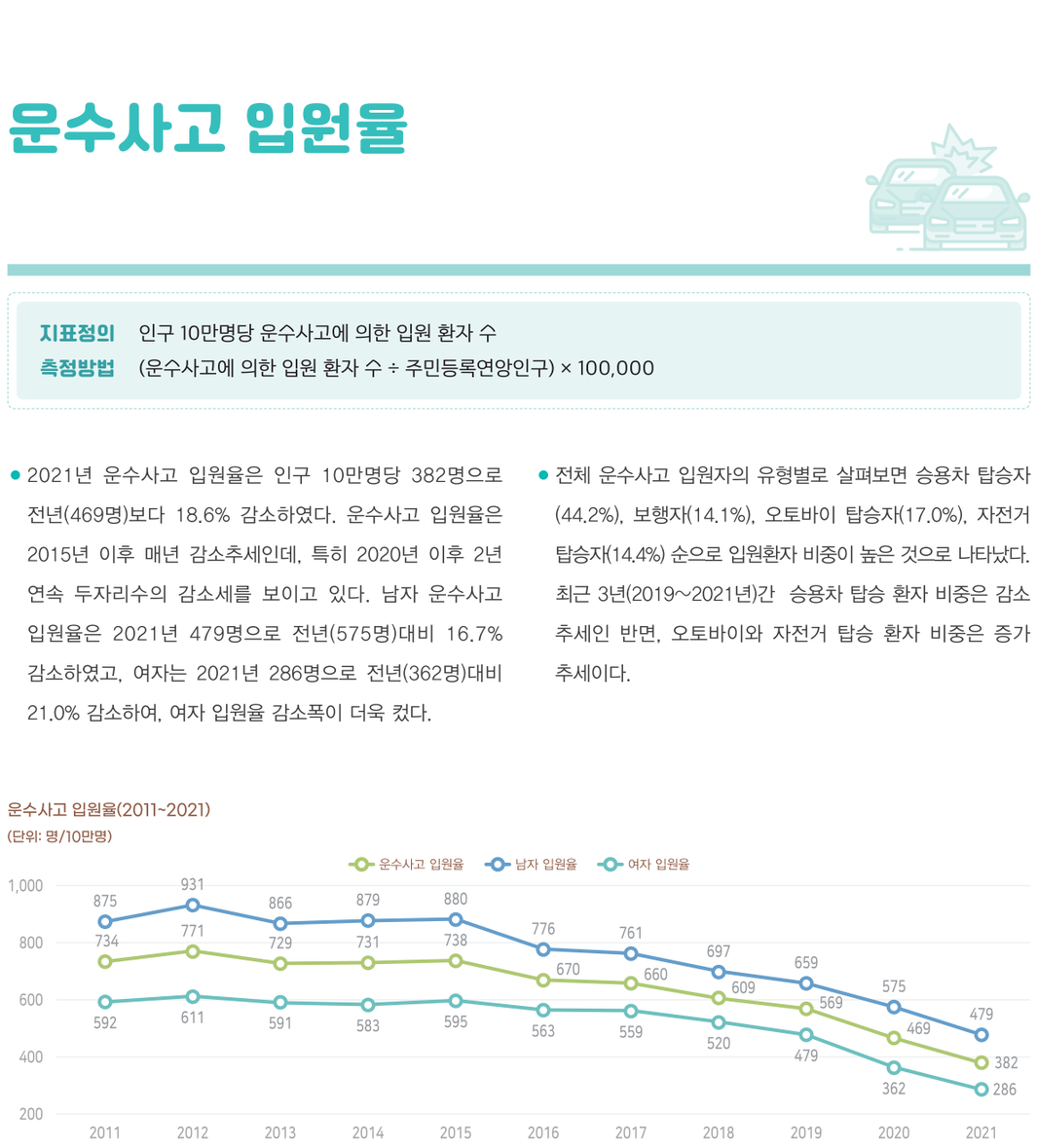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운수사고 입원율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운수사고에 의한 입원 환자 수
측정방법 (운수사고에 의한 입원 환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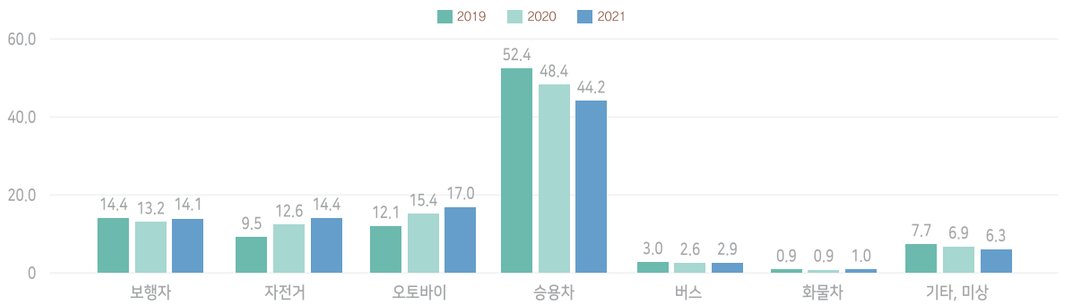
- 2021년 운수사고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382명으로 전년(469명)보다 18.6% 감소하였다. 운수사고 입원율은 2015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인데, 특히 2020년 이후 2년 연속 두자리수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남자 운수사고 입원율은 2021년 479명으로 전년(575명)대비 16.7% 감소하였고, 여자는 2021년 286명으로 전년(362명)대비 21.0% 감소하여, 여자 입원율 감소폭이 더욱 컸다.
- 전체 운수사고 입원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승용차 탑승자(44.2%), 보행자(14.1%), 오토바이 탑승자(17.0%), 자전거 탑승자(14.4%) 순으로 입원환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승용차 탑승 환자 비중은 감소추세인 반면, 오토바이와 자전거 탑승 환자 비중은 증가추세이다.

운수사고 입원율(2011~2021)
(단위: 명/10만명)



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운수사고 유형별 입원환자 비율(2019~2021)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자연재난 인명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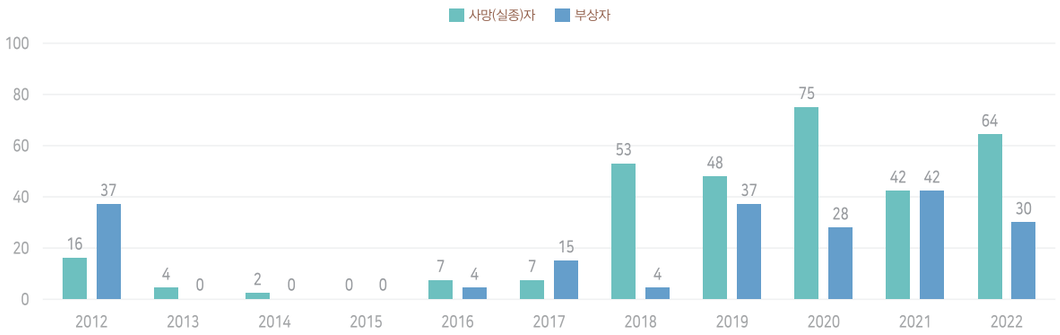
지표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 포함) 및 부상자 수

측정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한 각년도 사망자(실종자 포함) 및 부상자 수

- 2022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 포함)는 총 64명으로, 전년(42명)대비 52.4% 증가하였다. 원인별로는 폭염 34명, 호우 19명, 태풍 11명 순으로 사망(실종)자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폭염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이재민은 약 57천명으로 지난 10년내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하였다.
- 2022년에는 중부지방에 집중된 장맛비와 8월 집중호우 등 이상강수 현상과 함께, '힌남노' 등 5개 태풍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그 피해가 매우 컸다. 폭염의 경우,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10.6일로 전년(11.8일)대비 1.2일 감소함에 따라 폭염 사망자도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난 인명피해(2012~2022)

(단위: 명)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주: 2018년부터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포함

자연재난 원인별 사망(실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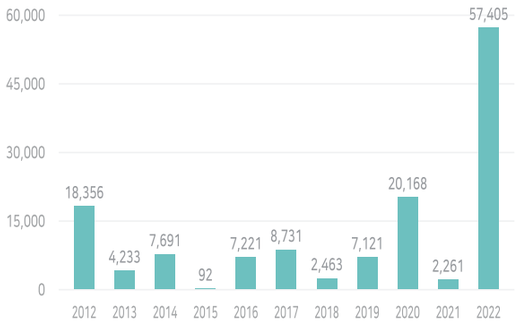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태풍	14	–	–	–	6	–	2	18	2	–	11
호우	2	4	2	–	1	7	2	–	44	3	19
태풍 호우	–	–	–	–	–	–	1	–	–	–	–
폭염	미산정						48	30	29	39	34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자연재난 이재민 수(2012~2022)

(단위: 명)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자연재난 피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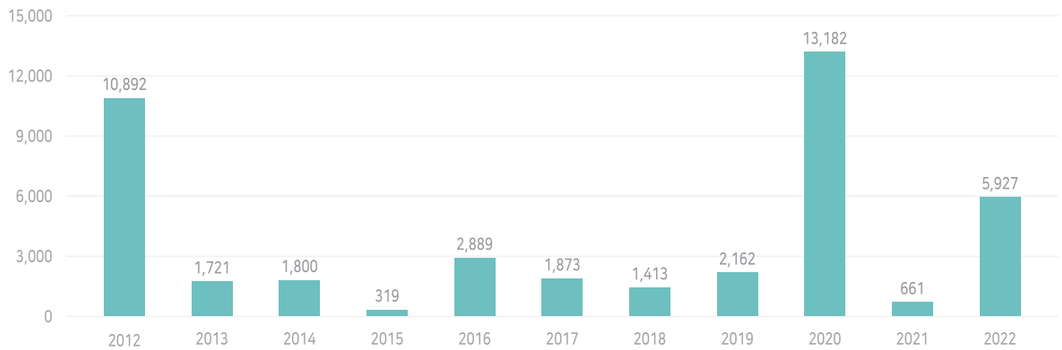
지표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

측정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등에서 발생한 각년도 피해액

- 2022년 자연재난 피해액은 5,927억원으로 전년(661억원) 대비 약 9배(796.7%) 증가하였다.
- 피해 원인별로 살펴보면 호우 피해 3,326억원(56.1%), 태풍 피해 2,440억원(41.2%), 대설 피해 154억원(2.6%), 기타 6억원(0.1%) 순으로 발생하였다. 피해 종목별로는 공공시설 4,706억원(79.4%), 건물 727억원(5.9%), 사유시설 248억원(4.2%), 농경지 243억원(4.1%) 순으로 많은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많은 피해로 인하여 2022년에는 총 3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었다. 이는 전년(2건)보다 1건 많은 것으로서, 8월 집중호우 1건, 9월 태풍(힌남노) 1건, 12월 대설 · 한파 · 강풍 1건이 각각 선포되었다.

자연재난 피해액(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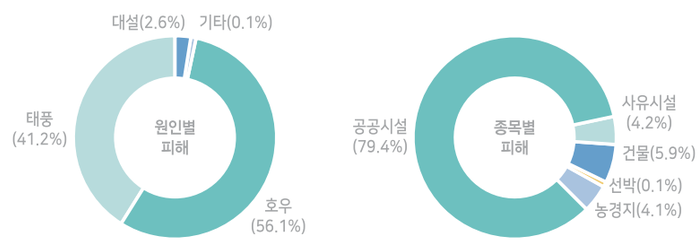
(단위: 억원)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자연재난 원인별·종목별 피해액 구성비(2022)

(단위: %)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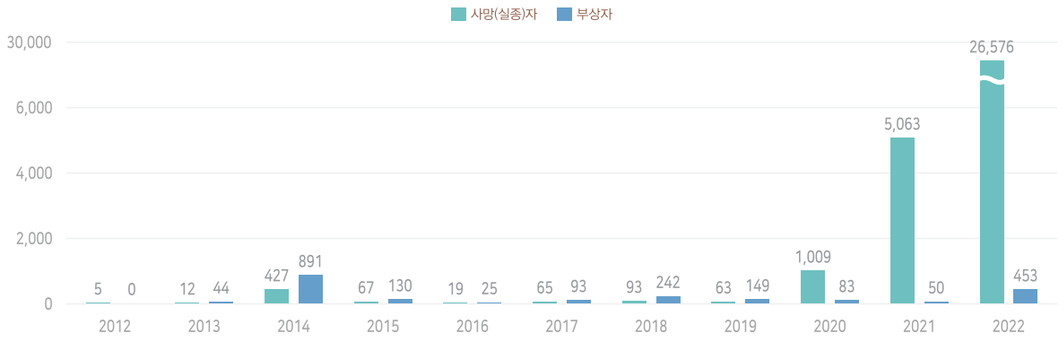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 ·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사회재난 인명피해

지표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 수
측정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한 각년도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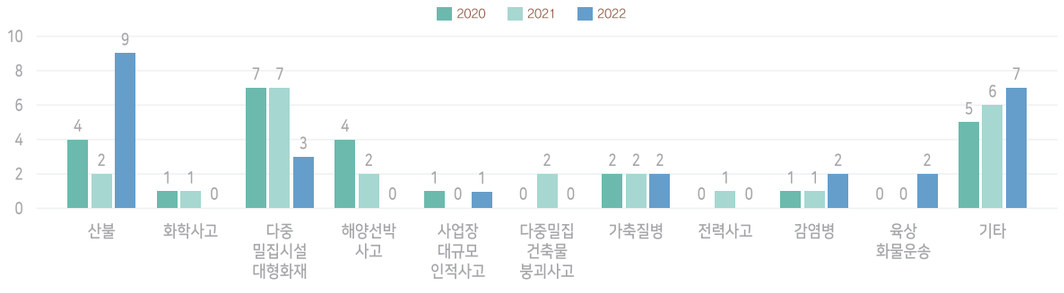
- 2022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총 26,576명으로 전년(5,063명)대비 424.9% 증가하였고, 부상자는 453명으로 전년(50명)대비 806.0% 증가하였다. 2022년 사회재난 인명피해가 전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것은, 2021년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면서 감염병 사망자(26,373명)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태원 참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사망자 159명, 부상자 334명)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 2022년 발생한 사회재난은 총 26건으로 전년(24건)대비 2건(8.3%)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산불재난(9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3건), 감염병(2건) 가축질병(2건)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사회재난 인명피해(2012~2022)
(단위: 명)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사회재난 유형별 발생건수(2020~2022)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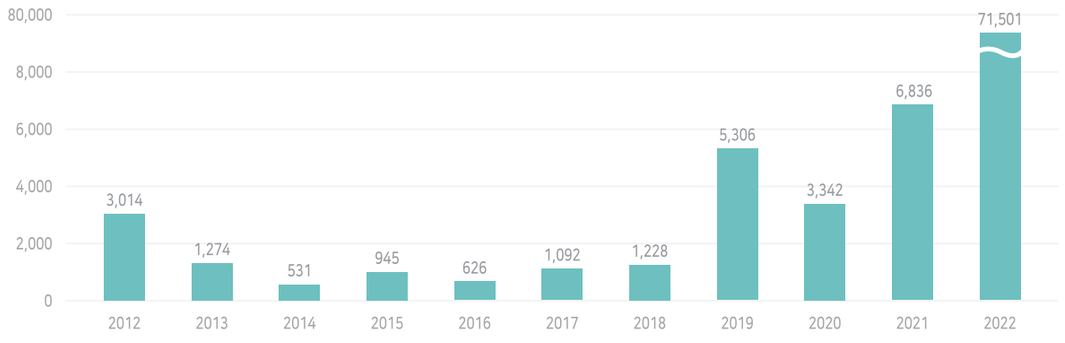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주: 2022년 가축질병(2건)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병(2건)은 코로나19 및 엠폭스, 기타(7건)는 평택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1.5), 여수산단 폭발사고(2.11), 대만 예인선 침몰사고(4.8), 인천 귤현동 다세대주택 화재(8.28), 이태원 참사(10.29), 대구 동인동 주택화재(11.23) 및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12.29)가 해당됨

사회재난 피해액

지표정의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액
측정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각년도 피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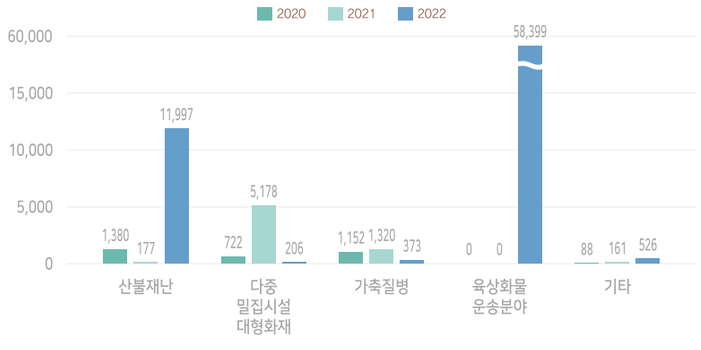
- 2022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71,501억원으로, 2021년(6,836억원)대비 피해 규모가 10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육상화물운송분야 58,399억원, 산불 11,997억원, 가축질병 373억원 순으로 피해액이 많이 발생하였다. 육상화물운송분야는 6월과 11월 총 2건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약 58,39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산불은 총 9건으로 피해면적 약 22,168ha, 약 11,99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가축질병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하여 닭 · 오리 580만수와 돼지 34,788두 매몰 등 37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회재난 피해액(2012~2022)
(단위: 억원)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사회재난 유형별 피해액(2020~2022)
(단위: 억원)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사회재난'은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산업재해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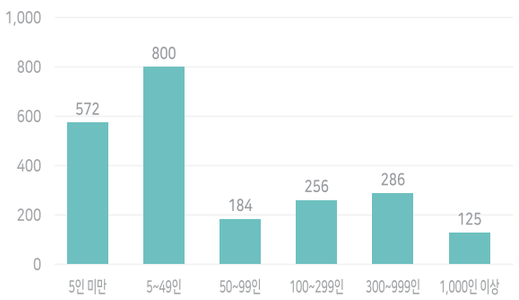
지표정의 산업재해 적용 대상 근로자 1만명당 업무와 관련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업무와 관련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 수 ÷ 산업재해 적용 대상 근로자 수) ×10,000

- 산업재해 사망률(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사망자 수를 의미하며, 이때 사망자 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고사망자는 제외한다.
- 2022년 산업재해 사망률은 근로자 1만명당 1.10명으로 전년(1.07명)보다 0.03명(2.8%) 증가하였다. 산업재해 사망률은 2018년 1.12명에서 2021년 1.07명까지 감소하였으나, 2022년 다시 1.10명대로 증가하였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2년 2,223명으로 전년(2,080명)보다 143명(6.9%) 증가하였는데,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자 수가 1,372명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하여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 질병을 제외한 업무상 사고사망 만인율은 2022년 0.43명으로 전년(0.43명)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률과 사망자 수(2012~2022)
(단위: 명/근로자만명,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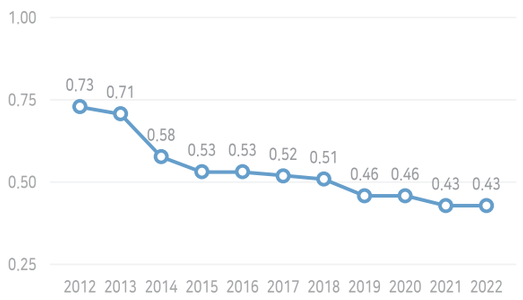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 수(2022)
(단위: 명)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사고사망 만인율(2012~2022)
(단위: 명/근로자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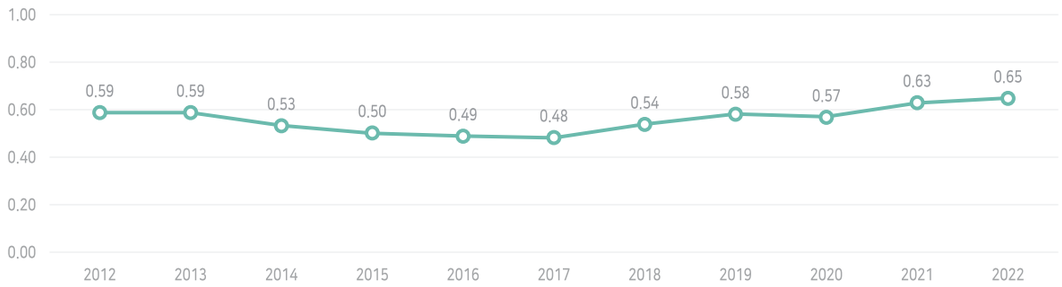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산업재해율

지표정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100명 당 재해자 수
측정방법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또는 질병이환자 수) ÷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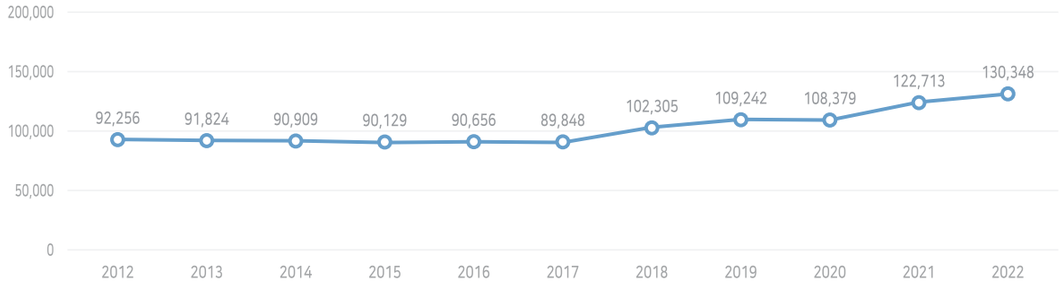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수를 의미하는 산업재해율은 2022년 0.65%로서 전년(0.63%)보다 0.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율은 과거 1990년 1.7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0.48%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재해자 수는 2022년 130,348명으로 전년(122,713명)보다 7,635명(6.2%) 증가하였다.

산업재해율(2012~2022)
(단위: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주: 산업재해율=(재해자 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 100

재해자 수(2012~2022)
(단위: 명)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주: 재해자 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질병이환자를 합한 수

산업재해 통계 작성대상 재해

각년도 1~12월까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이 승인된 재해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 미보고 적발 사망재해 포함)

보이스피싱 피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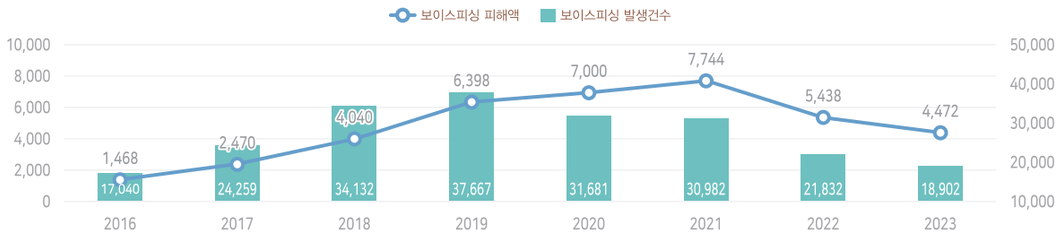
지표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수법으로 정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측정방법 보이스피싱 기관사칭형 및 대출사기형 피해금액 합(기관사칭형은 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재산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발생한 금액, 대출사기형은 금융회사를 빙자한 사기범이 정책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며 대출심사 명목의 개인정보 및 선납금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 권유,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을 통한 대출빙자형 사기 등 피해자로부터 편취 후 잠적하여 발생한 금액을 의미)

- 매년 보이스피싱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2021년 12월 민 · 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발족하여 범죄수사에 강력 대응하는 한편,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72억원으로 전년(5,438억원)대비 966억원(17.8%) 감소하여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이스피싱 발생건수(18,902건) 역시 전년(21,832건)대비 13.4% 감소하여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 피해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3년은 20대(47.0%), 50대(16.7%), 40대(12.3%) 순으로 많아 이전과 달리 20대 이하에서 피싱범죄 노출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감소 추세이나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 · 변종 피싱 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피해액과 발생건수(2016~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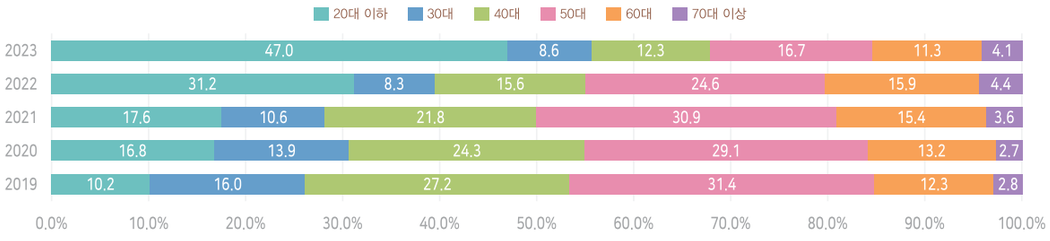
(단위: 억원, 건)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주: 2023년 자료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4.2.7.)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별 구성비(2019~2023)

(단위: %)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주: 2023년 자료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4.2.7.)

법정감염병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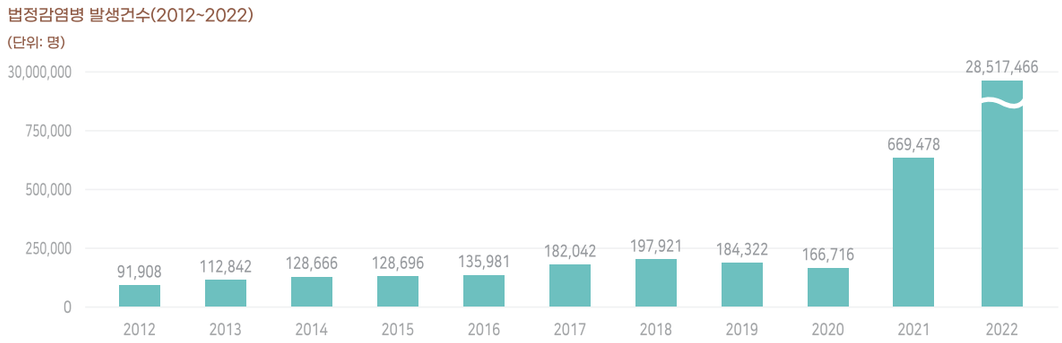
지표정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감염병 환자 수

측정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군의관 등이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였을 때 신고한 감염병 발생 신고서 내용을 기초로 1년간 발생한 환자 수

- 우리나라 법정감염병은 치명률 등 질병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1~4급으로 분류하며, 1~3급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전수 감시하고 그 외는 표본감시하고 있다. 2022년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66종 중 40종의 감염병이 신고되었고, 26종은 신고건이 없었다. 2022년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수는 총 28,517천명으로 전년(669천명)대비 약 43배 규모로 폭증하였다. 이는 전년에 이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대유행하면서 28,425천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 법정감염병 급별로 살펴보면 2021년은 1급 환자가, 2022년은 2급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당초 1급으로 지정되었던 코로나19가 점차 치명률 등 질병위험도가 하락함에 따라 2022년에 2급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이다.(2023년 8월,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으로 더욱 하향 조정되었다.) 한편, 코로나19를 제외한 법정감염병 환자 수는 총 92,831명으로 전년(99,406명)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다.

법정감염병 발생건수(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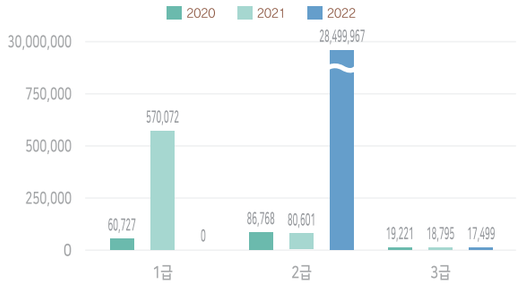
(단위: 명)



출처: 질병관리청 「감염병 감시연보」

법정감염병 급별 환자 수(2020~2022)

(단위: 명)



출처: 질병관리청 「감염병 감시연보」

코로나19 제외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단위: 명, (명/10만명))

	2021년	2022년
전 체	669,478 (1,294)	28,517,466 (55,332)
코로나19 제외	99,406 (192)	92,831 (180)

( ) 괄호 안은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출처: 질병관리청 「감염병 감시연보」

식중독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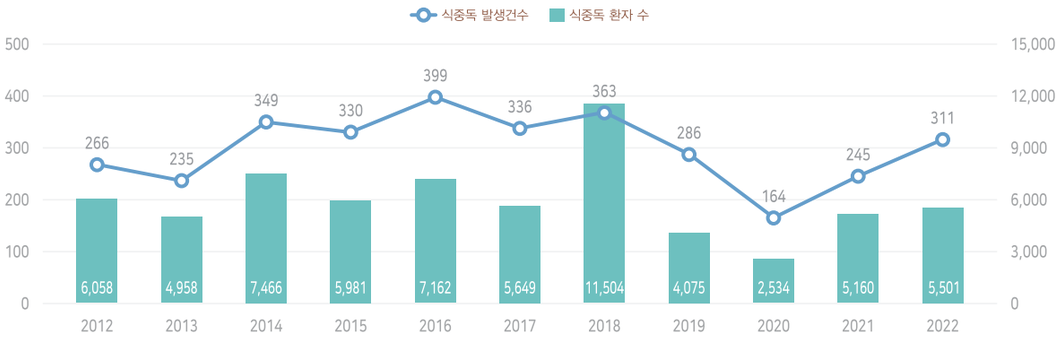
지표정의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라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 신고건수

측정방법 동일한 식품 섭취로 인하여 2명 이상에서 유사한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이 집단발생한 신고건수

- 2022년 식중독 발생건수는 311건으로 전년(245건)보다 26.9% 증가하였으며, 식중독 환자는 5,501명으로 전년(5,160명)보다 6.6% 증가하였다. 장소별 발생건수를 보면, 식품접객업체에서 180건(57.9%)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집단급식소가 69건(22.2%)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다. 식중독 환자 수는 식품접객업체 2,117명(38.5%), 집단급식소 2,005명(36.4%)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식중독 발생건수 및 환자 수(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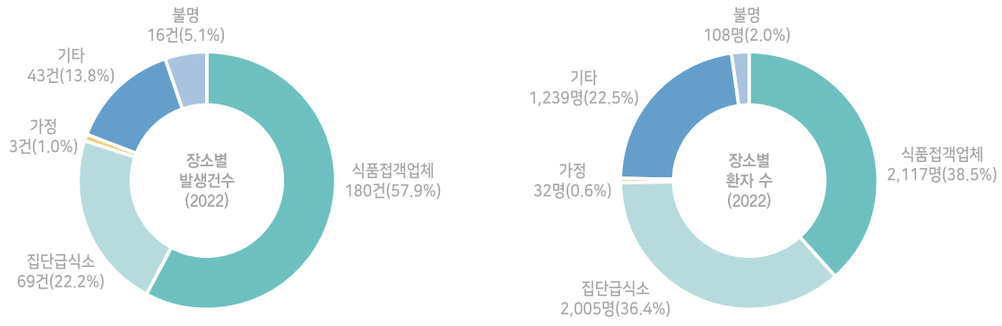
(단위: 건, 명)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장소별 식중독 발생현황(2022)

(단위: 건, 명,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온열질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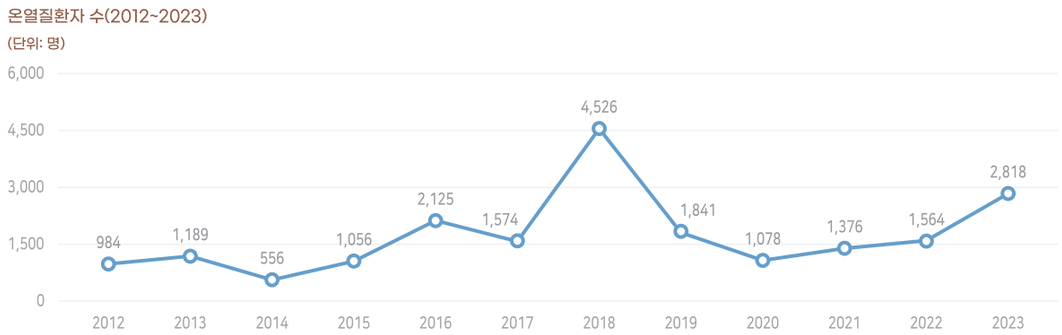
지표정의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수

측정방법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기간 내 해당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2023년('23.5.20~9.30)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으로 전년(1,564명) 대비 80.2% 증가하였는데, 최근 10년 중 2018년(4,526명)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해였다. 성별로는 남자(77.8%)가, 연령별로는 50대(21.3%) 비율이 높고, 장소별로는 실외작업장(32.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온열질환자 수(2012~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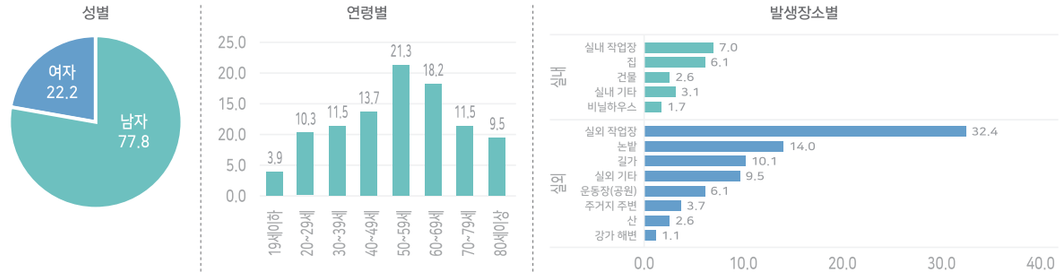
(단위: 명)



출처: 질병관리청,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성별·연령별·장소별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2023)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매년 여름철 전국 약 500여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여 발생특성 정보를 일별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조기에 인지하고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다. 단, 속보성 표본조사에 의한 자료이므로 공식적인 폭염 피해 사망자 수는 익년도에 공표되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른다.

PART 3
부 록

1. OECD 국제비교 82
2. 안전지표 자료출처 89
3. 참고문헌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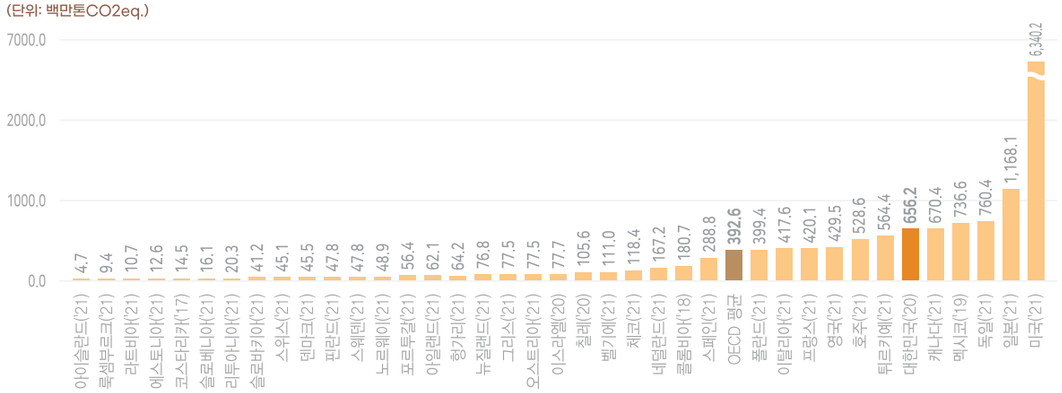
1. OECD 국제비교

온실가스 총 배출량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656백만톤CO2eq.으로 OECD 38개국 중 6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다. 가장 많은 양을 배출한 국가는 미국(6,340백만톤CO2eq.)으로 두 번째로 높은 일본(1,168백만톤CO2eq.)보다도 5배이상 많은 양이다.

OECD 국가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단위: 백만톤CO2eq.)



출처: OECD, 「OECD Stat.」 2023.12월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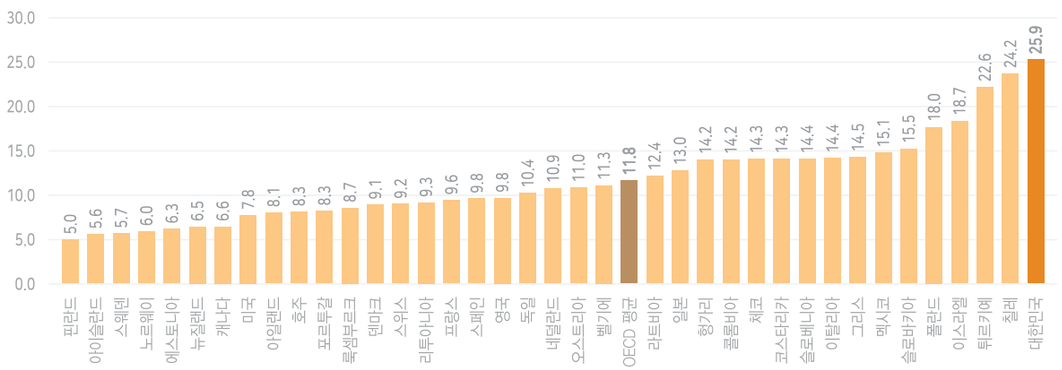
주: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음

미세먼지(PM2.5) 농도

OECD에서 위성관측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2020년 국가별 미세먼지(PM2.5) 농도를 보면, 한국은 25.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한국을 제외하고 20㎍/㎥ 이상인 국가는 칠레와 튀르키예뿐이며, 한국과 인접한 일본의 미세먼지 농도도 13.0㎍/㎥로 한국의 절반수준이다.

OECD 국가별 미세먼지(PM2.5) 농도(2020)

(단위: ㎍/㎥)



출처: OECD, 「OECD Stat.」 2023.12월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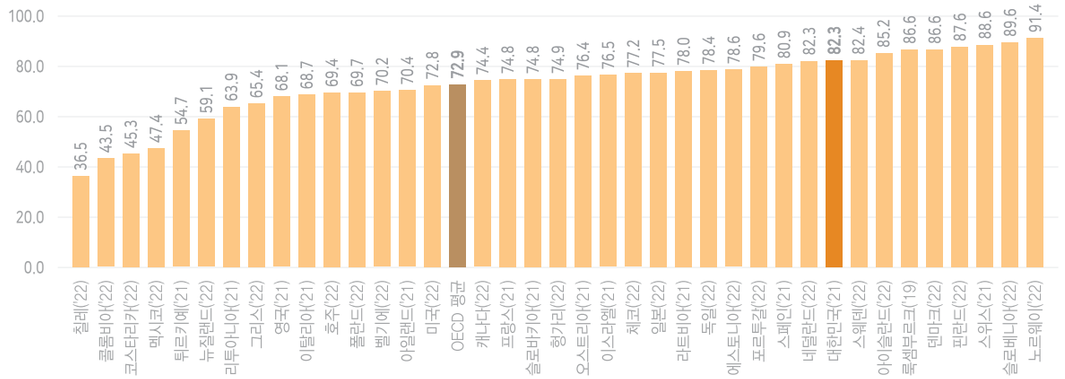
주: 국가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위성관측 자료와 화학수송모형(chemical transport model)을 이용한 추정치임

야간보행 안전도

한국의 야간보행 안전도는 2021년 82.3%로 OECD 평균(72.9%)보다 높으며, 38개국 중 9번째로 높아 비교적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OECD 국가별 야간보행 안전도

(단위: %)



출처: OECD, 「OECD Stat.」, 2023.12월 인출

주1: OECD How's wellbeing 자료로 15세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통계청 사회조사(13세이상) 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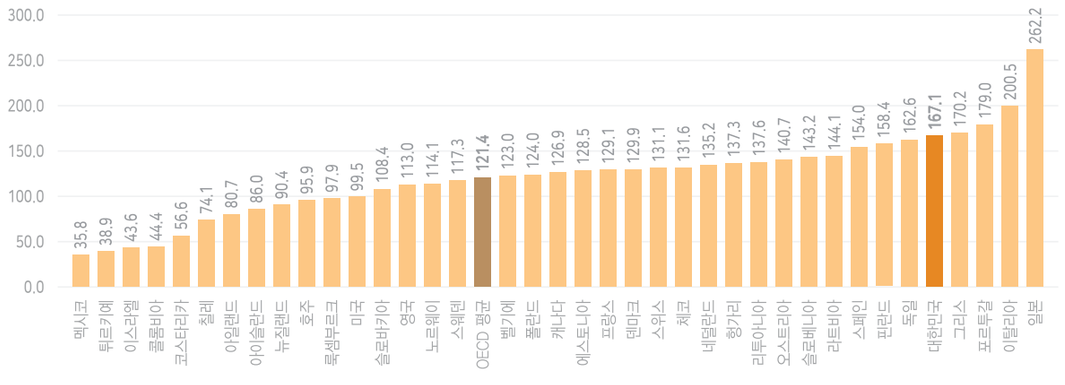
주2: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음

노령화지수

한국의 노령화지수는 2023년 167.1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다. 일본(252.6), 이탈리아(195.5)는 한국보다 높고, 프랑스(123.6), 영국(111.7), 미국(99.8)은 한국보다 낮다.

OECD 국가별 노령화지수(2023년)

(단위: 명/유소년인구 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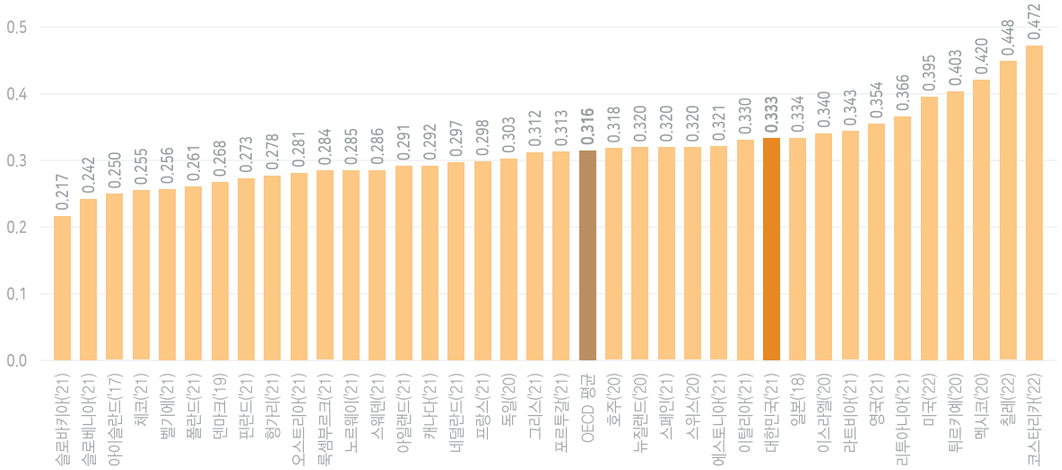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제통계연감2023(UN「https://population.un.org/wpp,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3.12월 인출

주: 노령화지수 = 노인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지니계수

한국의 지니계수는 2021년 0.333로 OECD 회원국 중 열한 번째 수준으로 OECD 평균(0.316)보다 다소 높다. 미국(0.395), 영국(0.354), 일본(0.334) 등은 한국보다 높고, 독일(0.303), 프랑스(0.298) 등은 한국보다 낮다.

OECD 국가별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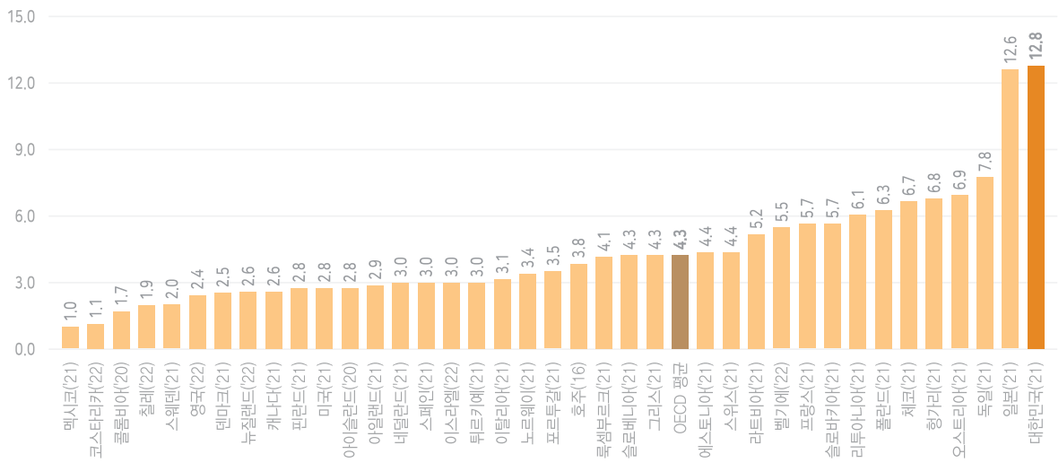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Stat.」 2023.12월 인출
주: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으며, 네덜란드와 미국은 잠정치임

총 병원 병상 수

한국의 총 병원 병상 수(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천명당 12.8개로, 일본(12.6개)과 근소한 차이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으며 OECD 평균(4.3개) 보다 약 3배 많은 수준이다.

OECD 국가별 총 병원 병상 수

(단위: 개/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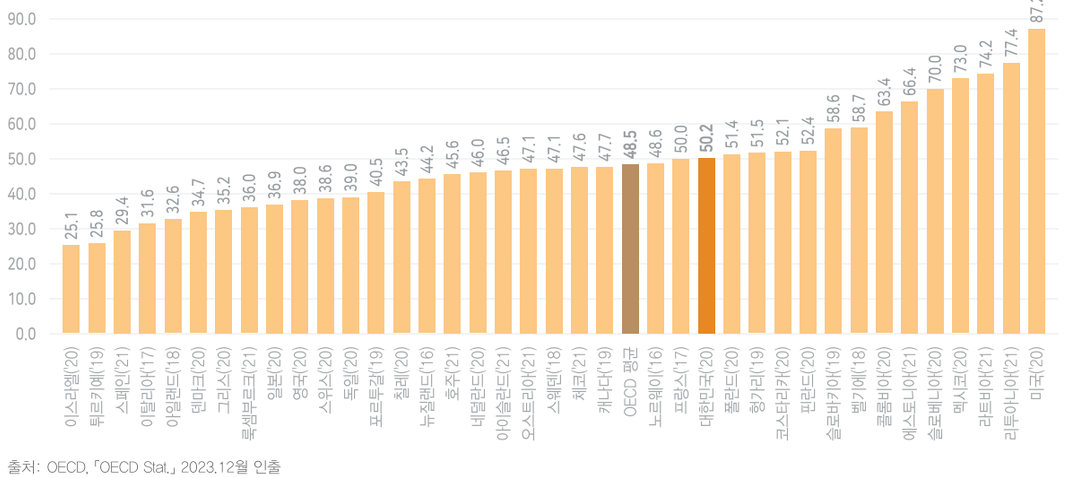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Stat.」 2023.12월 인출
주: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으며,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잠정치임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

한국의 질병이외의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은 2020년 인구 10만명당 50.2명으로 OECD 국가 평균(48.5명)보다도 다소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OECD 38개 국가 중 14위권으로, 2019년(52.8명)보다는 손상사망 위험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OECD 국가별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

(단위: 명/1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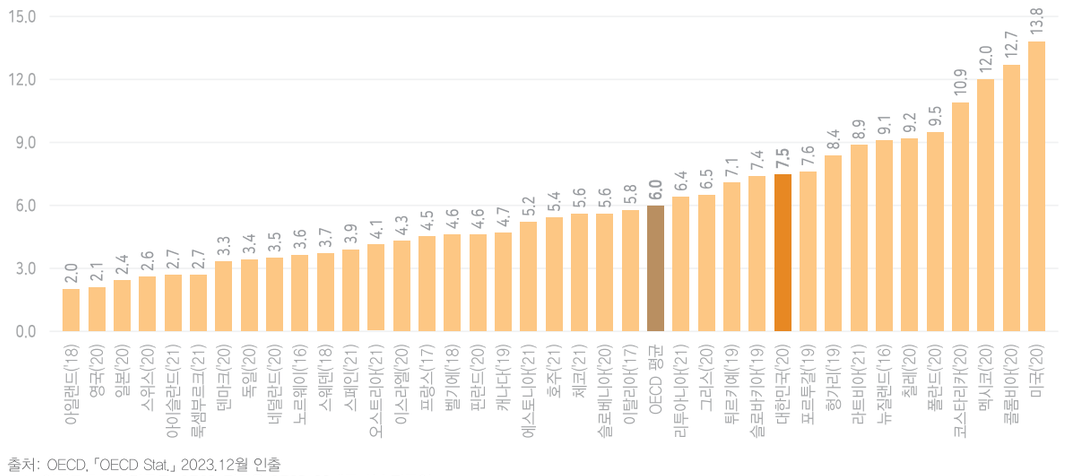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Stat.」 2023.12월 인출
주1: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OECD 평균은 OECD 38개국 산술평균임
주2: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음

운수사고 사망률

한국의 운수사고 사망률은 2020년 인구 10만명당 7.5명으로 OECD 평균(6.0명)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미국(13.8명)은 한국보다 높고, 영국(2.1명), 일본(2.4명), 독일(3.4명), 프랑스(4.5명) 등은 한국보다 낮다.

OECD 국가별 운수사고 사망률

(단위: 명/1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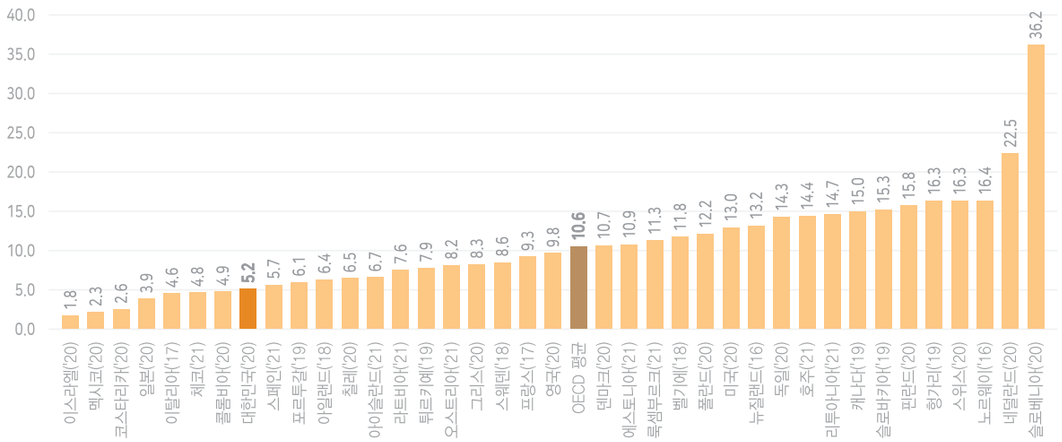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Stat.」 2023.12월 인출
주1: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OECD 평균은 OECD 38개국 산술평균임
주2: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음

낙상 사망률

한국의 낙상 사망률은 2020년 인구 10만명당 5.2명으로 OECD 평균 낙상 사망률(10.6명)의 절반 수준으로 낮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독일(14.3명), 미국(13.0명), 영국(9.8명), 프랑스(9.3명)는 한국보다 높고, 일본(3.9명)은 한국보다 낮다.

OECD 국가별 낙상 사망률

(단위: 명/1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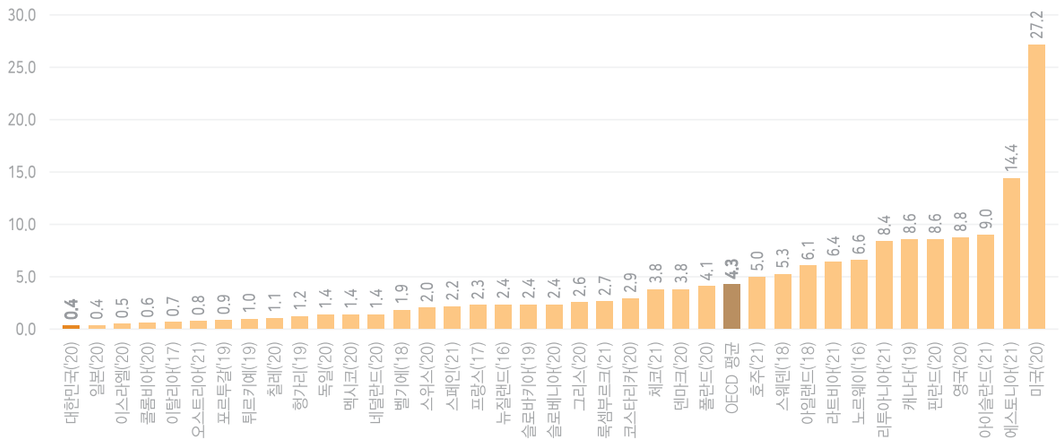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Stat.」 2023.12월 인출
주1: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OECD 평균은 OECD 38개국 산술평균임
주2: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음

중독 사망률

한국의 중독 사망률은 2020년 인구 10만명당 0.4명으로 OECD 38개 국가 중 일본(0.4명)과 함께 가장 낮다.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27.2명)으로 두 번째로 중독 사망률이 높은 에스토니아(14.4명)와도 차이가 크다.

OECD 국가별 중독 사망률

(단위: 명/1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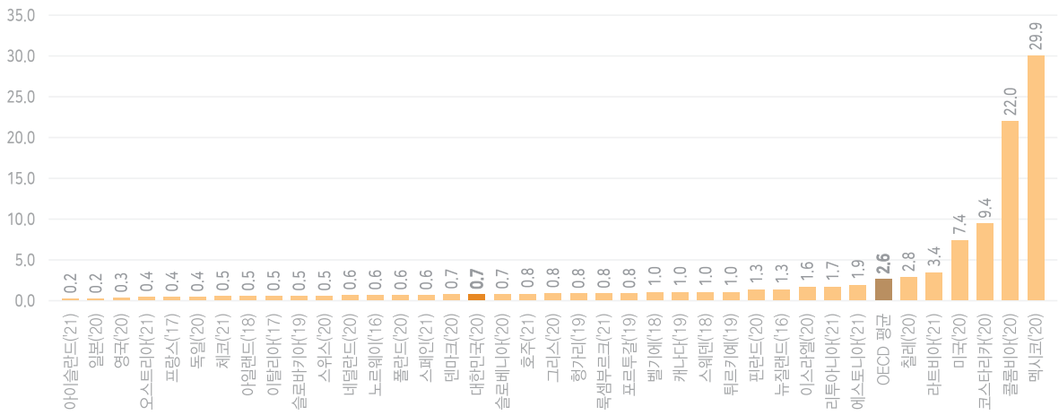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Stat.」 2023.12월 인출
주1: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OECD 평균은 OECD 38개국 산술평균임
주2: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음

가해에 의한 사망률

한국의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2020년 인구 10만명당 0.7명으로 OECD 38개 국가 중 덴마크, 슬로베니아와 함께 21위권이다. OECD 38개 국가 평균사망률은 2.6명으로 사망률이 2.0명 이상인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하나, 멕시코(29.9명), 콜롬비아(22.0명), 코스타리카(9.4명), 미국(7.4명) 등의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OECD 국가별 가해에 의한 사망률

(단위: 명/1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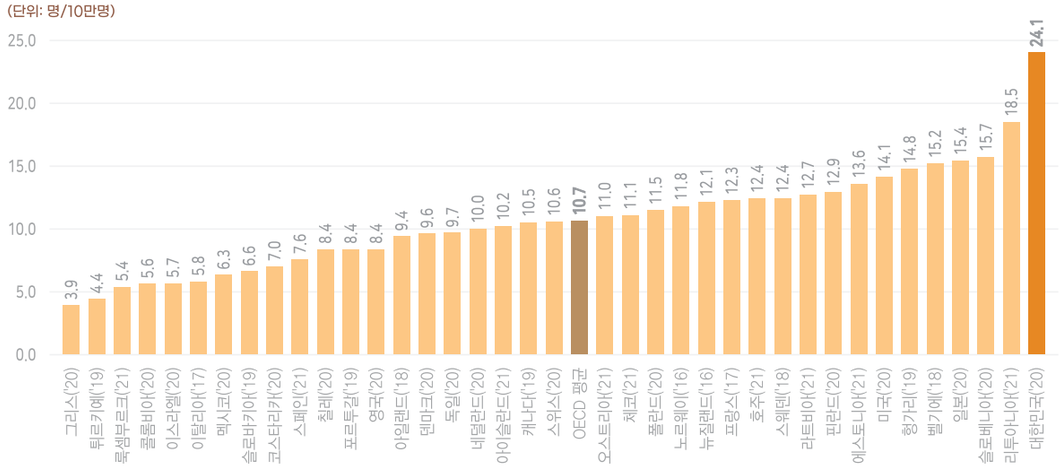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Stat.」 2023.12월 인출
주1: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OECD 평균은 OECD 38개국 산술평균임
주2: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음

자살률

한국의 자살률은 2020년 인구 10만명당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OECD 평균(10.7명)의 2배 이상 높으며,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의 18.5명(2021년)과도 차이가 크다,

OECD 국가별 자살률

(단위: 명/1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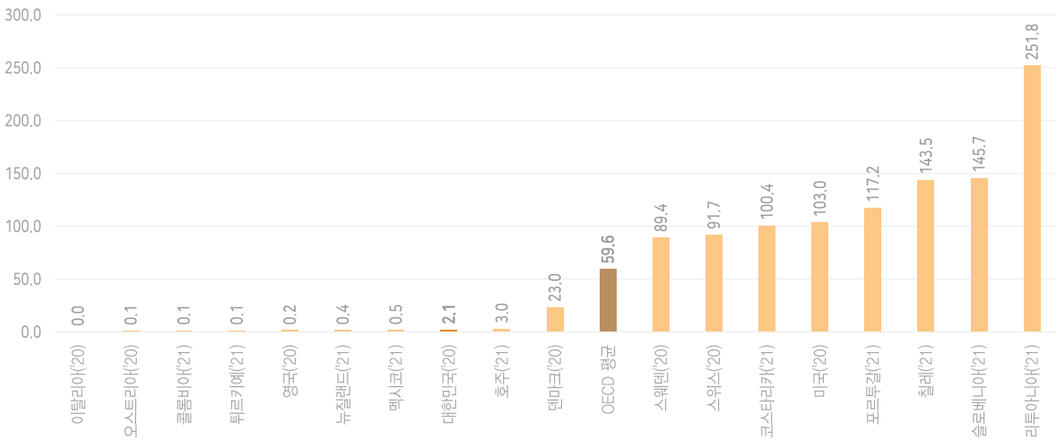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Stat.」 2023.12월 인출
주1: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OECD 평균은 OECD 38개국 산술평균임
주2: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음

재난사고 사망률

한국의 2020년 재난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1명으로, 2020년 이후 자료를 제공한 OECD 회원국(18개국) 중 여덟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OECD 재난사고 사망률

(단위: 명/1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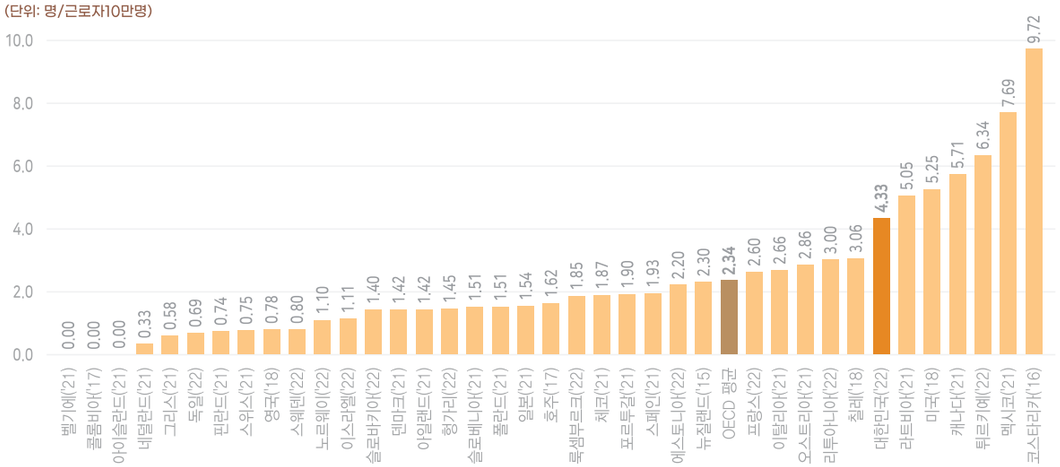
출처: UNISDR, SDGs Indicator 11.5.1, 2023.12월 인출
주1: SDGs Indicator 11.5.1.은 인구 10만명당 재난(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로 실종자를 포함함
주2: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음

산업재해 치명률

한국의 산업재해 치명률은 2022년 근로자 10만명당 4.33명이다. 산업재해 통계 작성 기준이 국가별로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라 볼 수 있다.

OECD 국가별 산업재해 치명률(근로자 10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사망자수)

(단위: 명/근로자10만명)



출처: 국제노동기구ILO, 「ILO Stat.」 2023.12월 인출
주1: 산업재해 치명률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산업재해자 수를 의미함
주2: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으며, 국가별로 산업재해 사망통계 작성 기준이 상이한 점에 유의

2. 안전지표 자료출처

범죄발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
측정방법	(형법범죄 발생건수 ÷ 총인구) × 100,000
자료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작성주기	1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지표정의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불법콘텐츠범죄로 구분됨
측정방법	경찰청에서 집계한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및 불법콘텐츠범죄 발생건수의 합
자료출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통계」
작성주기	1년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

지표정의	인터넷 이용자 중 사이버 침해사고를 경험한 비율
측정방법	인터넷 이용자(만12~69세) 중 해킹, 악성코드 감염, 피싱,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를 경험한 비율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실태조사」
작성주기	1년

성폭력 발생건수

지표정의	연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측정방법	각년도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형사입건한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자료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작성주기	1년

화재 건수

지표정의	연간 전국 화재사고 발생건수
측정방법	연간(1.1~12.31.) 전국 소방서 관할에서 발생하는 건축물화재, 차량, 선박, 항공기화재, 옥외화재 등 모든 화재
자료출처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작성주기	1년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지표정의	인구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누적 자동차 등록대수 ÷ 총인구(주민등록인구)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작성주기	1년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정의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한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 총량

측정방법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계

자료출처 환경부, 「국가온실가스통계」

작성주기 1년

위험기상일수

지표정의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가 평년값대비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이상기후를 보인 강풍, 폭염, 한파, 호우 일수

측정방법 폭염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일수, 한파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일수, 호우는 시간당 강우량이 30mm 이상인 일수, 강풍은 최대풍속이 14m/s 이상인 일수

자료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종합기후변화감시정보」

작성주기 1년

미세먼지(PM2.5) 농도

지표정의 연간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지름 2.5㎛ 이하의 먼지)의 평균 농도

측정방법 17개 시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인구 가중한 평균값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작성주기 1년

대기 중 오존 오염도

지표정의 연간 대기 중 오존(O_3)의 평균 농도

측정방법 자외선광도법(U.V Photometric Method)으로 측정된 연간 평균 오존(O_3) 농도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작성주기 1년

1인당 일평균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지표정의 1인당 하루평균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

측정방법 연간 생활계 폐기물(생활폐기물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량 ÷ 총인구(장래추계인구) ÷ 365

자료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작성주기 1년

체내 환경유해물질(중금속) 노출 수준

지표정의 우리나라 국민의 체내 환경오염물질(납, 수은, 카드뮴) 노출 수준

측정방법 성인 기준 혈액 및 소변 검사에 의한 납, 수은, 카드뮴 농도의 기하평균값

자료출처 환경부,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작성주기 3년

야간보행 안전도

지표정의 야간보행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방법 야간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에 대해 '매우 안전' 또는 '비교적 안전'이라고 응답한 비율

자료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작성주기 2년

사회안전 인식도

지표정의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

측정방법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자료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작성주기 2년

등록장애인 수

지표정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 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장애인등록 인구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작성주기 1년

노령화지수

지표정의 유소년(0~14세) 인구 100명당 노인(65세 이상) 인구

측정방법 (노인(65세 이상) 인구 ÷ 유소년(0~14세) 인구) × 100

자료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작성주기 1년

독거노인 비율

지표정의 65세 이상 추계인구 중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

측정방법 (65세 이상 1인 가구수 ÷ 65세 이상 인구) × 100

자료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장래가구추계」

작성주기 1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

지표정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장기체류 외국인과 단기체류 외국인 수의 합

자료출처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작성주기 1년

지니계수

지표정의 0~1사이의 값을 가지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

측정방법 X축에 인구를 소득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누적비율로 표시하고 Y축에 이들의 소득누적 점유율을 표시하여 이를 대응시킨 점들의 궤적(로렌츠곡선)과 대각선(완전균등선) 사이의 면적(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삼각형 면적으로 나눔

자료출처 통계청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작성주기 1년

실업률

지표정의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

측정방법 (만 15세 이상 실업자 수 ÷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작성주기 1년

범죄피해율

지표정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집계된 지난 1년 동안의 범죄피해 발생 건수

측정방법 (범죄피해건수(추정) ÷ 당해연도 인구총조사 기준 만 14세 이상 인구수) × 100,000

자료출처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작성주기 2년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

지표정의 만 19세 이상 유배우(사실혼 포함) 응답자의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

측정방법 만 19세 이상 유배우(사실혼 포함) 응답자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하여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중 하나라도 피해를 경험한 비율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작성주기 3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지표정의 해당연령 인구 대비 아동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인구 수

측정방법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 ÷ 18세 미만 추계인구) × 100,000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작성주기 1년

우울감 경험률

지표정의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

측정방법 19세 이상 응답자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작성주기 2년

사회적 고립도

지표정의 신체적,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라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둘 중 하나라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작성주기 2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지표정의 총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측정방법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작성주기 1년

음주운전 경험률

지표정의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만 19세 이상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작성주기 1년

월간 음주율

지표정의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

측정방법 만 19세 이상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작성주기 1년

자해 및 자살 시도 건수

지표정의 연간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접수한 진료 건수

측정방법 지정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취합된 자해 및 자살 시도 환자 진료건수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백서 2023」

작성주기 1년

경찰 1인당 주민 수

지표정의 경찰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 경찰 공무원 수

자료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작성주기 1년

소방관 1인당 주민 수

지표정의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 각년도 말 기준 소방공무원 정원 수

자료출처 소방청, 「소방청 통계연보」

작성주기 1년

구조 및 구급대원 1인당 주민 수

지표정의 119 구조 및 구급대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 119 구조 및 구급대원 수

자료출처 소방청, 「소방청 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주기 1년

총 병원 병상 수

지표정의 인구 천명당 병원 병상 수

측정방법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 수 ÷ 장래추계인구) × 1,000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작성주기 1년

안전띠 착용률

지표정의 운행 중 차량 내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률

측정방법 교통관측 대상 자동차의 승차자 수 대비 안전벨트 착용 승차자 비율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실태조사」

작성주기 1년

이륜자 안전모 착용률

지표정의 이륜차 운전자 및 동승자의 규정된 안전모 착용률

측정방법 교통관측 대상 이륜차의 운전자, 동승자 안전모 착용 비율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실태조사」

작성주기 1년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지표정의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근로자 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 수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산업보험통계」

작성주기 1년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지표정의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측정방법 각년도 주택, 비닐하우스(온실), 소상공인업장의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

작성주기 1년

아동 안전교육 경험률

지표정의 최근 1년 동안 안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 비율

측정방법 만9세~17세 아동 중 최근 1년 동안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작성주기 5년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지표정의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측정방법 도시공원 조성면적(결정면적 – 미집행면적) ÷ 도시지역 인구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작성주기 1년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손상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질병 이외 사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손상 사망자 수

측정방법 (질병 이외 사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손상 사망자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작성주기 1년

운수사고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작성주기 1년

낙상(추락)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낙상 또는 추락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낙상 또는 추락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작성주기 1년

익수사고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익수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익수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작성주기 1년

가해에 의한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가해(범죄피해)에 의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가해(범죄피해)에 의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작성주기 1년

중독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유독성 물질 중독에 의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작성주기 1년

화재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화재에 의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화재 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출처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작성주기 1년

자살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작성주기 1년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손상 입원율)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질병 이외 사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손상 입원 환자 수

측정방법 (질병 이외 사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손상 입원 환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작성주기 1년

낙상 입원율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추락 및 낙상사고에 의한 손상 입원 환자 수

측정방법 (추락 및 낙상 사고에 의한 손상 입원 환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작성주기 1년

운수사고 입원율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운수사고에 의한 입원 환자 수

측정방법 (운수사고에 의한 입원 환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작성주기 1년

자연재난 인명피해

지표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 포함) 및 부상자 수

측정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한 각년도 사망자(실종자 포함) 및 부상자 수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작성주기 1년

자연재난 피해액

지표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

측정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등에서 발생한 각년도 피해액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작성주기 1년

사회재난 인명피해

지표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 수

측정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한 각년도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 수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작성주기 1년

사회재난 피해액

지표정의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액

측정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각년도 피해액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작성주기 1년

산업재해 사망률

지표정의 산업재해 적용 대상 근로자 1만명당 업무와 관련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 수

측정방법 (업무와 관련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 수 ÷ 산업재해 적용 대상 근로자 수) ×10,000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작성주기 1년

산업재해율

지표정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100명 당 재해자 수

측정방법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또는 질병이환자 수) ÷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수×100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작성주기 1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지표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수법으로 정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측정방법 보이스피싱 기관사칭형 및 대출사기형 피해금액 합(기관사칭형은 검찰 ·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재산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발생한 금액, 대출사기형은 금융회사를 빙자한 사기범이 정책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며 대출심사 명목의 개인정보 및 선납금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 권유,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을 통한 대출빙자형 사기 등 피해자로부터 편취 후 잠적하여 발생한 금액을 의미)

자료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작성주기 1년

법정감염병 발생건수

지표정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감염병 환자 수

측정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군의관 등이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였을 때 신고한 감염병 발생 신고서 내용을 기초로 1년간 발생한 환자 수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감염병 감시연보」

작성주기 1년

식중독 발생건수

지표정의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라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 신고 건수

측정방법 동일한 식품 섭취로 인하여 2명 이상에서 유사한 감염성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이 집단발생한 신고 건수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작성주기 1년

온열질환자 수

지표정의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수

측정방법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기간 내 해당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작성주기 1년

3. 참고문헌

경찰청, 2023, 경찰통계연보 2022

고용노동부, 2022, 산업재해현황분석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2022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보고서

관계부처합동, 2023,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

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 보도자료(2024.2.7.)

국토교통부,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 25,949천대, 보도자료(2024.1.19.)

근로복지공단, 2022, 2021년도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대검찰청, 2023,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3, 2023 범죄분석

법무부, 2023,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2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 2023, 보건복지통계연보 2023

보건복지부, 2023, 자살예방백서 2023

소방청, 2023, 2023 소방청 통계연보

소방청, 2023, 2023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2023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질병관리청, 2023, 2022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

질병관리청, 2023, 2023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질병관리청, 2023, 손상발생현황 INJURY FACTBOOK 2023

통계개발원, 2024, 국민 삶의 질 2023

통계개발원, 2024,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

통계개발원, 2022, 안전보고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안전지표 체계 개편 연구

통계개발원, 2019, 한국인의 안전보고서 2017

통계개발원, 2022, 한국인의 안전보고서 2021

통계개발원, 2023,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통계개발원, 2023, 한국의 사회동향 2023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22, 2022 학교안전 실태조사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2022, 전국범죄피해조사 분석보고서 2020

행정안전부, 2023, 2022 재난연감

행정안전부, 2023, 2022 재해연보

행정안전부, 2023,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

환경부, 2023, 2023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21) 보고서

환경부, 2023, 2022 대기환경연보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집 필 진 **민경아**(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조진혜(통계청 통계개발원 주무관)

발 행 2024년 4월

발 행 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 (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인 쇄 처 (주)애드코리아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Safety Report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8F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